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연구책임자 : 김 중 숙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선 행 (본원 연구원)

윤 병 옥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빈곤해지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 가족 내 성별 자원배분이나 분업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같은 가족적 요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빈곤계층이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고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전체 복지정책의 전개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빈곤 집단 중 여성비율이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도 경제활동참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경제활동을 지속해온 여성에게 빈곤화의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긴 여성은 높은 빈곤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층 뿐 아니라 향후 빈곤 가능성이 높은 여성 집단의 빈곤화를 막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노동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등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여성근로빈곤의 확산을 방지하고 여성들이 일을 통하여 빈곤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과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노력하신 연구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및 향후의 근로빈곤 확산을 방지하고 일을 통하여 빈곤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여성노동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등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임.

2.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행연구와 빈곤 및 근로빈곤정책

-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근로유무와는 상관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가장 포괄적인 정책 틀 내에서 기초보장을 추구하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도 등 노동시장 제도들을 통하여 빈곤을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외국의 근로빈곤정책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제도나 유럽의 통합정책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비 포괄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로를 통한 빈곤의 완화라고 한다면 근로와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제도에서 누락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구조적 근로빈곤완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실태와 가구사항, 빈곤결정요인

- 근로빈곤집단 중 여성의 경우 업종 및 직종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 열악성 등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며 임시 일용직 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 빈곤확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저학력일수록, 임시일용직 이거나 농림어업 종사자 일수록, 단순노무직일 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과 함께 여성빈곤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순차로짓모형의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가 전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여성의 경우 별거를 포함한 유배우의 경우에도 소득집단의 순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임. 고용형태 역시 상용직을 기준으로 볼 때 임시 및 일용직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업종별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관리자 및 사무직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특징적인 사항

- 빈곤집단이라 할지라도 취업의사가 높지 않게 나타났고, 구직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훈련 경험도 적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한 취업, 구직 등에 장애가 있는 것임.
- 구직을 원하는 집단에서 제기된 어려움으로 비빈곤 집단과 대비되는 것은 여성들이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어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들에 대한 반영,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정책 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시간제 근로가 육아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할 수는 있으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요구는 전일제 근로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근로형태로서의 시간제 근로 등은 또 다른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빈곤계층의 동태적인 변화

- 취업상태의 동태적 변화, 빈곤상태의 동태적 변화, 취업과 빈곤의 동태적 변화

등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별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찾아냄. 취업상태를 동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집단의 유형을 5개로 구분하였고 빈곤상태에 진입하고 탈퇴하는 집단을 7개의 유형으로 나눔. 빈곤변화 및 취업변화를 동시에 유형화하여 빈곤과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취업은 지속하나 빈곤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은 지속하나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과 취업을 모두 반복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취업변화유형에서는 여성들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비취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지속한 경우보다 높았고 비취업 지속이나 취업/비취업 반복 경향은 청년기부터 시작하여 출산 및 양육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40대 장년층 집단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함. 20대 후반 연령에서도 취업지속집단과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불안정한 취업지위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님.
-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우는 여성 임시직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사자가 직종으로는 판매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을 지속한 집단은 상용직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집단 비중이 높고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나타남데 반해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한 경우는 30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빈곤변화유형에서 빈곤을 지속한 집단은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하는 경향은 장년층에서 많이 볼 수 있음.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이 고령자가 많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로 빈곤으로 진입하는 계층은 자녀가 2인인 가구가 많아 중산층의 양극화나 빈곤집단 편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은 가구 내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남성 42.6만원, 여성 34.8만원 수준에 머물러 이들의 소득지원이 시급함에도 이들이 보호대상가구에 포함되거나 사회보험수급을 받은 경험은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빈곤에서의 탈출과 빈곤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및 고교재학이하 자녀의 수 등이 있었음. 연

령이 높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탈출이 어렵고 빈곤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빈곤탈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빈곤 진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혼이나 사별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팬찮은 일자리가 다수 있다고 알려진 전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등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빈곤화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음.

- 결과적으로 빈곤화하는데 있어 정형화된 유형이 없고 오히려 다양한 업종 및 직종,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빈곤화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 근로빈곤계층의 빈곤 및 취업변화유형

-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취업한다하더라도 빈곤을 반복하는 경우 역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취업을 지속하고 빈곤을 반복하는 집단 :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빈곤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종사하는 부문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지 않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이어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빈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과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 고졸학력 중심의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구성이 많으며 미혼집단의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취업의 안정성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집단임. 취업자의 경우 역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 뿐 아니라 상용직의 근로조건 역시 부문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정책방안

□ 빈곤정책의 대상 집단 확대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 현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성 중심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 여성일용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함.

-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경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역시 주당 20시간 등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해야 할 것임.
-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영세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와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최저임금제 적용을 위한 정책

- 연구결과 비정규직의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임금수준면에서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 대비 40%, 남성 비정규직 대비 64%에 불과함. 특히 시간제, 용역, 재택, 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함.
-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지도가 요구됨. 특히 여성 근로빈곤집단이 많은 부문, 음식숙박이나 도소매부문을 우선 지도하도록 지침에 명시함.

여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로빈곤대책의 마련

- 연구결과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외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업자의 고용구조상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책적 소외가 심각함.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빈곤정책 내부로 포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여성근로자의 EITC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남성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여성의 근로와 무관하게 빈곤정책이 마련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근로자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빈곤개념의 확장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여성가장 지원에서 개인중심으로 빈곤정책 확대

- 여성가장 창업지원이나 고용보험 사업 중 여성실직가장 지원 사업 등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임.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근로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고 여성가구주 가구 뿐 아니라 비 가장 여성들의 근로빈곤 상태도 매우 심각함. 동시에 근로와 가사 및 육아의 부담 등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다르지 않은 여성고유의 특성이므로 여성가장 지원을 보다 여성가장이 아닌 집단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여성취업지원에서도 여성실직가장 뿐 아니라 가장이 아닌 빈곤여성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어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중앙과 지역의 빈곤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및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고려할 때 남성과는 달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거나 근거리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빈곤 및 노동시장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지역의 여성빈곤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집단의 취업여부 및 이들의 근로애로요인을 파악하도록 하여 지역의 노동수요에 맞추어 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중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중앙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앙의 경험들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역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일터지원본부나 노동부가 계획하는 훈련-취업-복지 연계를 위한 원스탑 지원체계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여성친화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통하여 근로빈곤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복지급여 현실화 방안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약 50% 수준이므로 여성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책정된 실업급여가 빈곤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여성의 실

업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본인의 전 급여 수준과 연동시키는 방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수급자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일 경우 최저임금수준의 70% 정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함.

□ 여성 취업확대와 안정성 제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확대

- 향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매우 중요함. 자활사업을 기초로 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이윤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끌고 있음.
- 사회적 일자리의 주요 영역이 돌봄 영역, 아동 등 취약계층의 학습지원,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문화서비스 부문, 환경과 관련된 부문 등 여성친화적인 업종 및 직종 등이 주로 추진되고 있음.
- 장년층 여성들의 경우 주로 간병이나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부문으로 훈련 및 취업을 연계시키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임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근로의 표준화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요구스킬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함. 또한 고용보험이나 기타 사회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이들이 근로자로서 사회안전망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고학력 젊은 세대 여성들의 경우 문화, 교육, 환경과 같은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함.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제

- 본 연구결과 여성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 이들 집단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보육이나 방과 후 활동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업주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방안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빈곤근로자는 도소매 업종, 음식숙박업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고 이러한 부문에서 근로의 특징은 야간근로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임. 단기간에는 이들 종사자의 보육이나 자녀돌보기 지원, 가사지원

등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 현재의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도 가구소득과 연동되고 있으나 보다 근로빈곤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편모가구 등 기존의 성별분업체계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집단을 우선 발굴하여 보육서비스의 우선지원,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 출산휴가,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편모의 시간제근로 및 유급휴가제, 양육아동 보호를 위한 휴가제 등 현재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여성빈곤가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빈곤청년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집단별로는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년층 집단의 빈곤화, 취업의 불안정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임.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의 분포가 광범위하여 청년층 여성취업자의 빈곤비중도 남성에 비하여 높고 여성은 30대 후반의 빈곤비중도 높게 나타남.
- 빈곤집단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훈련의 채널을 다양화 하여 온라인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의 생계비를 보전하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훈련 뿐 아니라 취업연계를 위하여 기업체가 실시하는 인턴십의 일정 부분을 여성빈곤청년에게 할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빈곤한 청년집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동시에 현재 청년층의 빈곤화는 과도한 노동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취업이 보다 안정화되도록 하는 숙련형성과정에의 정책개입이 필요함. 기간제근로자 정책이나 기타 고용불안정과 관련된 타 정책과의 정책조율과 함께 근로자 훈련제도 등 청년층 여성의 숙련형성과정에 필요한 제도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청년층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II. 여성 근로빈곤의 개념	9
1.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논의와 개념	11
2. 여성근로빈곤관련 선행 연구	15
가. 국내 선행연구 및 정책	15
나. 외국의 선행연구 및 정책	24
3. 소결 및 시사점	32
III. 여성근로빈곤계층의 실태	33
1.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특성	37
가.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	39
나.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인구학적 프로파일	50
2.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근로실태	58
가. 업종 및 직종별, 사업체규모 및 근속년수별 분포	58
나. 종사상지위 분포	64
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65
다. 근로빈곤 집단의 근로조건	68
라. 임금근로자의 복리후생 사항	77
마. 근로자의 근로관련 및 생활 만족도 및 태도	79
바. 직업훈련 사항	85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가구 특성	90

4. 남녀취업자의 빈곤여부와 임금 결정요인	95
가. 남녀 근로자의 빈곤결정요인	95
나.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	101
5.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계층의 실태	105
가.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개인 특성	106
나.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가구 특성	114
다.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특성과 시사점	117
6. 소결 및 시사점	119

IV. 여성근로빈곤계층의 동태적 변화 Ⅱ

1. 여성근로자의 동태적 변화실태	123
가. 취업변화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사항	127
나. 취업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사항	130
2. 여성의 동태적 빈곤실태	143
가. 빈곤의 유형화	143
나. 유형별 인구학적 사항	144
다. 유형별 가구 사항	151
라. 유형별 정책수급 사항	155
라. 빈곤의 진입과 탈출 요인	157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동태적 변화	167
가. 빈곤유형과 취업 상태	167
나. 취업지속유형과 빈곤지속유형	174
다. 취업지속유형과 빈곤지속유형에 따른 세부 특성	177
4. 소결 및 시사점	181

V. 결론 191

1. 연구요약	187
2. 정책적 시사점	192

3. 정책방안	196
가. 빈곤정책의 대상 집단 확대	196
나. 빈곤개념의 확장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200
다. 여성 취업확대와 안정성 제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203

참고문헌	207
------------	-----

부록	215
----------	-----

표 목 차

<표 III-1> 1996~2004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변화	93
<표 III-2> 빈곤률 및 차상위 계층의 변화	04
<표 III-3> 가구원수별 빈곤률	4
<표 III-4> 가구원수별 차상위층 비율	24
<표 III-5> 2004년 15세 이상 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34
<표 III-6> 2004년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44
<표 III-7> 15세 이상 소득계층별 취업/실업/비경활 비중	64
<표 III-8> 취업/실업/비경활 인구 중 소득계층별 분포	94
<표 III-9> 소득계층별 연령분포	5
<표 III-10> 소득계층별 학력분포	4
<표 III-11> 소득계층별 혼인상태분포	5
<표 III-12> 소득계층별 업종분포	9
<표 III-13> 소득계층별 직종분포	8
<표 III-14> 소득계층별 사업체규모분포	36
<표 III-15> 소득계층별 근속년수분포	36
<표 III-16>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분포	76
<표 III-17> 근로빈곤집단의 연간 근로소득(세후) 분포	86
<표 III-18>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소득	96
<표 III-19> 전년도(2003년) 연간 근로소득 유무	96
<표 III-20> 근로빈곤집단의 고용안정성 분포	07
<표 III-21> 고용불안을 가지는 집단의 불안원인	17
<표 III-22> 근로자의 주관적 예상근로가능기간	27
<표 III-23> 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27
<표 III-24> 근로시간의 규칙성	3
<표 III-25>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집단의 주된 평소 활동	57
<표 III-26> 주된 일자리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	67

<표 III-27> 사회보험 급여 수급여부	77
<표 III-28> 생계보조금 지원 여부	79
<표 III-29> 항목별 생활만족도	8
<표 III-30> 남·여 근로자의 계층별 장애 및 활동제약 여부	58
<표 III-31> 남·여근로자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	68
<표 III-32> 남·여근로자의 최근 받은 훈련지원 형태	68
<표 III-33> 최근 받은 교육훈련의 목적	8
<표 III-34> 전체 가구 중 근로여성이 속한 가구의 분포	99
<표 III-35> 소득계층별 가구주 비율	2
<표 III-36> 여성근로가구의 가구형태	2
<표 III-37> 여성근로가구 내의 미취학아동 교육 및 탁아 서비스	49
<표 III-38> 빈곤결정요인 분석	9
<표 III-39> 빈곤결정요인 분석(ordered logit)	10
<표 III-40> 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0
<표 III-41> 2004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집단의 분포	0
<표 III-42>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	0
<표 III-43> 36~50세 비경제활동 빈곤 인구의 비취업 사유	8
<표 III-44>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분포	0
<표 III-45> 비경제활동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0
<표 III-46>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분포	1
<표 III-47>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 여부	1
<표 III-48>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 사유	1
<표 III-49>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훈련경험 여부	2
<표 III-50>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원수 분포	4
<표 III-51> 비경제활동 인구의 전년도 가구 내 취업자 유무	5
<표 III-52> 비경제활동인구의 사회보험급여 여부	5
<표 III-53> 비경제활동인구의 보호대상 가구 여부	6
<표 III-54>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생활비 규모	61

<표 III-55>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계층별 주관적 현재경제상태 인식 정도	71
<표 IV-1>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상태변화의 유형별 분포	3
<표 IV-2>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산업 분포	3
<표 IV-3> 19세 이상 남녀의 산업별 취업변화유형분포	3
<표 IV-4>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	3
<표 IV-5> 19세 이상 남녀의 직종별 취업변화유형분포	4
<표 IV-6> 남녀 근로집단의 유형별 빈곤상태의 변화분포	4
<표 IV-7> 작년 한해 가구 내 근로소득자 유무	3
<표 IV-8> 월 평균 가구 생활비, 소득 규모	4
<표 IV-9> 보호대상 가구여부	5
<표 IV-10>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혜자유무	6
<표 IV-1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직업훈련 경험 유무	7
<표 IV-12> 빈곤탈출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Parameter Estimate	8
<표 IV-13> 빈곤탈출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hazard ratio	8
<표 IV-14> 비빈곤탈출(빈곤진입)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Parameter Estimate	165
<표 IV-15> 비빈곤탈출(빈곤진입)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Hazard Ratio	6
<표 IV-16>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취업인구의 산업별 분포	31
<표 IV-17>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별 분포	4
<표 IV-18> 남녀 근로집단의 빈곤변화유형별 취업변화유형 분포	61
<표 IV-19>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변화유형별 빈곤변화유형분포	71
<표 V-1>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 여부	7
<표 V-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8
<표 V-3> 남성정규직을 기준으로 본 남녀 임금비	9

그림 목 차

<그림 Ⅲ-1> 가구원수별 빈곤율의 연도별 추이	14
<그림 Ⅲ-2> 가구원수별 차상위 계층 비율의 연도별 추이	24
<그림 Ⅲ-3> 15세 이상 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34
<그림 Ⅲ-4>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계층별 남녀 비율	44
<그림 Ⅲ-5>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54
<그림 Ⅲ-6>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취업인구 비중	74
<그림 Ⅲ-7>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실업인구 비중	74
<그림 Ⅲ-8>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74
<그림 Ⅲ-9> 취업자 중 빈곤집단의 분포	94
<그림 Ⅲ-10> 소득계층별 연령분포(남성)	15
<그림 Ⅲ-11>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여성)	25
<그림 Ⅲ-12>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35
<그림 Ⅲ-13>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45
<그림 Ⅲ-14> 소득계층별 학력분포(남성)	55
<그림 Ⅲ-15> 소득계층별 학력분포(여성)	55
<그림 Ⅲ-16>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65
<그림 Ⅲ-17>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75
<그림 Ⅲ-18>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85
<그림 Ⅲ-19>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85
<그림 Ⅲ-20> 업종 내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106
<그림 Ⅲ-21> 업종 내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16
<그림 Ⅲ-22>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 분포(남성)	46
<그림 Ⅲ-23>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 분포(여성)	56
<그림 Ⅲ-24> 소득계층별 주관적인 고용형태 분포(남성)	66
<그림 Ⅲ-25> 소득계층별 주관적인 고용형태 분포(여성)	66
<그림 Ⅲ-26> 소득계층별 고용형태분포(남성)	66

<그림 III-27> 소득계층별 고용형태분포(여성)	76
<그림 III-28>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남성)	37
<그림 III-29>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여성)	47
<그림 III-30>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47
<그림 III-31>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 및 근무일수	57
<그림 III-32> 법정퇴직금 지원현황	77
<그림 III-33> 휴가지원현황	8
<그림 III-34> 남·여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08
<그림 III-35> 일의 내용, 취업의 안정성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점수	08
<그림 III-36> 남·여근로자의 교육 불일치정도	18
<그림 III-37> 남·여근로자의 기술 불일치정도	18
<그림 III-38> 남·여 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28
<그림 III-39>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여성)	38
<그림 III-40>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남성)	48
<그림 III-41>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남성)	78
<그림 III-42>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여성)	78
<그림 III-43>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남성)	98
<그림 III-44>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여성)	98
<그림 III-45>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남성)	19
<그림 III-46>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여성)	19
<그림 III-47> 여성근로가구의 고령자 현황	39
<그림 III-48> 여성 근로가구의 입주형태	49
<그림 IV-1>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상태변화의 유형별 분포	51
<그림 IV-2>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여성)	6
<그림 IV-3>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남성)	6
<그림 IV-4> 취업변화 유형별 연령분포(여성)	7
<그림 IV-5> 취업변화 유형별 연령분포(남성)	8
<그림 IV-6> 연령별 취업변화유형분포(여성)	9

<그림 IV-7> 연령별 취업변화유형분포(남성)	9
<그림 IV-8> 취업변화유형별 학력분포(여성)	10
<그림 IV-9> 취업변화유형별 학력분포(남성)	10
<그림 IV-10> 취업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 분포(여성)	11
<그림 IV-11> 취업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 분포(남성)	12
<그림 IV-12> 종사상지위별 취업변화유형분포(여성)	13
<그림 IV-13> 종사상지위별 취업변화유형분포(남성)	13
<그림 IV-14>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여성)	14
<그림 IV-15>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남성)	14
<그림 IV-16> 취업변화유형별 산업 분포(여성)	15
<그림 IV-17> 취업변화유형별 산업 분포(남성)	15
<그림 IV-18>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산업분포(여성)	17
<그림 IV-19>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산업분포(남성)	18
<그림 IV-20>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여성)	19
<그림 IV-21>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남성)	20
<그림 IV-22> 기타유형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직종분포(여성)	21
<그림 IV-23> 기타유형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직종분포(남성)	21
<그림 IV-24>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여성)	22
<그림 IV-25>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남성)	22
<그림 IV-26> 남녀 근로집단의 유형별 빈곤상태의 변화분포	24
<그림 IV-27> 빈곤변화유형별 연령분포(여성)	25
<그림 IV-28> 빈곤변화유형별 연령분포(남성)	25
<그림 IV-29> 연령별 빈곤변화유형 분포(여성)	26
<그림 IV-30> 연령별 빈곤변화유형 분포(남성)	26
<그림 IV-31> 빈곤변화유형별 학력분포(여성)	27
<그림 IV-32> 빈곤변화유형별 학력분포(남성)	27

<그림 IV-33>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여성)	8
<그림 IV-34>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남성)	8
<그림 IV-35> 빈곤변화유형별 혼인상태분포(여성)	9
<그림 IV-36> 빈곤변화유형별 혼인상태분포(남성)	9
<그림 IV-37> 혼인상태별 빈곤변화유형 분포(여성)	9
<그림 IV-38> 혼인상태별 빈곤변화유형 분포(남성)	9
<그림 IV-39>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여성)	10
<그림 IV-40>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남성)	10
<그림 IV-41> 가구 내 19세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여성)	11
<그림 IV-42> 가구 내 19세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남성)	11
<그림 IV-43> 소득대비 생활비 규모(여성)	11
<그림 IV-44> 소득대비 생활비 규모(남성)	11
<그림 IV-45>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여성)	11
<그림 IV-46>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남성)	11
<그림 IV-47>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여성)	11
<그림 IV-48>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남성)	11
<그림 IV-49> 빈곤변화유형별 주된 평소활동(여성)	11
<그림 IV-50> 빈곤변화유형별 주된 평소활동(남성)	11
<그림 IV-51> 빈곤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상태 분포(여성)	11
<그림 IV-52> 빈곤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상태 분포(남성)	11

부 표 목 차

<부표 III-1>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분포	2
<부표 III-2>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분포	2
<부표 III-3>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분포	8
<부표 III-4> 업종 내 소득계층분포	28
<부표 III-5> 직종 내 소득계층분포	29
<부표 III-6> 사업체규모별 소득계층분포	29
<부표 III-7> 근속년수별 소득계층분포	29
<부표 III-8>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지위분포	0
<부표 III-9> 근로빈곤집단의 주관적인 고용형태분포	2
<부표 III-10> 고용형태별 근로빈곤 집단	2
<부표 III-11>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2
<부표 III-12>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2
<부표 III-13> 근로자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2
<부표 III-14> 법정퇴직금 지원현황	22
<부표 III-15> 휴가지원현황	22
<부표 III-16>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여부	2
<부표 III-17> 직장에서의 보험료지원 여부	2
<부표 III-18>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	24
<부표 III-19> 항목별 직업만족도 점수	28
<부표 III-20>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 불일치정도	8
<부표 III-21>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 불일치정도	2
<부표 III-22> 남·여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	8
<부표 III-23>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분석	29
<부표 III-24> 기타 질병에 대한 분석	30
<부표 III-25>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	3
<부표 III-26>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	3

<부표 III-27> 여성근로빈곤인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2
<부표 III-28> 여성근로가구의 고령자 현황	2
<부표 III-29> 여성근로가구의 입주형태	2
<부표 IV-1>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	3
<부표 IV-2> 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3
<부표 IV-3> 19세 이상 남녀의 연령별 유형분포	4
<부표 IV-4> Type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현황	4
<부표 IV-5> 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 분포	5
<부표 IV-6> 19세 이상 남녀의 종사상지위별 유형분포	5
<부표 IV-7> 유형5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	6
<부표 IV-8>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	6
<부표 IV-9>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7
<부표 IV-10> 연령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변화유형 분포	7
<부표 IV-1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현황	8
<부표 IV-12>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	8
<부표 IV-13>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분포	8
<부표 IV-14> 혼인상태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변화유형 분포	8
<부표 IV-15>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	9
<부표 IV-16> 가구 내 19세 이하(재학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	9
<부표 IV-17>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생활비 규모	1
<부표 IV-18> Type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	1
<부표 IV-19>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	2
<부표 IV-20>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주된 평소활동	2
<부표 IV-2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상태 분포	3
<부표 IV-22> 성별 빈곤 경험 횟수	3
<부표 IV-23>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연령분포	4
<부표 IV-24> 연령 집단 내에서의 빈곤경험 횟수 분포	4
<부표 IV-25>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학력분포	5

<부표 IV-26> 학력집단 내에서의 빈곤경험 횟수의 분포	2
<부표 IV-27>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혼인상태분포	4
<부표 IV-28> 혼인상태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	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빈곤해지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 학적인 요인, 가족 내 성별 자원배분이나 분업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같은 가족적 요인, 건강과 관련된 요인,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사회보장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빈곤집단 중 특히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빈곤계층의 확대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전체 복지정책의 전개 속에서 주목받는 현상이다.

특히 근로빈곤 집단 중 여성비율이 높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한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임금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근로빈곤계층을 확대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저임금의 근원이 되는 여성노동의 문제점으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낮은 경력연수 및 이에 따른 숙련형성 미비, 가사 및 양육의 부담 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도 경제활동참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경제활동을 지속해온 여성에게 빈곤화의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긴 여성은 빈곤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근로를 한다할지라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부재, 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근로 빈곤이 향후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층 뿐 아니라 향후 빈곤 가능성이 높은 여성 집단의 빈곤화를 막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를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고 예방하는 정책이 각국 복지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여성 빈곤관련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변화하는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여성 근로빈곤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근로빈곤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근로빈곤층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성비중이 높다는 객관적

인 사실의 확인에서 그쳐 구체적으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제점의 파악과 정책대응의 수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려는 연구들은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빈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근로빈곤 연구들이 정태분석에 머물러 개인들의 실태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로빈곤 정책을 위해서는 개인의 근로와 빈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여성의 생애와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및 향후의 근로빈곤 확산을 방지하고 일을 통하여 빈곤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노동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등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이론적인 논의와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규명이다. 외국의 경우 근로빈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시장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결합된 형태의 자료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종단적으로 가구와 구성원을 추적 조사한 자료가 근로빈곤계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축적이 일천한 상황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계자료로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조사(도시가계조사의 연속)’, ‘농가경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횡단면 조사로 한 시점에서의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개인과 가구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거쳐 빈곤층으로 유입되고 빈곤에서 탈출하는가 하는 점은 정책대상이 다양화하고 정책이 세부화 되면서 관심이 되어 왔으나 추적조사자료의 미비는 관련 분야 연구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로빈곤연구는 중단자료가 축적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로 관련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노동패널’자료는 보다 긴 시계열의 구축을 통하여 빈곤의 동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패널’자료 역시 전체 표본수에 비하여 빈곤계층의 수가 제한되는, 따라서 보다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자료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¹⁾

본 연구는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적용하고자 한다. 빈곤의 연구는 주로 정태적인 개념에서의 빈곤상태에 대한 사건발생의 도표화(tabulate)와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탈출확률(exit probability)과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여성 근로빈곤계층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해의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집단은 근로자와 빈곤가구에 걸쳐있는 집단이다. 즉 이들 집단의 교차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단계의 층화과정을 거쳐 이들 집단에 도달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정책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하고 빈곤한 집단이다.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중 빈곤한 집단, 빈곤한 집단 중 취업한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이 분명해진다. 이들 집단이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취업자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빈곤집단 내부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이 취업자로서의 노동시장 정책과 빈곤집단으로서의 복지정책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며 최근의 정책동향이 이들 정책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단계의 층화를 거쳐 이들 집단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취업, 비취업자를 나누고 이들 중 이들이 소속된 가구정보를 결합하여 빈곤 및 비빈곤 인구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취업자 중에서 빈곤한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가구에서 먼저 출발하여 빈곤한 가구를 골라내고 그 가구에 소속된 취업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중 근로빈곤자, 빈곤자 중 근로하는 근로빈곤자 개념을 적용하여 각 측면에서

1) 현재 조사되고 있는 ‘복지패널’자료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표집함에 따라 이러한 분석상의 문제를 향후에는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근로의 개념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근로와 비근로에 대한 동태적 변화가 급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근로가능인구에 대한 개괄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빈곤집단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빈곤집단의 여성들 중 경제활동상태별로 이들을 구분하여 비경제활동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인구학적으로 어떤 집단인지, 이들의 가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취업을 위한 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빈곤 및 취업상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상태의 변화, 빈곤상태의 변화를 각각 파악하고 이러한 상태변화의 유형을 마련하여 이들의 취업 및 빈곤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능하면 빈곤, 취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빈곤유형과 취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상관관계와 그 내부의 집단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패널자료에서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층 여부를 파악하고, 동시에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비교, 남성근로빈곤자와 여성근로빈곤자의 비교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근로빈곤자의 인구학적 사항이나 노동시장 사항, 이들의 임금 및 소득사항,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패널자료를 각 년도로 패널화 하여 동태적 변화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여성근로빈곤집단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등 종사상 지위와 빈곤화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계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빈곤상태로의 진입과 탈퇴가 빈곤 및 근로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여 각 집단 유형별로 특징적인 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 등이 보다 거시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으로 동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외국의 연구결과와 정책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근로빈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발굴

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본고를 집필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여성근로빈곤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이다. 빈곤연구가 주로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졌던데 반하여 이들의 몰성적(沒性的) 실태를 보다 가시화하여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빈곤연구에서 여성은 여전히 여성가구주에 머물러 있었고 최근 여성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빈곤실태가 다소 파악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빈곤, 빈곤의 여성화라는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미비가 두드러지게 되었고 관련 논의가 담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빈곤연구들이 보다 정태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던데 반하여 가능하면 개인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동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빈곤연구는 전체 빈곤집단의 규모에 관심이 있을 뿐 그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다. 각 연도별로 전체 규모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빈곤집단 내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빈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빈곤집단의 구성을 보다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도에서 밝혀진 사항들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역시 자료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패널자료는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례추출방식에 의한 자료로 빈곤집단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빈곤집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빈곤집단 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빈곤패널과 자활패널 등은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위의 자료들의 구축이 향후 관련 연구의 엄밀성과 내용의 풍부함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자료로 인한 제약은 단순한 표본수의 부족이 아니라 이들 집단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문항의 부족에 기인한다. 빈곤집단이 가지는 일에 있어서의 취약성 등 특성, 질병이나 장애 등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 가구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구의 특성 등이 풍부하게 마련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빈곤의 동태적 변화와 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위하여 측정시점 이전의 빈곤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석상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하는 점도 숙제로 남는다.

또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기초보장 제도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훈련이나 취업지원정책,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훈련정책 등 빈곤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현재 수행되고 향후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들의 실태와 정책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좋은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II

여성 근로빈곤의 개념

1.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논의와 개념	11
2. 여성근로빈곤관련 선행 연구	51
3. 소결 및 시사점	32

1.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논의와 개념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빈곤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온 부분이다. 광의의 개념에서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 아닌 사회적, 심리적 차원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UNDP는 인간빈곤지수(HPI)에서 건강한 삶, 지식, 적절한 생활수준, 사회적 배제의 네 가지 차원을 포괄하고 있어 광의의 개념으로 빈곤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인간빈곤을 측정할 때에도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게는 HPI-1을 OECD 국가들에게는 HPI-2를 적용시켜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에서 보다 빈곤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 보다 일반적인 협의의 개념으로는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결핍으로 한정하여 ‘소득수준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상태’로 정의하며 이 때 일정한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빈곤선의 개념이다.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준절대빈곤선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절대빈곤선으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선으로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주로 이용한다. 준절대빈곤은 Sen(1983)의 개념에 준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절대빈곤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빈곤의 절대적인 수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³⁾.

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의 규모를 측정할 때 전체가구의 절대빈곤률이 7.9%인데 반하여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률은 12.7%,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은 33.5%에 달한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절대다수가 여성노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빈곤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상대빈곤률을 비교해보아도 전체가

2) 전술한 네 가지의 차원을 고려하기 위하여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 사회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이 부족한 성인비율, 빈곤선 하 소득분포집단의 비중, 1년 이상의 장기실업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

3) 이러한 빈곤의 측정방법에 따라 빈곤률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김상균 외(2005)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절대빈곤률은 7.9%,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률은 8.1%, 준절대빈곤률은 7.9%를 나타내 상대빈곤의 측정이 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결과 2000년에 세 가지 방식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 1996년에는 절대빈곤률이 3.8%인데 반하여 준절대빈곤률은 1.7%, 상대빈곤률은 4.6%를 나타내어 세 가지 측정도구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구 8.1%에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14.6%가 빈곤가구이며 노인가구주 가구의 38.8%가 빈곤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빈곤층의 여성비중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보다 광의의 개념인 사회적 배제 등을 고려한다면 빈곤층의 여성비중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의 빈곤이 확대되고 있음은 피어스의 연구(Pearce, 1978)로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빈곤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지며 남성근로자 및 남성가구주 중심의 전통적 빈곤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빈곤”이자 선진국형 빈곤의 양태로 성인빈민의 70%가 여성이고 빈곤가구의 절반이상이 여성가구주라는 1970년대 미국의 빈곤현실을 분석한 것이다(송호근, 2001).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에서 여성빈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빈곤을 결정하는 많은 원인들 중 여성노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며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집단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성근로빈곤의 개념자체는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온 근로빈곤의 개념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근로를 둘러싼 오랜 관습과 전통, 근로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들은 실제로 다수의 빈곤한 여성들이 근로하는 여성이며 포괄하는 영역은 시장노동을 담당하는 빈곤여성 뿐 아니라 비공식부문의 근로를 담당하는 여성에게도 확대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의 확산을 통한 여성근로빈곤의 이해는 소득에 의거한 협의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소외와 박탈에 대한 다원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근로빈곤도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의 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영란 외(2003)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 및 인간빈곤 개념의 대두와 여성빈곤의 이해를 통한 통합적 접근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전통적 분석틀을 사용함으로써 여성빈곤화에 대한 결과만을 주목할 뿐 이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였던데 기인한다. 여성의 근로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개별 근로자와 가구에 대한 접근은 여성이 근로빈곤계층화 하는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이러한 확장된 개념으로 여성근로빈곤을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결과로 향후 여성빈곤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

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인간빈곤 및 사회적 배제라는 관점을 이용함에 따라 상대적 빈곤에 대한 향후의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빈곤의 원인으로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의 성별 노동 분업, 가족 내 자원배분의 문제로 인한 여성의 빈곤, 노동시장의 성차별, 분절성, 여성취업의 형태, 가부장적 복지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근로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데는 가구단위의 빈곤개념, 여성의 근로상태, 가구 내 자원배분의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되므로 이들 각 방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의 사용은 여성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성근로빈곤의 개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근로에 대한 정의문제일 것이다. 기존의 근로빈곤에서 노동시장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면 여성의 근로빈곤에서는 필연적으로 근로개념의 확대문제가 제기된다. 박영란 외(2003)에서도 여성빈곤과 가족 내 성간불평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의 자원배분의 불평등, 무급노동에 주로 투입되는 여성의 노동력에 기인한 빈곤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족 내 자원배분의 문제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여성빈곤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축으로 논의되어 왔다. 가계단위의 빈곤정책이 실질적으로 가계구성원의 성별로 분리된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여성과 아동이 보다 더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3세계 연구들에서 가족 내 자원배분을 식별할 수 있었던 데는 보다 용이한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예로 가족구성원 당 칼로리 섭취 등 영양과 같은 매우 일차적인 문제들이 제3세계의 주요한 정책적 관심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양태들로 인한 빈곤화의 측정이 가능했다.(Thomas, 1990)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이상인 이른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계내의 자원배분을 측정할 것인가, 측정의 결과가 과연 개인빈곤상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빈곤은 가족요인, 동시에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들을 발굴할 때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소 상이한 접근을 보자면 유급노동인가 무급노동인가의 내용보다는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보다 넓게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근로를 한다, 근로를 할 수 있다 등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 포함여부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실직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빈곤집단은 경제활동빈곤층으로 취업빈곤층보다는 확대되는 개념이 된다. 최근의 논의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노대명, 최승아, 2004). 근거로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간의 모호한 경계 및 잦은 지위변화를 들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볼 때 취업상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의 변화가 급격하다면 결과적으로 한 시점에서 취업의 여부, 실업의 여부, 비경제활동 상태라는 것이 빈곤집단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류이다(Matire & Nolan, 2000).

근로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존에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정책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가 불가능했던 비경제활동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새로운 정책집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빈곤의 개념 확대는 여성근로빈곤 집단에 긍정적인 방향이다. 여성의 경우 실업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를 오가는 집단의 규모가 크며 일반적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종숙 & 박수미, 2003).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구직활동 여부와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 등의 일반적인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활동에 있어서의 적극성 등에서 남성과 차이를 보인다. 중요한 점은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집단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근로 가능한 인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며 정부의 정책대상 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노대명, 최승아의 분류는 이러한 점에서 유용한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집단,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빈곤집

단,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근로가능빈곤집단(workable and working poor)의 개념이 그것이다(노대명 & 최승아, 2004).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실업빈곤층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빈곤 집단의 비중이 커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취업빈곤층(working poor)과 비경제활동 빈곤(workable poor) 집단이 주가 될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이며 예를 들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 등을 통하여 제도권내로 편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나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경제활동 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는 일하고 있지 않으나 가사 및 육아 등 무급노동의 수행자로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보다 큰 범주의 근로빈곤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업빈곤과 비경제활동 빈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집단을 각각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여성근로빈곤관련 선행 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및 정책

1)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빈곤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근로빈곤계층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당사자의 노력으로만으로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에서 빈곤이 상당부분 기인한데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에 대한 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근로빈곤집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빈곤 정책 그 자체로 사적, 공적 이전소득(사회보험급부 및 공적 부조)의 빈곤완화 정책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저임금제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이 다른 한축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별히 근로빈곤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빈곤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정,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빈곤집단의 식별과 이들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이다. 동태적인 연구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빈곤에서의 탈출에 대한 연구들이 정책적 관심에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차차 근로상태와 빈곤을 연계시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빈곤의 실태에 주목한 연구들은 문형표, 유경준(1999)의 연구가 있다. 소득분배의 상황을 파악하고 빈곤률을 추정하여 빈곤의 확산현상을 관찰하였다. 주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박찬용(1999)의 연구 역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빈곤지표를 통한 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빈곤선의 계측, 경상소득 빈곤률, 가계지출 빈곤률 등을 바탕으로 경상소득 빈곤률, 경상소득 SEN 지수 등을 사용하여 1998년 시점의 빈곤현황과 빈곤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빈곤 규모의 추정, 빈곤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개발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빈곤집단의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구인회(2001), 안종범, 김철희, 전승훈(2001), 정진호(2001)의 연구들은 빈곤집단의 프로파일에 보다 주목하여 개인의 취업여부 등 노동시장참여 여부 등이 빈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이 근로와 빈곤이라는 주제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과 소득의 불안정성, 빈곤화 등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철희(2003)의 연구도 유사한 맥락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상대소득인 중위소득 1/2 이하와 최저생계비 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의 규모 및 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여성, 고령자, 저학력 가구의 빈곤 고위험 집단을 발굴하였다.

셋째, 빈곤의 동학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하여 빈곤집단의 변화와 향후 빈곤화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박순일 외(2000)의 연구는 노동시

장에서 취약한 직업을 갖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경우 빈곤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역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금재호, 김승택(2001), 황덕순(2001), 구인회(2005) 등의 연구들은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자들의 취업확대가 빈곤해결의 핵심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빈곤에서의 탈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빈곤집단의 비중도 높아 이들 장기빈곤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근로빈곤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근로실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금재호(2004)는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가구의 절반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14%가 빈곤상태에 있음을 밝혀 가구의 경제적 사향과 가구원의 취업여부를 연결하여 해당집단의 규모를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이 빈곤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구에 취업자가 있을수록 빈곤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빈곤에서의 탈출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 고위험집단은 여성가장가구, 고령자가구, 저학력자가구이며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빈곤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가구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연구들이 빈곤연구를 위한 선행연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진권, 강석훈(1998), 정건화, 남기곤(2000), 이정우, 이성림(2001), 정진호외(2002) 등은 소득불평등도를 산출하고, 이를 외환위기의 전후와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득이동성 등을 평가하고 집단별로 소득이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약해 보면 근로빈곤 관련 연구의 결과들은 대체로 몇 가지의 정책적 관심 하에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근로빈곤집단의 규모이다. 전체 인구 중 빈곤집단의 규모 뿐 아니라 빈곤 집단 중 근로빈곤 집단의 규모, 근로집단 중 근로빈곤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근로빈곤집단의 규모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대응 시 재원이나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정보이다. 이어서 규모의 변화를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정책 중 빈곤의 퇴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소득분배의 현황이나 불평등도 등이 어떤 양태로 진전되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니계수의 변화, 빈곤집단 비중의 변화 등은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심에서 더 나아가 빈곤의 동학, 즉 빈곤집단으로 이행하고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에 대한 미시적인 관심 역시 연구의 중요한 주제였다. 정량(stock)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규모라 할지라도 유량(flow)적으로 한 집단의 변화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되므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개별 집단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양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연구들도 위의 연구진행과 맥을 같이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근로빈곤의 논의 속에서 여성이 근로함에도 빈곤해지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왔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라는 결과의 원인으로 외생적인 변수인 문화적, 개인적 요인을 들어 왔다. 가족 돌봄의 의무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소득증대 직무에 헌신할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존재해 왔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 저학력 등이 저임금 직종으로 여성을 집중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다(어수봉, 1997; 박순일 외, 1994; 김병조 외, 1996; 노인철 외, 1995; 정진성외, 2000; 김영란, 1997). 선행연구들은 성별 직종분리에 의하여 남성 직종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직업적 위신과 자율성이 높은 전문, 관리직종에 주로 분포, 여성은 저 숙련 생산직, 서비스직,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노동시장 내 문제 뿐 아니라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가사 및 자녀양육 그리고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이러한 개인의 인적자원 및 가구사항들이 빈곤지속과 빈곤진입을 초래하는 노동시장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노대명 외, 2003).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도 일반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빈민노동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확대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지위를 개선하거나 빈곤탈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빈민노동시장의 경험들이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오점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임금결정에 있어 성차별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과 더불어 빈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방식은 다른 노동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성차별은 임금에 33.2%의 임금효과를 갖고 빈곤노동시장 더미변수는

108%의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호근, 2001). 또한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교육의 임금 보상률은 정(+)의 값을 가지는데 반하여 빈민노동시장은 부(-)의 값을 가져 빈민노동시장은 교육이 필요 없는 직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기회나 직업훈련의 확대가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김종숙 외, 2004) 따라서 인적자본론에 근거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등 노동공급적인 요소들에 집중된 정책들이 노동시장의 구조 하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거꾸로 노동시장 구조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함을 의미하고있다. 정책적 방안으로 취업안정, 취업연계 등이 빈곤탈출에 가장 효과적이고 분절노동시장의 내적 요인인 고용주의 인식적, 관습적 장벽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성근로빈곤 연구는 여성노동공급에서 나타나는 저학력, 저숙련 등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점, 노동시장의 성차별, 직종분리 및 분절구조의 문제, 노동수요 측의 여성근로자 수요 및 문제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의 근로와 관련되어 폭넓게 근로빈곤을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 장에서 여성근로빈곤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 근로빈곤을 정의할 때 협의의 노동시장 근로여부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경우 대다수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정책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비경제활동 간의 경계가 차츰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여성근로빈곤정책이 포괄해야 할 대상도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근로빈곤집단은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어 향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정책과 근로의 연계가 최근에 이루어지다보니 정책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빈곤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통하여 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빈곤을 방지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기준을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근로능력을 파악하여 자활사업 등 기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소득자산기준과 조건부수급제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상은, 2004). 그 이유는 근로능력자의 경우 대표적인 근로무능력가구인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의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관련 사회부조제도로부터의 급여가 제외(각각 약 5만원 내외)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도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4.17%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조건부수급제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등을 주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또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였다.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자활

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실시하고,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고 있다.

근로와 관련된 공적연금을 통한 빈곤완화정책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되어 그간 8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5월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1,165,039 사업장에 이르고 피보험자수는 8,270,4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남녀별로 보면 가입자 중 여성이 33.7%, 남성이 66.3%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 대비 적용률을 보면 2004년 말 현재 취업자의 33.7%, 임금근로자의 50.1%, 상시근로자의 59.0%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⁴⁾. 고용보험이 빈곤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빈곤집단에 부가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통하여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근로빈곤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 사업, 실업급여 사업, 직업훈련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업급여 사업은 다시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직 수당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업급여 사업의 실적은 1997년에는 예산규모로 78,737백만 원에 49,177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 말에는 예산규모로 1,448,306백만 원에 707,432명으로 증가하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고용촉진사업에는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많은 보조금이 있다. 여성고용촉진금, 고령자고용촉진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보육교사임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대표적인 여성관련 지원금인 여성

4) 적용률이 발표되는 고용보험 통계연보의 2005년 자료가 미발표됨

고용촉진금과 보육교사임금지원 등은 2004년도에 전년대비 각각 24.3%,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직업훈련 등 훈련과 수강장려금, 근로자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 정부위탁훈련, 중소기업컨소시움 등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사업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으로서 사업규모를 대폭 확장해 왔다.

외국의 경우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이행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의 취업이행 등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는 매우 한정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책수급자를 추적한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거나 재취업후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중숙, 2005). 이는 제도자체의 부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제한되는 특성, 즉 비자발적 실업자의 특성이 자발적 실업자와 달라 재취업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데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근로의 욕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마련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가구사항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고 근로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발굴도 당면한 문제로 나타났다(김중숙, 2005).

또 하나의 근로빈곤정책은 최저임금제도이다. 근로빈곤집단과 저임금근로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나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화할 우려가 큰 집단으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된 후 1988년부터 시행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그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고용 및 소득분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대적 변화수준이 미미하고 이용 가능한 미시자료가 불충분하여 그간 이 분야의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저 숙련근로자의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이나 저소득가구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탈 빈곤정책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OECD국가들에 비

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꾸준히 있어왔다(정진호 외, 2005). 실제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집단의 규모가 커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종숙 외, 2005). 이 밖에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자활사업 등이 근로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다.

위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빈곤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빈곤집단 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주된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상태에 따른 구분이 없어 빈곤집단을 근로에 의하여 이분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은(2004)의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빈곤가구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여 2002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자 약 50만 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능력자가 약 30만 명(노대명 외, 200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의 경우 양적 규모면에서나 내용도 실질적인 자활보다는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어 근로능력빈곤가구에 대한 본격적인 빈곤정책을 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집단의 빈곤탈출이 현저하게 빠른 것을 보이고 있어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는 장기급여, 근로능력빈곤가구에 대해서는 단기급여 중심의 빈곤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화정도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빈곤의 심화수준이 낮은 정도로 역시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보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수급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위의 문제들로 인하여 대다수 이원화된 혹은 혼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정책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각 빈곤계층의 빈곤원인이 다양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욕구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외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근로의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 빈곤의 결과를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정

책,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등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집단을 위한 사업주 대상의 지원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매우 미시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빈곤정책에서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수요창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더욱 요구되는 정책이다.

나. 외국의 선행연구 및 정책

1) 외국의 선행연구

외국에서는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외국의 근로빈곤 연구들은 임금, 조세제도,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책 등 각 영역에서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포괄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경험이 축적된 국가들에서는 근로빈곤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이미 근로인센티브 상실 및 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복지개혁 및 평가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상세히 개괄하는 것은 생략하고 근로빈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 국의 연구결과들을 간단히 점검하기로 한다.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연구에 따라, 혹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소속된 가족의 소득이 정부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집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의 기준을 연간 26주 이상 혹은 그 보다 긴 기간 일을 할 경우로 보며 가족 소득이 빈곤선의 100%를 기준으로 120%(150% 이내) 등 다양한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으로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빈곤 집단의 실태를 다양한 사례연구에 의하여 파악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Lewis, 2002). 첫째, 근로경험과 소득 면에서 살펴보면 파트타임근로 비중이 높고, 근로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이들 집단의 상당수가 TANF(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빈곤보조를 받고 있다. 극빈곤집단이 빈곤집단의 상당수(일리노이 사례의 경우 약 70%)를 점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직업을 보면 판매직, 개인서비스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고 대체로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갖고 싶은 직업선택은 사무직에 가장 높은 비중이 주어져 있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도 사무직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미스매치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근로빈곤층이 근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대다수의 경우 소득과 의료보험이 동일하다면 복지혜택보다는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복지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 다수는 다음해에는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우려한 복지정책 대상자의 근로인센티브 저하에 대한 우려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 훈련에서 교육은 향후의 근로빈곤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표이다. 대부분의 근로빈곤계층의 교육수준이 12년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계층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학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상당수의 집단의 부모가 고교졸업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빈곤 집단 중 다수가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직업자체가 더 나은 커리어를 추구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술습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아동양육과 가정생활, 건강 등을 보면 대부분의 취업여성에게 자녀양육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다. 1/3 이상의 근로빈곤 여성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아동양육에 대한 근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동양육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출퇴근 거리가 길수록 아동을 맡기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응급시의 아동보호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는 달리 통근시간이 짧은 경우 비용과 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결국 근로빈곤여성들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깝고 수준이 높으며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아동양육시설을 선호하며 이것이 없을 경우 취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여성과 관련하여 보면 취업중단을 완화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Holzer & Martinson(2005)는 여성 근로빈곤에 관심을 기울이는 원인으로 빈곤층 취업률의 증가와 특히 편모의 취업률 변화를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편모의 취업률은 1990년대 초반 67%의 취업률에서 1990년대 말에는 78%로 10년간 약 11% 증가하였다. EITC 제도와 맞물려 9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은 감소하나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 즉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계층이 증가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들의 임금과 부가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며 둘째는 잦은 이직과 결과적으로 실업기간 중 소득보장이 어려운 점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임금수준을 보면 직업경력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으나 임금 상승의 증가분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졸미만이나 비숙련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소득상승과 다른 경로를 가지거나 이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약 1/4 정도의 근로자만이 저임금근로자에서 탈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업종과 사업장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단위에서 저임금전략을 사용하여 유사기술수준 근로자에게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상의 문제는 구조적 미스매치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접근성이나 일자리 정보 등에서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센터 등에서 정보제공, 차량지원 등을 담당하고 일반적인 직업훈련, 직업경험을 갖도록 지원할 경우 문제들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로빈곤계층의 직업이동도 일반적인 직업이동의 원인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숙련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잦은 직업이동을 하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중퇴자 중 낮은 인지수준, 아이가 있는 여성, 소수집단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잦은 직업이동은 특히 비숙련근로자에게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사회복지제도 수급자들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직업을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Lewis, 2000). 여성들의 경우 아동양육, 건강 및 교통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근로자의 낮은 교육수준이나 직업능력 뿐 아니라 고용자와 작업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있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근로자에 대한 연구, 즉 노동공급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근로빈곤계층의 확산은 각국의 실업률감소를 위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해왔다는 점이다.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용촉진 등은 취업률을 증가시키기는 하였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저임금일자리의 양산과 그러한 일자리를 보유한 계층의 빈곤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혹은 자발적인 원인으로 저임금일자리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빈곤화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여성 친화적 고용형태인 시간제근로나 일자리 나누기 등도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근로소득을 감소시켰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각국의 근로빈곤 정책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빈곤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수행하였다.

2) 외국의 근로빈곤 정책

전술한 요인들은 근로빈곤집단의 실태 및 이들을 빈곤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외국의 근로빈곤정책의 방향은 전체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해 왔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가 긴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큰 기초 하에 각각의 세부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정책들이 정부의 복지정책 틀 내에서 어떠한 위치로 각 정책 간 관계를 형성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의 정책기조와 사례들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맞물려 각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단위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복지와 고용정책에서의 국가 간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분류기준을 크게 미국식 근로연계정책(workfare)⁵⁾과 프랑스식의 통합

정책(insertion)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는 첫째 복지의존에서의 탈피를 모색하는 정책이 근로연계정책의 핵심인 반면 통합정책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둘째 근로연계는 자립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통합정책은 배제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한다. (김상균 외, 2005)

특히 근로연계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트릭키(2001)는 정책의 목적, 이념, 정책대상, 집행 및 전달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중앙집권적 유럽형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분권적 접근방식을 가진 국가들로 노르웨이와 독일을 들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프랑스의 통합적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미국은 예방적 징벌적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에 따라 이원적 빈곤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일원적 빈곤

5) 미국의 일반적 근로빈곤지원 정책

가.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근로자와 가족이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 의회는 1975년 조세크레딧을 입법화하여 증가하는 사회보장세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후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변화는 1990~1998까지의 EITC 금액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득과 가구원수가 금액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며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의 최저 크레딧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CHILD CARE(아동보육)

대부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은 아동보호발전기금(CCDF)에서 지급된다. 이 지원은 1996년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를 조정하는 법령(PRWORA) 이후 대부분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추진하게 되었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다른 지원제도는 아동양육세제크레딧, 사회서비스통합그랜트(SSBG), 헤드스타트, 아동음식프로그램(CCFP), TANF 등이 주된 제도이다.

다. FOOD STAMP(식품공여)

저소득가구가 식품을 구입하여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구입권 금액이 결정되는데 전체의 약 30% 정도가 수입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MEDICAID(의료보장)

AFDC의 기준에 따라 해당자가 결정되나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TANF 해당자와 주정부의 빈곤선 하에 있는 임신한 여성과 아동(주로 빈곤집단의 100%를 상회하는 범위를 포괄), 기초보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집단,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다.

마. SCHIP(아동건강보험)

이 제도는 저소득의료보장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고 일반 의료보장을 받기에는 소득이 낮은 근로가족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확장된 형태의 메디케이드나 독립적인 의료보장프로그램,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빈곤가구 소득의 2배에 이르는 집단까지를 포괄하는 수준이다.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없는 빈곤층을 구분하는 이원적 빈곤정책으로 미국과 영국이 이를 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6년 소득기초형 구직급여(income based jobseeker's allowance)제도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소득보조(income support)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보험제도에 해당하는 기여기초형 구직급여(contribution based job seeker's allowance)와 저소득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한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조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근로를 하나 소득이 낮은 집단을 위하여 근로소득보조제도인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을 실시한다. 주거나 의료에 대한 주거급여(housing benefit)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물지원제도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거부조 등이 있다. 미국은 실업부조제도가 없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물현금지원이 편모가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지원이 제한적이다. 이들이 TANF를 받을 수 있는 연한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엄격히 운영된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부조 제도를 통하여 1차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실업부조를 받는 집단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부조를 실시하는 부분적 이원화 체계를 갖춘 국가들도 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따르고 있다. 사회부조는 대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실업부조 수급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이차적인 수단이 된다. 핀란드의 경우 전 실업자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실업부조가 이루어지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실업보험수급자격자의 경우 무제한, 무자격자의 경우 1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빈곤층을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체계로 묶어 보호하

는 일원형 체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빈곤정책은 실업부조를 가지지 않고 사회부조에 의하여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근로무능력 빈곤층이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근로무능력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크게 적극적 지원정책,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자립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평가하자면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100%급여감소율부과에 따른 근로의욕감소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비수급자 중 일부에 대해 근로유인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비근로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은 상승시키고 기존비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은 줄이게 되어 변화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복지 의존의 문제와 관련해 기존수급자들에게 복지제도를 탈출시키는 효과는 미미하고 기존비수급자들이 복지제도로 진입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Danziger et al(1981)은 미국 AFDC제도에서 급여감소율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 Garfinkel and Orr(1974), Saks(1975), Williams(1975)은 공통적으로 급여감소율의 감소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Masters and Garfinkel(1977), Levy(1979), Moffitt(1980), Barr-Hall(1981), Hausman(1981)의 연구들에서는 기존수급자와 편모가구주의 경우 급여감소율의 저하가 전체적인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급여감소율의 감소가 기존 수급자들의 근로시간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키나 기존 비수급자들의 근로시간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제도의 근로인센티브 저하문제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복지정책의 한 축인 자발적인 고용 준비프로그램 등의 전통적 자활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취업알선 등은 단기간의 구직지원을 제공하여 잠재적 수급자들의 노동시장기술을 증가시킴으로 임금률을 향상시켜 근로능력 빈곤자들의 취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준비 프로그램들의 결과 대상자들의 취업과 근로소득

이 증대되어도 동시에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제거됨으로써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증가분과 급여감소분이 서로 상쇄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복지수급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켜 복지제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자립지원 정책으로는 첫째, 수급자 압박정책이 있다. 근로강제 및 수급기간제한제도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AFDC제도이다. 근로강제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을 증가시키고 복지프로그램 참여는 떨어뜨리고, 생애수급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복지프로그램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급자를 압박하는 정책들은 복지제도로의 참여에 따른 편익을 낮추고 비용을 증가시켜 수급자의 복지제도 탈출율을 증가시키고 비수급자의 복지제도 진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노동시장에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대체로 복지제도를 탈출한 수급자들이 저임금, 추가적 의료비용, 아동양육비용, 가구내 요보호자 보호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임금문제는 근로소득보조제도(EITC)로 대처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에 대응하여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근로를 통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고급여액지점이 저임금근로자들의 전일제 근로시간에 보다 가깝게 설정될수록 임금보조정책이 노동공급증대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으로 Hotz & Scholz(2000)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EITC제도가 저임금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되는 두 가지의 정책인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와 실업부조제도(UI)를 비교하자면 근로소득보전제도는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은 부조가 주어지는 반면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에게 정책급여를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존재하고 저임금근로자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일자리 공급능력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존재하면 근로자의 자립촉진에 대한 측면에서 EITC가 긍정적이나 미국의 경우 40만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공급초과를 나타내어 근로소득보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어 실업급여제도(UI)가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의료보호와 편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문제이다. 저소득층은 복지제도 이탈시 기존 의료보호급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료보험료부담과 본인부담분의 증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제도 이탈에 따른 의료비부담은 자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편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지원도 근로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근로를 하기 위하여 자녀의 보육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저임금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이 아동보육시기의 양육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부모가구의 자립의지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사하게 가구 내 아동, 장애인, 노인의 존재는 저소득가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어렵게 하므로 이에 대한 각 주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소결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행연구 및 정책의 점검을 통하여 다음의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정책은 근로유무와는 상관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가장 포괄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기초보장을 추구하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도 등 노동시장 제도들을 통하여 빈곤을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근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므로 근로를 통한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도 근로하는 집단에게조차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역시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부문, 비정규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등 빈곤화와 직결되는 부문에서 근로하는 집단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데는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약 40%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성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종숙 외, 2004). 이러한 한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불가능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열악한 위치를 점하는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제도가 빈곤을 방지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전히 미약한 제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는 더 나아가 실업급여 등 본인의 임금을 기초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근로빈곤정책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제도가나 유럽의 통합정책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비 포괄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저임금 근로빈곤집단을 양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I를 근간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보전하고 TANF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체제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문제를 보전하기 위한 EITC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각 제도가 가지는 미비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부조를 통한 1차적 지원, 실업 부조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 근로빈곤계층에게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로를 통한 빈곤의 완화라고 한다면 근로와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제도에서 누락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구조적 근로빈곤완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비공식부문 근로자들이 많아 이들을 제도권내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없다면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 전체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내 흡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III

여성근로빈곤계층의 실태

1.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특성	73
2.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근로실태	85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가구 특성	99
4. 남녀취업자의 빈곤여부와 임금 결정요인	95
5.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계층의 실태	115
6. 소결 및 시사점	119

1.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특성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성근로빈곤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근로빈곤층은 매우 복잡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빈곤 자체에 대한 정의 뿐 아니라 빈곤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자들의 조작적 정의를 요구한다. 여성 근로빈곤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정의는 빈곤의 측정단위에 따른 문제점에서 또한 기인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빈곤의 단위는 가계단위(household unit)이다. 가계는 소득과 소비의 단위로 가계의 구성원들은 소득과 소비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주체이며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빈곤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근로빈곤의 개념은 가계단위 빈곤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가계구성원 개인의 근로를 통하여 규명된다. 가계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근로빈곤계층이라 정의하므로 가계의 개념, 그리고 가계내부의 구성원의 단계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집단인 여성근로빈곤의 개념은 더욱더 복잡한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여성근로빈곤집단은 가계, 구성원, 그 중 여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여러 단계의 층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집단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빈곤을 여성가구주 가구, 단독가구 여성들에 중심을 두어 논의해 왔었다. 역시 빈곤을 측정하는 단위가 가계이기 때문에 성별로 분리할 경우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로 분리하는 것이 분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가계가 빈곤하다는 것은 가계구성원이 역시 빈곤하다는 결론을 도출해왔으며 정책의 단위로 가계를 상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로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의 근로상태를 분석의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며, 빈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이 속한 가구의 빈곤여부를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축을 통하여 개인의 근로와 빈곤이라는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빈곤연구들이 가구단위 측정을 통하여 젠더의 문제와 무관하게 빈곤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개인과 가구단위 결

함을 통하여 기존에 여성근로빈곤은 곧 여성가구주 근로가구의 빈곤이라는 협의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이 가구주인 빈곤가구내의 여성들에게 정책적인 관심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며 이들이 가구주가 아니라도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전장에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나타나듯이 향후의 빈곤정책은 근로를 통한 빈곤의 완화이며 필연적으로 정책대상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로 이전되고 여성 개인의 실태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적 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구조에서 주의할 점은 저임금근로자가 반드시 근로빈곤집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근로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의 근로빈곤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분류는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논의된 바와 같다(노대명, 최승아, 2005).

결론적으로 본 장에서 밝혀야하는 부분은 첫째, 여성근로빈곤계층에 대한 구분과 정의, 둘째, 구분된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근로실태와 생활실태, 셋째, 이들의 근로와 빈곤상태의 변화 등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들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들이 대다수 성별 분리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해당 집단의 근로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빈곤계층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빈곤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여성 근로빈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II장에서의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빈곤한 집단 중 근로하고 있는 가구, 이들 구성원 여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단 빈곤한 집단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상태를 파악하여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구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 가구에 소속된 여성들의 인구학적 사항, 근로사항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이다. 본 자료는 노동시장 사항과 가구의 경제적 사항을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각각의 조사에서 중복되는 표본으로만 자료를 구성할 경우

대표성과 가중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주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가.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근로빈곤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빈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장에서 보았듯이 현재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빈곤의 기준은 가구총소득을 이용하여 정부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최저생계비의 몇 %를 빈곤가구로 정의할 것인가, 빈곤선 위의 차상위 계층이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퇴를 거듭하는 집단이라고 할 때 차상위 집단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III-1> 1996~2004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원)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96년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1997년	265,527	446,970	642,005	798,169	911,151	1,018,323
1998년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999년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년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 주: 김미곤, 김태완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2004)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표에서 나타난 1999년 이후 1~6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정부발표 자료이며 1998년 이전의 최저생계비는 연구자가 추정한 자료이다. 정부에서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1인 증가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차액을 가산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생계비에 따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인 절대빈곤의 개념이다.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개념을 기준으로 한 빈곤집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구원의 근로여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구분하기로 한다. 아울러 최근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일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구, 즉 빈곤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구분하기로 한다. 우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경우 2004년 현재 14.7%에 달하고 있다. 빈곤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차상위 가구의 경우 3.8%이며 비빈곤 가구의 비중은 81.5%이다.

<표 III-2> 빈곤률 및 차상위 계층의 변화

연도	빈곤률(%)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 제외(drop%)	분석 가구 수
1998년	16.83	6.71	70가구(1.61%)	4274
1999년	20.12	10.62	88가구(2.18%)	3940
2000년	19.57	6.72	53가구(1.38%)	3796
2001년	18.64	7.83	70가구(1.84%)	3737
2002년	13.57	5.17	41가구(1.04%)	3882
2003년	13.73	4.65	38가구(0.91%)	4136
2004년	14.70	3.80	35가구(0.81%)	4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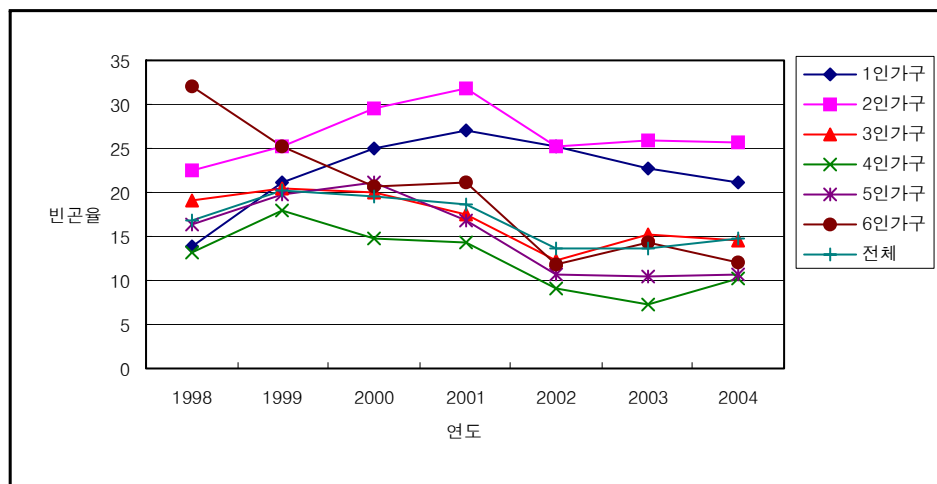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가구의 빈곤비중이 25.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1인가구로 21.03%를 나타낸다. 4인 과 5인가구의 빈곤비중이 가장 낮아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인가구의 빈곤비율은 주로 고령자 층의 독거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2인가구의 경우에는 고령자, 모자가정 등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3> 가구원수별 빈곤률

(단위: %)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전체
1998년	13.85	22.44	19.10	13.21	16.44	32.08	16.83
1999년	21.15	25.30	20.44	18.00	19.81	25.31	20.12
2000년	24.95	29.44	19.94	14.80	21.22	20.57	19.57
2001년	26.98	31.86	17.60	14.31	16.84	21.14	18.64
2002년	25.13	25.20	12.18	9.11	10.60	11.89	13.57
2003년	22.67	25.97	15.20	7.36	10.49	14.37	13.73
2004년	21.03	25.76	14.63	10.29	10.64	12.10	14.70

전체 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1999년도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의 추이를 나타내나 2004년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빈곤률은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인가구를 중심으로 2003년과 2004년 빈곤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1> 가구원수별 빈곤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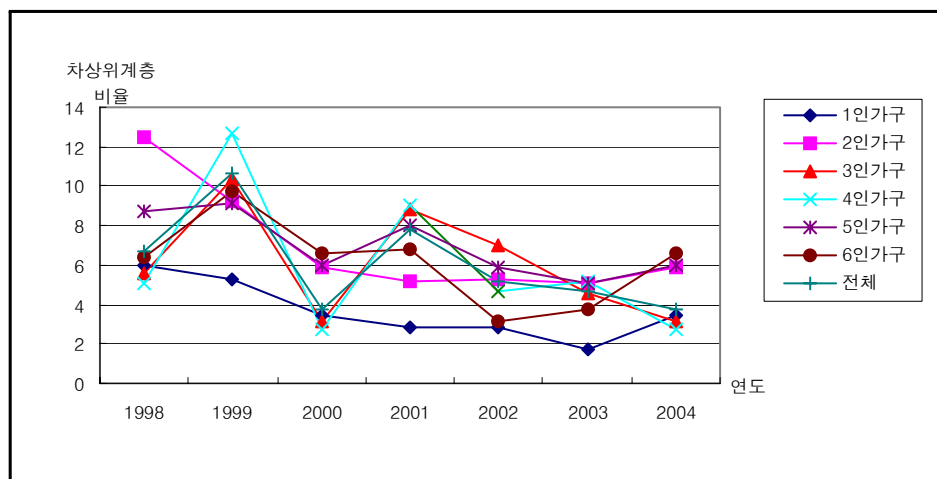
이어서 빈곤화의 우려가 높은 차상위 계층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별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1998년에는 전체 6.7%에 해당하던 집단이 2004년

에는 3.8%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관측한 기간 동안 10.6%로 증가하였다가 이어서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하여 온 것이다. 가구원수로 보면 4인 가구 3인 가구의 차상위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상위 비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이들 집단의 비중이 높았다.

<표 Ⅲ-4> 가구원수별 차상위층 비율

(단위: %)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전체
1998년	5.96	12.50	5.54	5.06	8.77	6.44	6.71
1999년	5.27	9.27	10.34	12.65	9.11	9.76	10.62
2000년	3.43	5.91	3.11	2.69	5.99	6.60	3.80
2001년	2.86	5.14	8.84	9.05	8.02	6.75	7.83
2002년	2.89	5.24	7.01	4.65	5.90	3.15	5.17
2003년	1.71	5.05	4.55	5.17	5.03	3.76	4.65
2004년	3.43	5.91	3.11	2.69	5.99	6.60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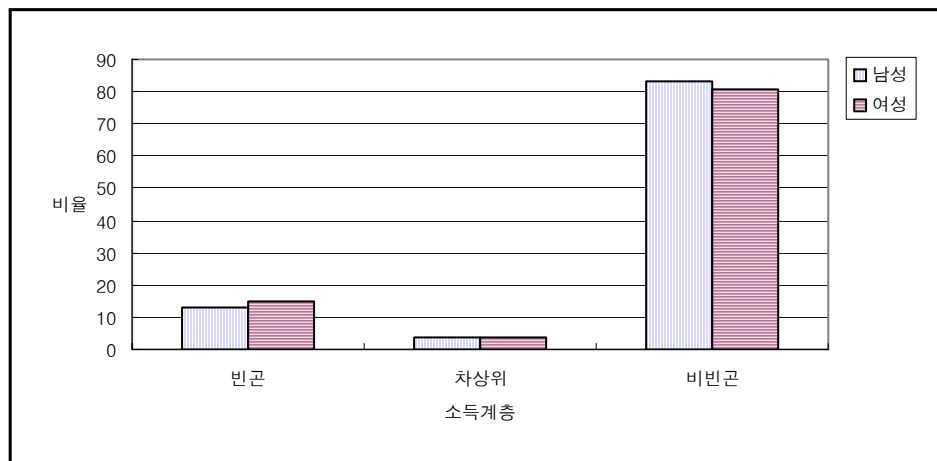
<그림 Ⅲ-2> 가구원수별 차상위 계층 비율의 연도별 추이

이러한 가구기준의 분류에서 더 나아가 이들 가구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빈곤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 구성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5세 이상 총인구는 전체 34,070천명이며 이중 여성은 17,440천명, 남성은 16,630천명으로 나타난다. 이중 빈곤집단은 전체 인구 중 14% 수준이며 여성의 빈곤비율이 15.06%, 남성의 빈곤비율은 12.89%로 여성의 빈곤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차상위 계층의 비중을 보면 전체 차상위 계층 1,300천 명 중 여성은 689,136명으로 약 4%, 남성은 약 611,118명으로 3.7% 수준을 나타낸다. 차상위 계층에서도 여성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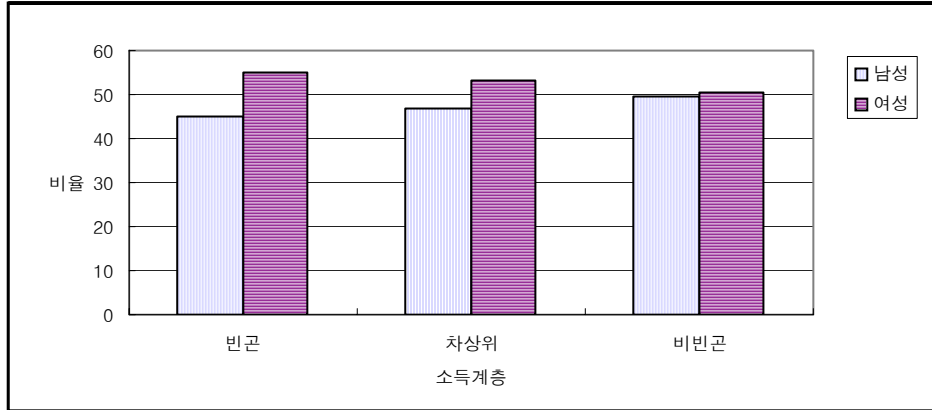
<표 Ⅲ-5> 2004년 15세 이상 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15세 이상 총 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16630	17440	2142	2626	611	689	13870	14130
비율 (단위: %)	100 (48.8)	100 (51.2)	12.89 (44.93)	15.06 (55.07)	3.68 (47.0)	3.95 (53.0)	83.44 (49.55)	80.99 (50.45)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소득계층별 남녀의 비율



<그림 Ⅲ-3> 15세 이상 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그림 III-4>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계층별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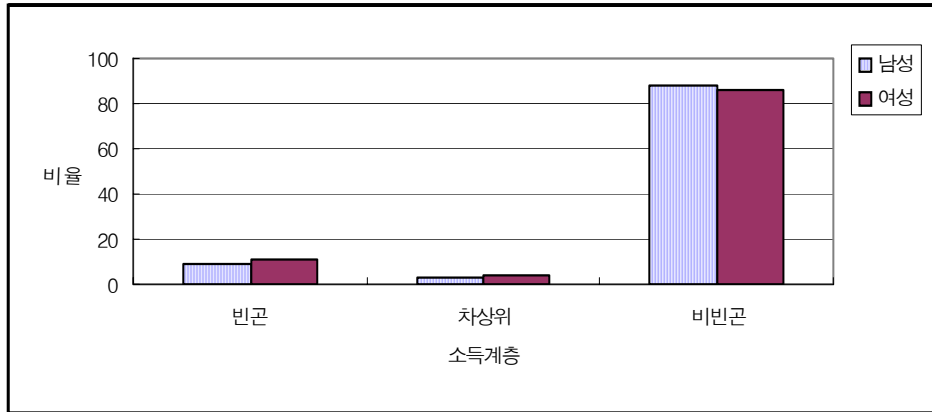
근로빈곤과 관련된 전체 경제활동인구⁶⁾ 대비 빈곤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19,380천 명 중 남성이 11,520천명, 여성이 7,865,479명이며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집단의 비중은 10.58%, 차상위 계층 비율은 3.8% 정도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집단의 비율은 8.8%,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3.5%로 나타나 여성의 빈곤 및 차상위 집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6> 2004년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총 경제활동인구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11520	7865	1013	832	402	298	10100	6734
비율 (단위: %)	100 (59.42)	100 (40.58)	8.80 (54.9)	10.58 (45.1)	3.49 (57.42)	3.80 (42.58)	87.71 (60)	85.62 (40)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소득계층별 남녀의 비율

6) 노동패널조사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노동패널조사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제7차 (200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재량외 2006)



<그림 Ⅲ-5>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비율

구체적으로 각 소득 집단별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세분화하여 소득계층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았다. <표 Ⅲ-7>을 보면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집단인 취업빈곤인구가 남성은 877천명이고 여자는 748천명으로 전체 빈곤인구 중에서 남성은 40%, 여성은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과거 빈곤의 원인을 실업과 경제활동무능력으로 인한 소득의 원천상실에 두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빈곤인구의 30~40%가 취업인구라는 점은 빈곤문제의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어야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내에서는 30%가 취업인구이지만 전체 취업빈곤인구 중에서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전통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월등하게 높다고 알려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집단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은 빈곤과 비빈곤을 수시로 넘나드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취업인구가 남성은 360천명, 여성은 252천명으로 전체 차상위인구 중에서 남성은 60%, 여성은 40%의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차상위집단 내에서 실업인구가 남성과 비슷한 7%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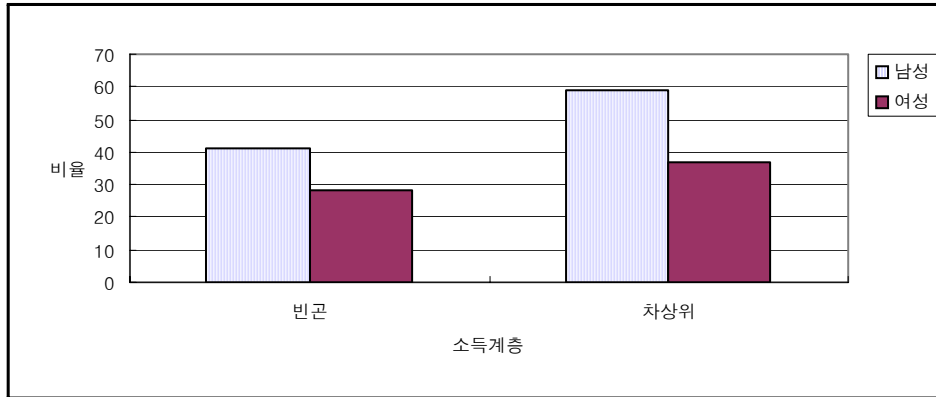
어서 이들 집단에 대해 근로장애요인을 제거해 주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 빈곤인구 중 비경활 인구가 70%로 비빈곤계층의 52%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여성 비경활빈곤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근로애로요인 및 구직포기요인 등을 알아보는 것이 여성의 잠재적 근로빈곤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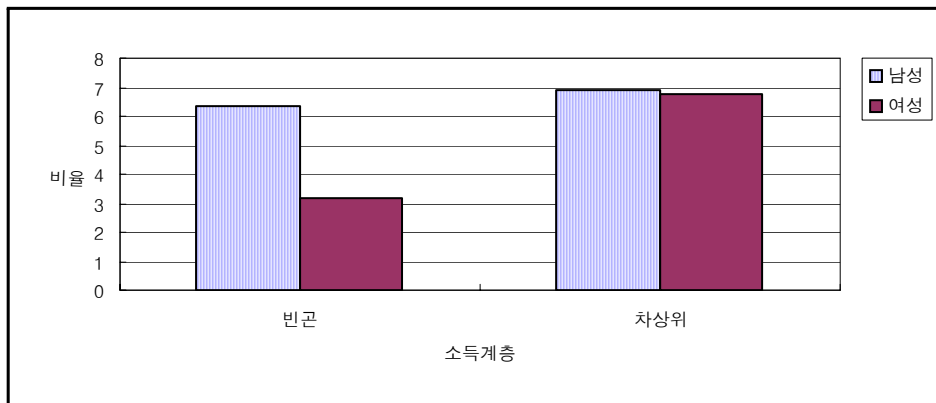
<표 III-7> 15세 이상 소득계층별 취업/실업/비경활 비중

구분			빈도(단위: 천명)	비율(단위: %)
빈곤	취업	남성	877	40.94(53.96)
		여성	748	28.49(46.04)
	실업	남성	136	6.36(61.82)
		여성	84	3.20(38.18)
	비경활	남성	1129	52.71(38.63)
		여성	1794	68.31(61.37)
차상위	취업	남성	360	58.96(58.84)
		여성	252	36.58(41.16)
	실업	남성	42	6.89(47.59)
		여성	46	6.73(52.41)
	비경활	남성	209	34.14(34.82)
		여성	391	56.68(65.18)
비빈곤	취업	남성	9700	69.92(60.34)
		여성	6375	45.13(39.66)
	실업	남성	402	2.90(52.79)
		여성	360	2.55(47.21)
	비경활	남성	3771	27.18(33.78)
		여성	7392	52.33(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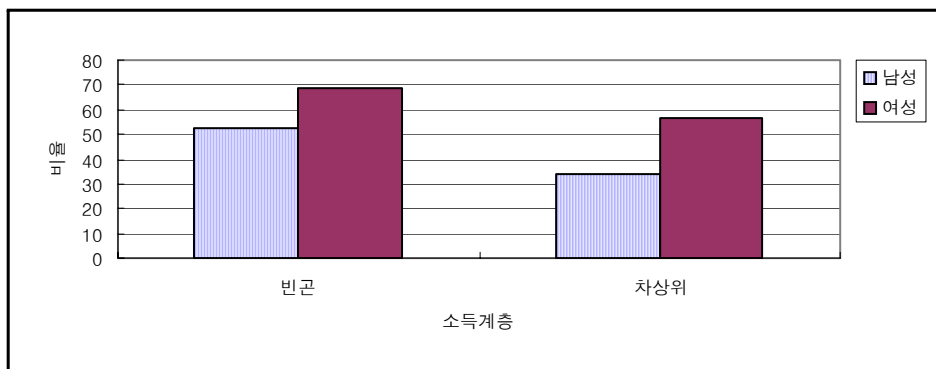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유형별 남녀의 비율



<그림 Ⅲ-6>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취업인구 비중



<그림 Ⅲ-7>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실업인구 비중



<그림 Ⅲ-8> 15세 이상 빈곤 및 차상위인구의 비경활인구 비중

마지막으로 총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활 인구 중 빈곤과 차상위, 비빈곤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I-8>과 같다. 전체 취업자 중 빈곤 집단은 8.8% 수준이며 여성은 취업자 중 빈곤집단의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8%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차상위 집단의 비중도 여성취업자의 3.42%에 비하여 남성은 3.29%로 여성취업자의 빈곤집단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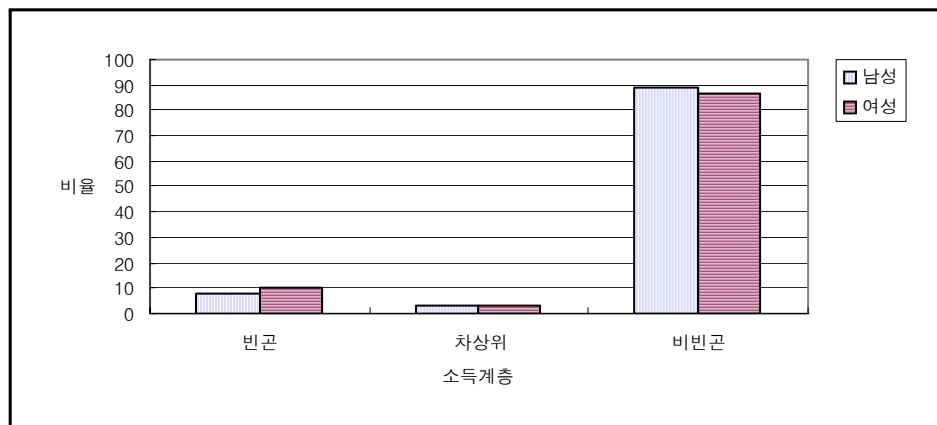
다음으로 실업집단을 보면 전체 실업자 중 빈곤집단의 비중은 약 21%이고 차상위집단을 포함할 경우 거의 30%에 육박하여 여전히 빈곤과 실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빈곤집단의 비중이 약 23%이고 여성은 17.16%로 나타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은 7.26%, 여성은 9.4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빈곤층의 경우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조건 및 종사상지위, 그리고 산업, 직종별 분포 등이 빈곤문제를 노동시장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주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실업빈곤층의 경우 이들의 과거 근로경험 및 직종, 인적자본축적수준, 원하는 직장과 직종 등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실업빈곤층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특히 실업빈곤층의 경우는 높은 근로욕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실업의 경험이 이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빈곤층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경활집단을 살펴보면 전체 비경활인구 중 약 20%가 빈곤집단에 속하며 약 4%가 차상위 집단에 속한다. 남성은 22%, 여성은 18.73%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비경활빈곤인구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여성의 비율이 61%에 이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비경활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성근로빈곤문제를 논함에 있어 비경활집단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비경활여성에 대한 문제는 절을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Ⅲ-8> 취업/실업/비경활 인구 중 소득계층별 분포

취업집단	총 취업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10940	7375	877	748	360	252	9700	6374
비율 (단위: %)	100 (59.73)	100 (40.27)	8.02 (53.96)	10.15 (46.04)	3.29 (58.84)	3.42 (41.16)	88.69 (60.34)	86.44 (39.66)
	100		8.80		3.34		87.66	
실업집단	총 실업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580	490	136	84	42	46	40	360
비율 (단위: %)	100 (54.22)	100 (45.78)	23.47 (61.82)	17.16 (38.18)	7.26 (47.59)	9.47 (52.41)	69.28 (52.79)	73.37 (47.21)
	100		20.56		8.22		71.22	
비경활집단	총 비경활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5109	9577	1129	1794	209	391	3771	7392
비율 (단위: %)	100 (34.79)	100 (65.21)	22.10 (38.63)	18.73 (61.37)	4.08 (34.82)	4.08 (65.18)	73.81 (33.78)	77.19 (66.22)
	100		19.90		4.09		76.01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소득계층별 남녀의 비율



<그림 Ⅲ-9> 취업자 중 빈곤집단의 분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빈곤 및 차상위 집단 중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비중도 적으나 실질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의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높다. 전체 취업자 측면에서 빈곤비중을 살펴보아도 취업자 중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 집단 중 여성비중의 증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들 개인의 구체적인 사황을 개괄하기로 한다. 이들의 인구학적 사황, 근로관련 사황 등을 살펴본다.

나.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규모와 인구학적 프로파일

① 소득계층별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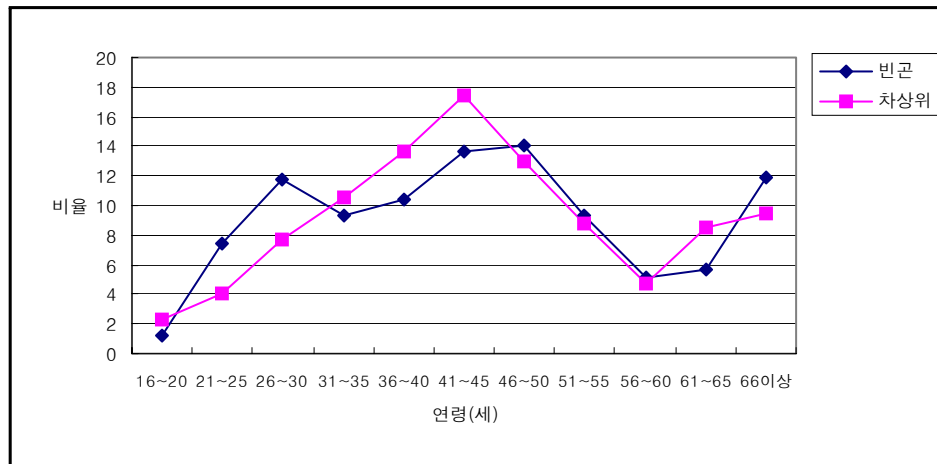
전체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III-9>와 같다.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6세에서 50세, 41세~45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유사한 연령분포를 보이고는 있으나 보다 젊은 연령대의 분포가 높아 전체적으로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의 빈곤비율 및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여성의 연령분포를 보면 여성역시 전체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분포와 유사하나 66세 이상의 고령자 빈곤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상위의 경우도 50대 후반을 기점으로 비중이 낮아지다가 60세 이후에는 다시 가파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0~45세 분포가 전체에 비하여 다소 높아 40대가 빈곤의 가장 주된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하게 차상위집단의 경우 30대 중반이 오히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젊은 세대의 빈곤화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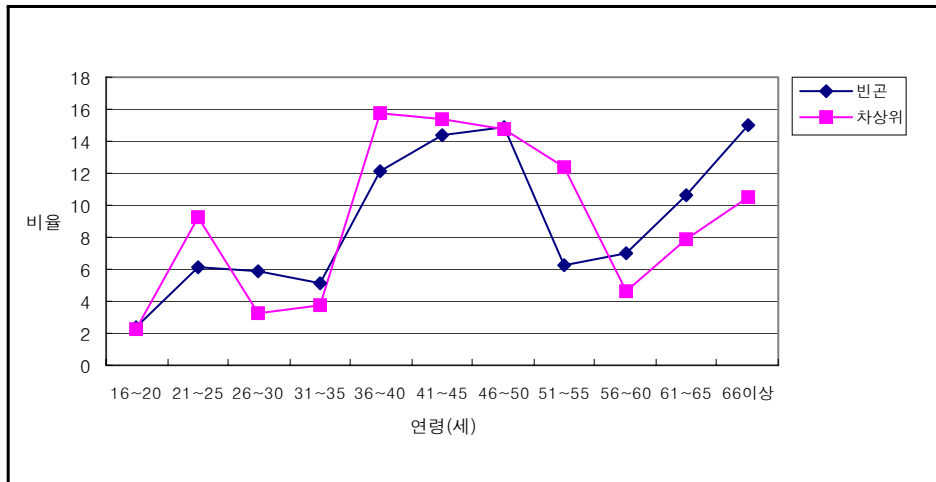
<표 Ⅲ-9> 소득계층별 연령분포

(단위: %)

연령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6~20	1.80	1.28	2.43	2.28	2.26	2.31	1.18	0.67	1.96
21~25	6.85	7.43	6.16	6.18	4.01	9.28	7.27	3.70	12.69
26~30	9.06	11.77	5.88	5.84	7.64	3.28	12.02	10.88	13.74
31~35	7.38	9.27	5.17	7.72	10.50	3.76	13.32	14.70	11.22
36~40	11.22	10.42	12.16	14.54	13.70	15.75	14.57	15.33	13.42
41~45	13.96	13.61	14.38	16.56	17.39	15.38	15.94	15.74	16.24
46~50	14.45	14.08	14.89	13.76	13.04	14.80	13.66	14.68	12.10
51~55	7.96	9.37	6.31	10.23	8.74	12.37	9.56	9.75	9.27
56~60	6.04	5.19	7.03	4.73	4.77	4.68	6.57	7.82	4.68
61~65	7.92	5.63	10.60	8.30	8.56	7.93	3.53	3.99	2.82
66이상	13.36	11.95	15.00	9.84	9.40	10.48	2.39	2.73	1.8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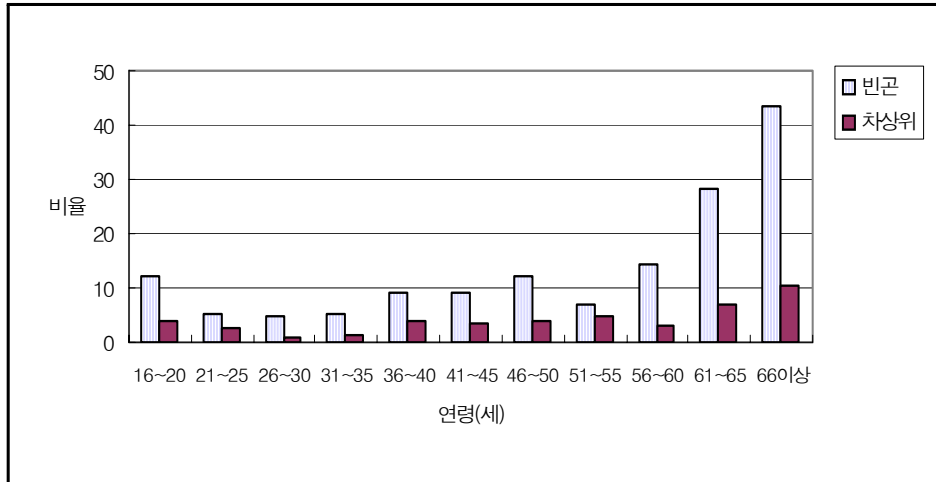
<그림 Ⅲ-10> 소득계층별 연령분포(남성)



<그림 Ⅲ- 11> 소득계층별 연령분포(여성)

남성을 보면 오히려 빈곤의 주 연령층이 46~50세로 여성에 비하여 다소 높은 연령대를 보인다. 그러나 차상위의 경우 40대 초반이 가장 주된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의 차이점은 여성의 경우 연령이 60세를 넘을 경우 근로빈곤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오히려 40대의 근로빈곤 비율이 높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기대여명이 긴 여성들이 더욱 빈곤화의 어려움 속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2>는 여성의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집단에서 빈곤인구의 비율이 1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5% 안팎의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잠시 10%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30대에서 40대에 걸쳐서 1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후반에는 15%대로 급격히 상승하고 60대 초반에는 30%, 60대 후반을 넘어서면 거의 45%의 여성 근로인구가 빈곤계층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령집단에서 차상위 계층의 분포도 빈곤계층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2>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그림 Ⅲ-13>의 남성의 경우를 보면 여성과 달리 청소년 근로집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20대 초반의 근로집단에서 15%에 가까운 빈곤률을 보이고 있고 20대 후반에 9%로 다소 낮아져서 60대 초반까지는 5%에서 10%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나타내다가 66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집단에서 빈곤인구가 25%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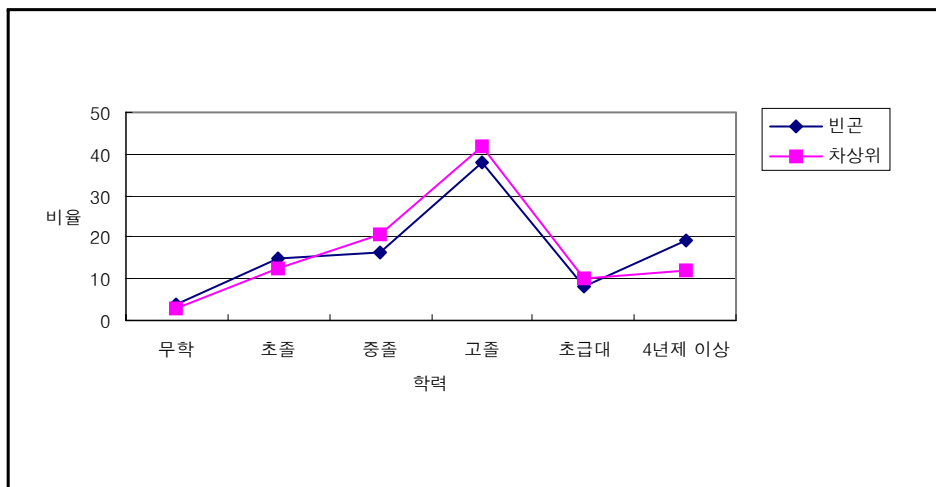
고령자 집단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빈곤의 경향이 심화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자녀양육과 근로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빈곤계층이 10%를 넘나드는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연령집단의 근로여성에게 차별화된 빈곤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로인구에 편입된 집단의 빈곤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층 취업 연계형 복지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소득계층별 학력 및 혼인상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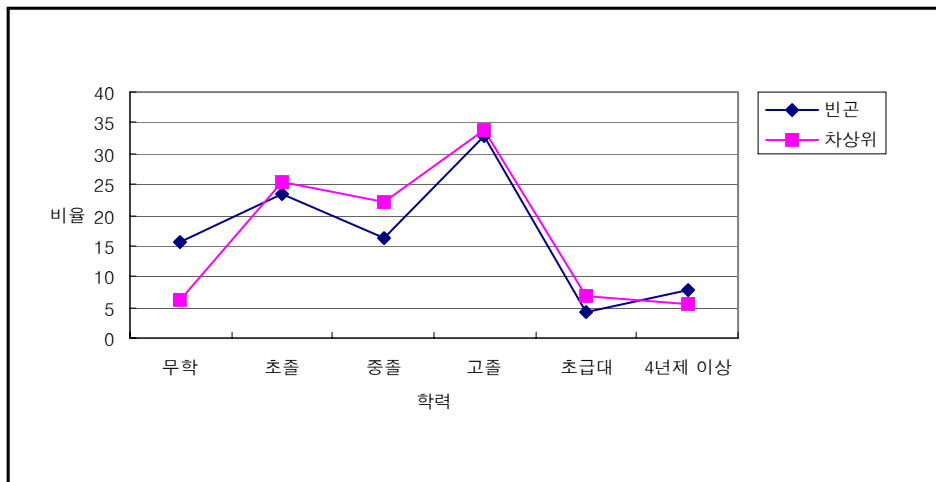
〈표 III-10〉 소득계층별 학력분포

[illegible]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집단의 경우 근로빈곤 중 저학력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성역시 고졸집단의 빈곤비중이 높으나 중졸이하 집단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집단의 비중은 1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며 차상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고령자 집단의 평균학력이 매우 낮은 것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4> 소득계층별 학력분포(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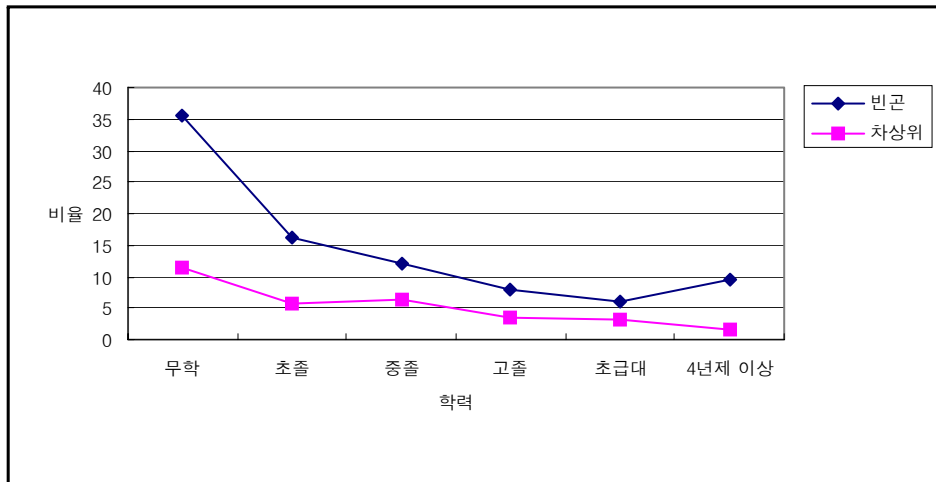


<그림 Ⅲ-15> 소득계층별 학력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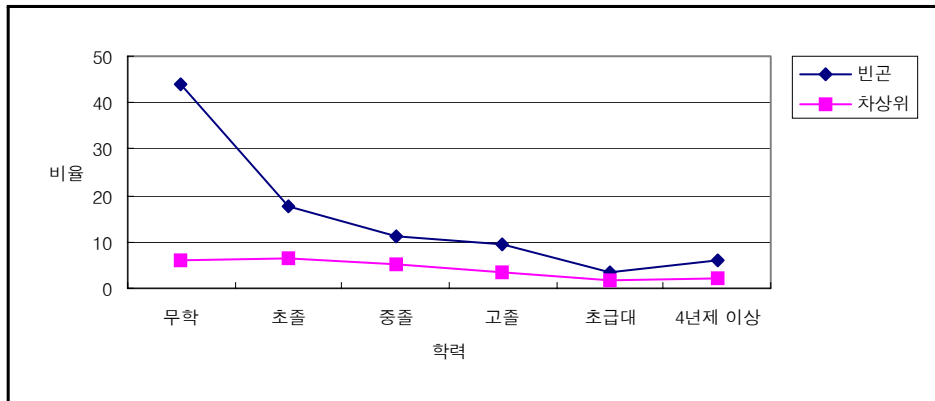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면 무학집단의 경우 빈곤 및 차상위 집단이 약 50%를 차지하여 빈곤화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고졸집단의 빈곤비중이 높으나 고학력집단의 빈곤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집단 전체의 27% 이상이 초급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중졸이하 집단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집단의 비중은 1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차상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고령자 집단의 평균학력이 매우 낮은 것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학력별로 보면 무학중 근로빈곤 및 차상위의 비중이 약 47%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초급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6>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그림 III-17〉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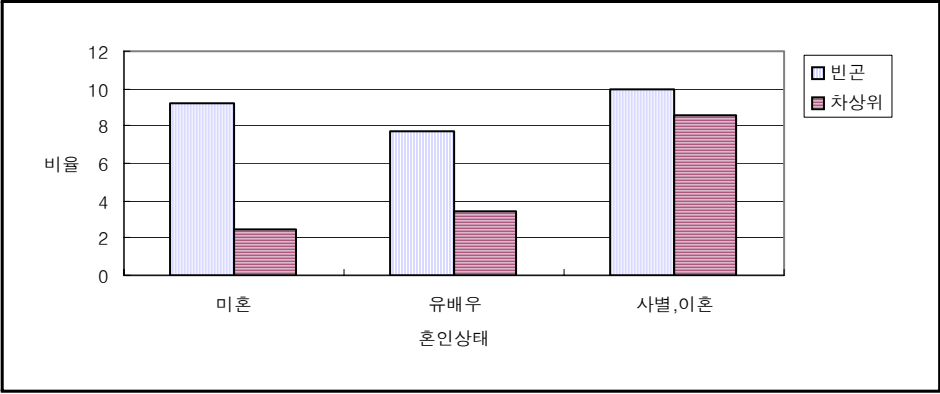
〈표 III-11〉에서 집단별 혼인상태분포를 살펴보면 빈곤집단 중 대다수는 유배우를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빈곤층 중 유배우집단의 비중이 68%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빈곤집단이나 차상위 집단에 있어서 사별이나 이혼의 비율이 2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비빈곤집단에서 사별 및 이혼의 비율이 10%에 이르지 못함을 볼 때 매우 높은 빈도이다. 이 같은 사항은 또 다른 축인 각 혼인 집단 내에서의 소득 계층별 분포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8>과 <그림 III-19>에 나타난 혼인상태 중 빈곤비중을 보면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빈곤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녀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 중 사별 및 이혼한 집단의 빈곤비율은 24%에 달하는데 반하여 남성은 10%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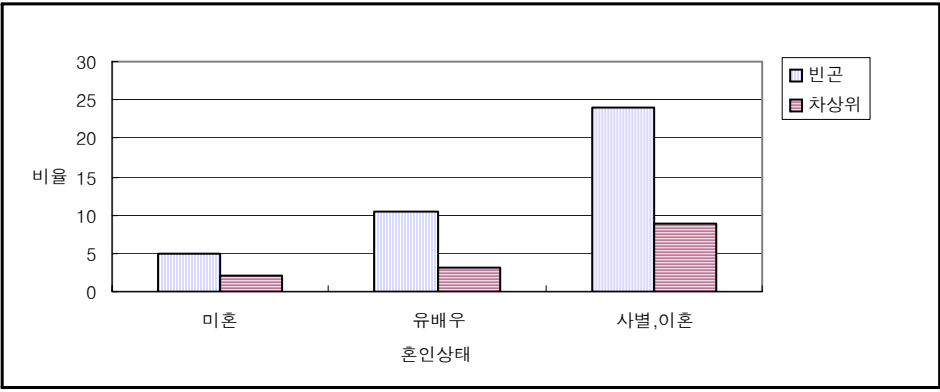
〈표 Ⅲ-11〉 소득계층별 혼인상태분포

(단위: %)

[illegible]



<그림 III-18>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그림 III-19>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2. 여성근로빈곤계층의 근로실태

가. 업종 및 직종별, 사업체규모 및 근속년수별 분포

이어서 남녀근로빈곤집단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종별,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산업에서 가장 빈곤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등 1차산업 종사자이다. 전체 빈곤집단 중 이들 집단의 비중은 1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림어업 종사자 중 26%가 빈곤집단이다. 이어서 빈곤집단 중 제조업이 약 17%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빈곤 집단의 도소매 및 소비

자용품수리업종 종사자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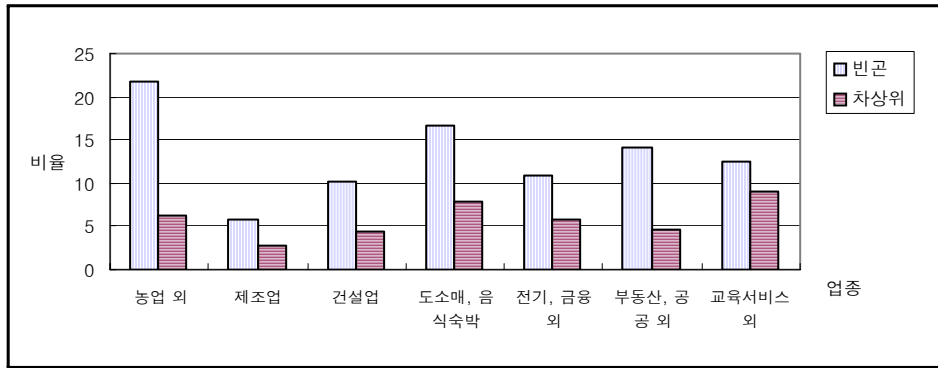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여성근로빈곤집단의 업종분포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전히 빈곤집단 중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개인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차상위 집단의 경우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소매업,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차상위 집단에서는 오히려 농림어업 등 종사자 보다 이들 업종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 집단들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대표적으로 저임금에 고용지위가 불안한 집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빈곤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Ⅲ-12〉 소득계층별 업종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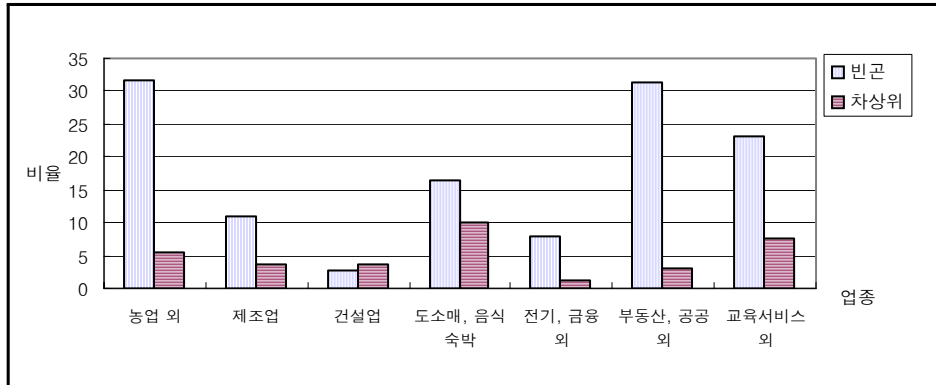
[illegible]

남성은 이와 달리 빈곤집단 중 건설업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차상위 집단 중 건설업 근로자의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빈곤집단 내에서의 업종분포가 여성근로자의 경우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에는 특징적인 몇 가지 업종이 눈에 띄나 남성빈곤층의 경우에는 농림어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등,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빈곤층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근로빈곤 집단에 대한 대책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과적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20> 업종 내 소득계층별 분포(남성)

업종에 따른 빈곤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업종 내에서 각 계층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III-20>과 <그림 III-21>은 각 업종 내 소득계층별 분포를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각각 본 것이다. 남성의 경우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빈곤비율이 22%정도임에 반해 여성은 3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빈곤화의 가능성이 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있어서는 남, 여 모두 15%정도가 빈곤인구이고 나머지 업종에 있어서 남자는 대개 10%안팎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은 1차 산업 이외에도 사업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업종에서 1차 산업과 맞먹는 비율의 종사자가 빈곤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도 25%에 달하는 많은 여성들이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Ⅲ-21> 업종 내 소득계층별 분포(여성)

이어서 남녀 근로빈곤집단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 Ⅲ-13>과 같다. 빈곤집단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이다. 이어서 단순노무근로자, 농업 및 어업부문 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빈곤비율이 높은 것은 상당부분 여성의 빈곤집단 중 동 직종 분포가 높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의 빈곤집단 비중이 26.8%에 달해 빈곤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단순노무직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18%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의 빈곤집단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빈곤과 여성빈곤의 양상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사무직원의 빈곤집단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상위 집단은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의 비중이 더욱 높아 동 직종에 근로하는 집단의 경제적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 차상위 집단의 경우 약 40%가 서비스 및 시장판매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의 비중도 20%를 상회하여 이 두 직종을 합하면 약 60%에 달하여 빈곤화의 우려가 높은 대표직종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부문은 모두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 근로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빈곤가능성 상위 직종이 매우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 개발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3> 소득계층별 직종분포

(단위: %)

직종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13	3.16	0.93	1.31	2.23	0.00	2.21	3.32	0.54
전문가	3.85	4.86	2.68	2.13	3.64	0.00	10.52	9.26	12.43
기술공 및 준전문가	7.84	9.29	6.14	7.61	11.10	2.68	14.07	15.09	12.51
사무직원	6.68	3.39	10.52	7.00	4.12	11.07	13.64	10.99	17.67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20.56	15.20	26.81	25.48	15.30	39.90	21.67	14.80	32.11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17.75	15.61	20.25	10.41	10.22	10.69	4.64	4.54	4.8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3.49	19.24	6.79	12.43	14.35	9.72	13.70	18.11	6.9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94	10.58	7.03	12.41	18.20	4.21	10.88	14.83	4.88
단순노무종사자	18.75	18.66	18.85	21.21	20.84	21.73	8.66	9.05	8.0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음으로 남녀근로빈곤집단의 사업체규모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4>와 같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범주에서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60%안팎의 분포를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고 빈곤집단이나 차상위집단 보다는 비빈곤집단의 경우 여성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징적인 사항은 비빈곤집단의 경우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9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빈곤 및 차상위 집단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20%정도가 분포되어 있어서 오히려 대규모사업장에서 근로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빈곤집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취약한 근로조건과 낮은 종사상지위에 놓여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사업장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업체규모에 따라 좀 더 차별화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4〉 소득계층별 사업체규모분포

(단위: %)

[illegible]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분포를 살펴보면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비빈곤집단에서는 20%안팎의 비율을 보이는데 반하여 빈곤층은 40%, 차상위계층은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일수록 근속년수가 짧다. 이는 단기계약직이나 임시 및 일용직근로자등 고용지위가 불안한 근로자들이 주로 이들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15〉 소득계층별 근속년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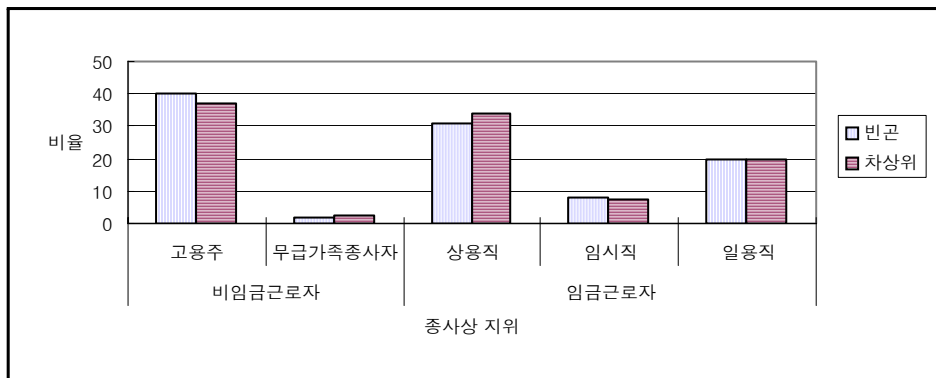
(단위: %)

[illegible]

나. 종사상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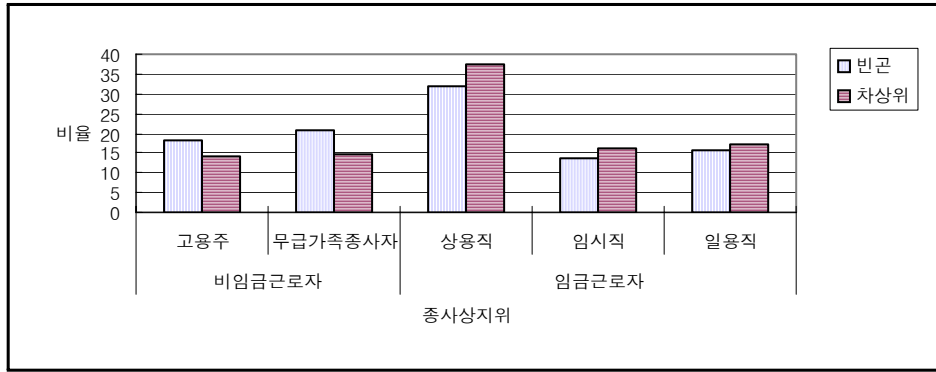
남녀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노동시장 지위와 빈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⁷⁾. 전체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집단이 고용주 및 자영업자 집단과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이다. 이어서 빈곤집단 중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차상위 계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는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근로빈곤집단의 경우 상용직근로자의 빈곤비중이 가장 높으나 이어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여성의 고용지위 상 고용주나 자영업자보다는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는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빈곤집단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여성임시직 근로자의 빈곤화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에서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 분포(남성)

7) 종사상 지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는 기준을 사용함.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이 중 임금근로자를 '고용계약의 유무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하며 상용직이 아닌 임시, 일용고의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상용직은 '고용계약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회사의 소정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고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여성비정규직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김종숙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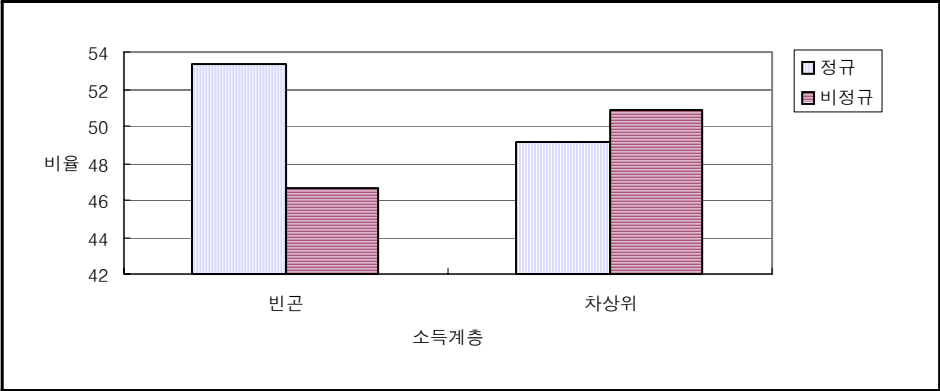
<그림 Ⅲ-23>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 분포(여성)

남성은 여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지위는 고용주/자영업자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이분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 집단의 비중이 높다.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곤집단 중 임시직근로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빈곤집단과 차상위집단의 종사상지위 분포가 상이한 것과는 달리 남성근로자의 경우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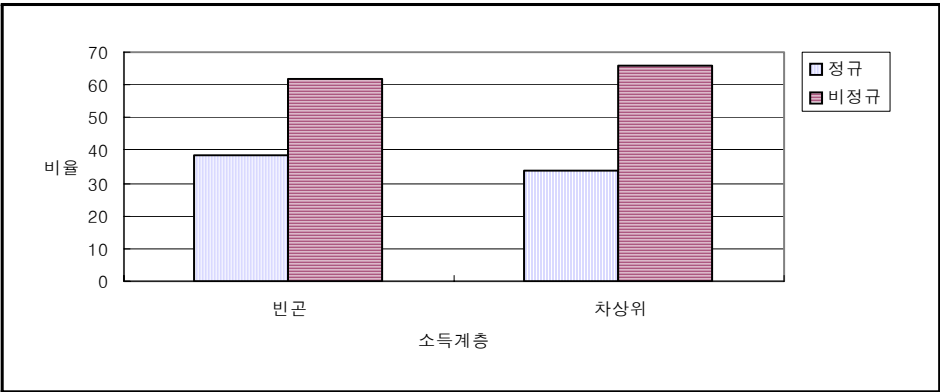
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최근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더불어 근로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노동패널자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실태와 더불어 응답자 개인이 본인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의 종사상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정확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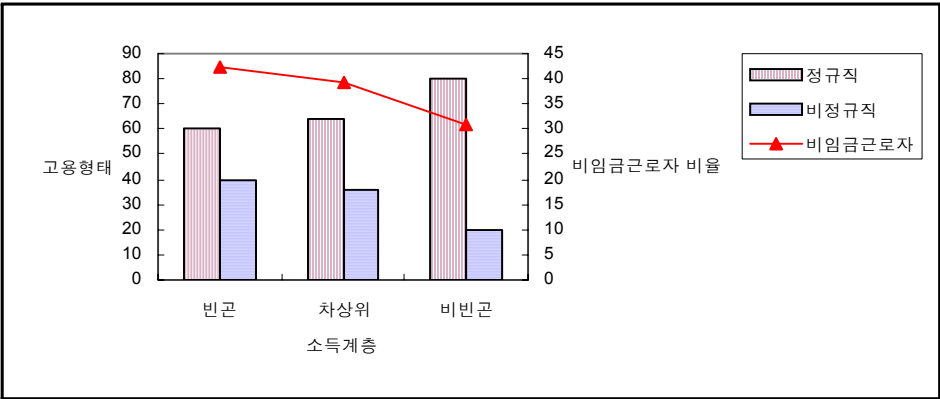
전체 근로빈곤집단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는 각각 46.2%와 53.8%로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상위 집단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57.6%로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 비중보다 오히려 높다. 이러한 정규와 비정규직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상위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여 여성 차상위 집단 중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66%에 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50.8%로 나타나 여성빈곤 및 차상위집단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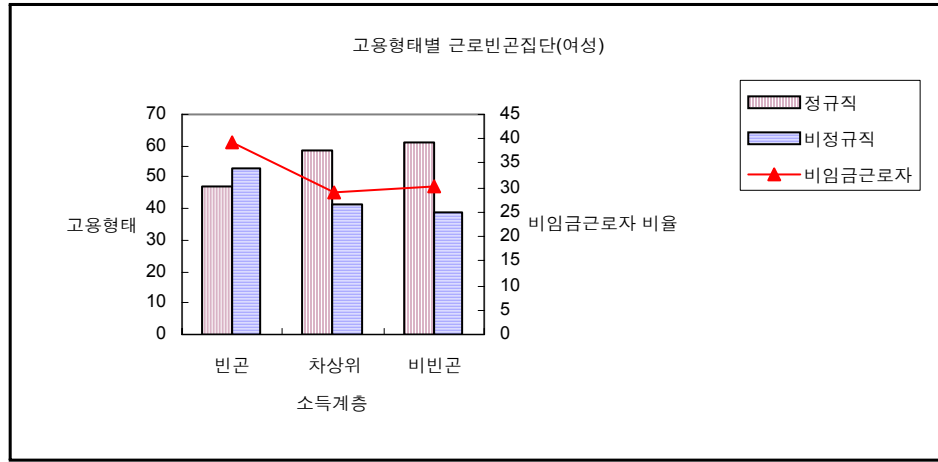
<그림 Ⅲ-24> 소득계층별 주관적인 고용형태 분포(남성)



<그림 Ⅲ-25> 소득계층별 주관적인 고용형태 분포(여성)



<그림 Ⅲ-26> 소득계층별 고용형태분포(남성)



<그림 Ⅲ-27> 소득계층별 고용형태분포(여성)

<표 Ⅲ-16>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분포

(단위: %)

고용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기계약근로	1.93 (4.86)	6.91 (13.04)	6.15 (17.01)	7.99 (19.33)	4.2 (21.02)	6.49 (16.82)	4.11 (18.83)	6.58 (16.46)
계약1년 이하	1.93 (4.86)	6.91 (13.04)	6.15 (17.01)	7.99 (19.33)	2.93 (14.67)	5.25 (13.58)	2.96 (13.57)	5.49 (13.73)
계약1-3년	0 (0)	0 (0)	0 (0)	0 (0)	0.62 (3.08)	0.53 (1.36)	0.56 (2.55)	0.46 (1.15)
계약3년 초과	0 (0)	0 (0)	0 (0)	0 (0)	0.35 (1.77)	0.34 (0.88)	0.32 (1.47)	0.3 (4.52)
파견근로	1.72 (4.33)	0.54 (1.02)	1.74 (4.81)	5.00 (12.11)	1.1 (5.48)	1.08 (2.8)	1.16 (5.31)	1.17 (2.93)
용역근로	7.92 (19.97)	1.78 (3.36)	5.54 (15.32)	3.14 (7.61)	2.34 (11.69)	2.31 (5.98)	2.81 (12.89)	2.29 (5.72)
독립도급근로	16.98 (42.83)	12.99 (24.52)	15.30 (42.35)	1.35 (3.26)	8.38 (41.94)	12.68 (32.83)	9.17 (42.07)	12.31 (30.77)
가내근로	0.72 (1.82)	6.97 (13.15)	0 (0)	0 (0)	0.48 (2.43)	3.94 (10.19)	0.49 (2.23)	4.07 (10.17)
시간제근로	12.10 (30.53)	23.79 (44.90)	7 (20.51)	23.83 (57.69)	3.49 (17.44)	12.12 (31.39)	4.19 (19.20)	13.58 (33.95)

* 주: 괄호 안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비정규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이와 달리 독립도급근로자의 빈곤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독립도급 외에도 가내근로 등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고용형태가 오히려 빈곤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집단에서는 1년 이하의 유기계약 근로, 즉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고용형태와 빈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여성파견의 차상위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매우 높아 여성파견이 단순 업무의 저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남성파견은 보다 전문적인 업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다. 근로빈곤 집단의 근로조건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들의 임금을 중심으로 개괄하기로 한다. 연간근로소득의 경우 빈곤집단 여성은 세후 평균 연간 534만원, 남성은 714만원으로 나타나 남성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7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차상위집단의 경우는 남성 971만원, 여성은 677만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73.8%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빈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비빈곤은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의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빈곤집단의 성간 소득차이가 적은 편이다.

<표 III-17> 근로빈곤집단의 연간 근로소득(세후) 분포

(단위: 만원)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714.33	971.05	2570.03
여성	534.46	677.00	1528.34

이들의 월평균 임금 및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빈곤집단 남성은 월평균 106.7만원, 여성은 72.6만원을, 비임금 근로빈곤 집단의 경우 남성은 월평균 72.2만원, 여성은 48.3만원 수준을 나타낸다. 이 금액을 비빈곤 집단과 비교해보면 남성근로빈곤 임금근로자는 비빈곤 임금근로자의 53.6%, 여성은 61.2%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시에 비임금 근로자의 사향을 보면 빈곤한 집단은 남성은 비빈곤 근로자의 24.7%, 여성은 28.4%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대비 시간당 임금이 산출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절대 근로소득의 액수는 여성근로빈곤 집단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또한 성간의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격차는 비빈곤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녀의 성별 임금격차가 빈곤층 집단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8>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소득

(단위: 만원)

월평균 임금 및 소득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06.70	72.67	104.15	71.90	198.92	118.73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2.17	48.28	100.39	49.61	292.30	169.69

2004년도 현재 근로 인구 중 2003년에 근로소득이 없었던 인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4배정도 비율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90%이상이 작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76%정도만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24%정도는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집단에서는 여성의 경우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었던 인구가 40%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근로빈곤계층에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 혹은 소득의 안정적 공급이 빈곤탈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주관적인 고용안정성 여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Ⅲ-19> 전년도(2003년) 연간 근로소득 유무

(단위: %)

근로소득유무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근로소득이 있음	79.49	63.32	86.49	81.07	94.99	77.21

이들의 주관적인 고용안정성을 살펴보면 빈곤집단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0>은 근로자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 고용안정성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인구가 빈곤계층에서 10%안팎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근로빈곤여성의 경우는 12.8%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4~5%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다른 계층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표 III-20> 근로빈곤집단의 고용안정성 분포

(단위: %)

고용안정성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용불안정	9.34	12.85	4.50	5.23	4.65	4.49

이렇듯 고용불안을 느끼는 집단의 경우 그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1>를 통해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계약종료 혹은 만료 및 임시직, 현재 프로젝트 종료 등의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안이 여성과 남성에서 40~50%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빈곤집단은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이 되며 여성은 그 비율이 더욱 높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의 고용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1> 고용불안을 가지는 집단의 불안원인

(단위: %)

고용불안원인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 종료	24.48	23.04	7.77	52.39	16.20	24.72
임시직	9.11	11.66	47.46	22.30	12.10	20.45
프로젝트 종료	14.23	6.72	44.76	0.00	17.67	2.22
특정 계절에만 수행	0.00	14.09	0.00	0.00	0.00	1.98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탐색 중	19.30	13.74	0.00	0.00	8.56	9.64
퇴직연령에 도달	2.78	0.00	0.00	0.00	8.47	4.16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	11.36	14.94	0.00	25.31	5.58	15.24
직장의 경영상 이유	14.96	0.00	0.00	0.00	23.21	16.98
기타	3.77	15.80	0.00	0.00	8.22	4.6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특히 여성근로빈곤집단에서는 특정 계절에만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고용불안정을 느끼는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빈곤에 처한 여성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농림업, 어업 등 주로 1차 산업에 분포해 있거나 계절적으로 수요의 분포가 다른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고령자, 저학력 여성근로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여성 집단에서는 불완전 취업 이외에도 학업이나 가족부양, 건강 등의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차상위 집단에서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으로 빈곤집단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이나 의료정책, 교육비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빈곤집단에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 탐색’을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남녀각각 약 19%, 14%의 높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무 불일치 및 교육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이직가능성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체 집단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 탐색을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

게 나온 반면에 빈곤계층에서는 남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예상한 근로가능기간을 보면 여성빈곤집단의 경우 비빈곤이나 차상위 집단에 비하여 1년 이하의 단기간 근로 예상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년을 초과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를 예상하는 집단은 여성근로빈곤집단의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과 빈곤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III-22> 근로자의 주관적 예상근로가능기간

(단위: %)

예상근로기간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년 이하	59.34	75.27	21.35	43.53	55.28	58.52
1-3년 이하	28.46	19.66	52.54	25.31	24.56	22.66
3년 초과	12.19	5.07	26.12	31.16	20.16	18.8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근로시간을 통하여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빈곤집단의 경우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비중이 높다.

<표 III-23> 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단위: %)

근로시간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간제	12.10	23.79	7.41	23.83	3.49	12.12
전일제	87.90	76.21	92.59	76.17	96.51	87.8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근로시간의 규칙성면에서도 빈곤집단은 전체에 비하여 불규칙적이고 계절적 영향을 받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집단은 성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차상위집단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불규칙하고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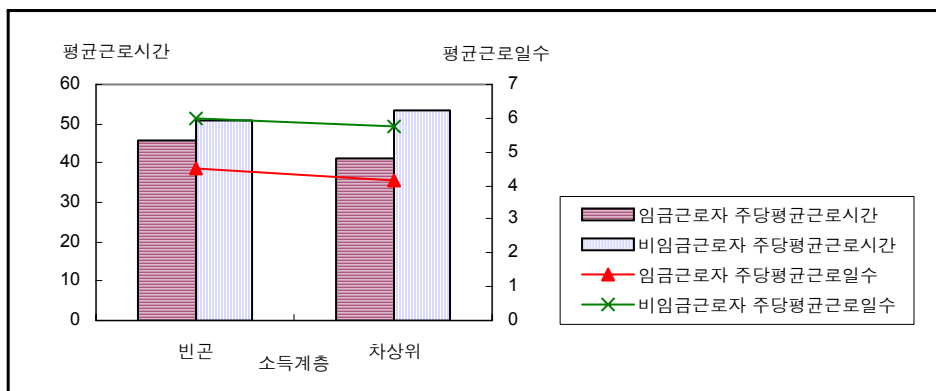
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24> 근로시간의 규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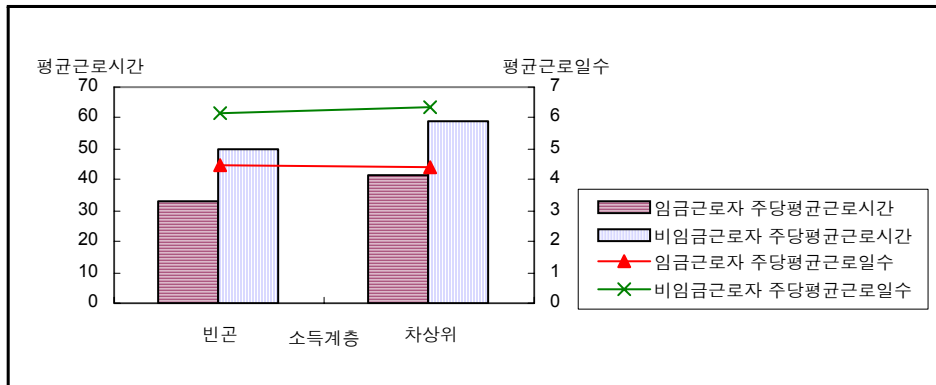
(단위: %)

근로시간의 규칙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규칙적	63.84	61.68	60.69	82.02	84.56	89.11
불규칙적이거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음	6.17	10.36	2.71	2.21	3.35	4.19
불규칙적이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음	29.99	27.96	36.60	15.77	12.08	6.7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근로시간량을 살펴보면 빈곤층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평균 남성은 45.8시간을 여성은 32.9시간을 근로하고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시간이 큰 특징이 있다. 이 시간량은 전체 집단 남성 48.5시간, 여성 39.8시간보다 다소 적은 시간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에 비하여 빈곤집단의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차상위 계층의 여성근로자는 전체보다 많은 시간동안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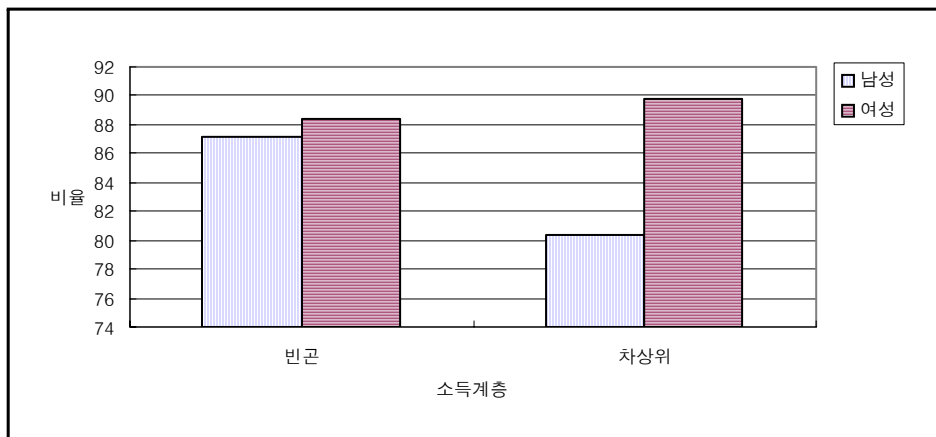


<그림 Ⅲ-28>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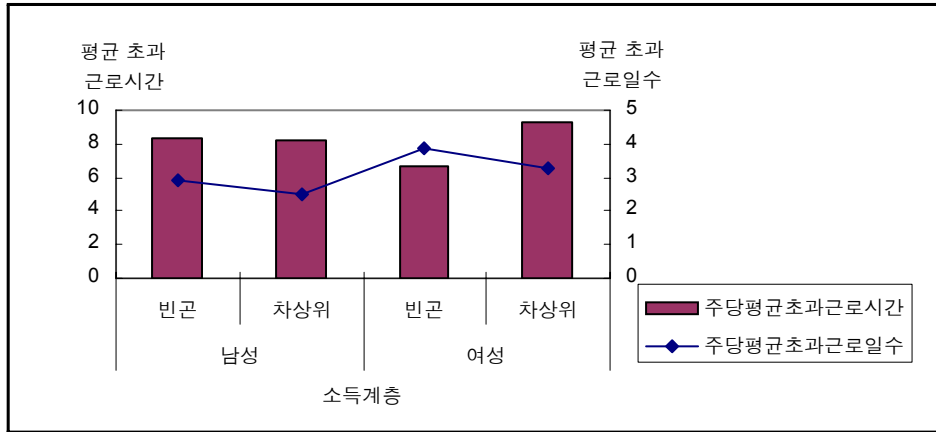
<그림 III-29>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여성)

빈곤집단은 초과근로를 하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남성의 약 70%가 초과근로를 하는데 반하여 빈곤남성은 약 87%를, 전체 여성이 약 82%인데 반하여 빈곤여성은 88% 이상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그림 III-30>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초과근로일과 주당평균 초과근로시간 면에서도 빈곤층은 전체에 비하여 다소 적은 수준을 보이나 차상위 여성근로자들은 전체나 빈곤층보다 많은 근로시간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31>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 및 근무일수

<표 Ⅲ-25>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집단의 주된 평소 활동

(단위: %)

주된 평소활동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로 일을 하고 있음	97.29	77.62	99.00	90.35	98.84	84.92
주로 가사 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0.79	20.33	1.00	9.65	0.46	12.88
기타	1.92	2.05	0.00	0.00	0.7	2.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함,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활동을 하는 것임(2004년 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취업자 개인 설문지)

<표 Ⅲ-25>는 근로빈곤집단의 주된 평소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빈곤, 비빈곤을 막론하고 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에 가깝게 나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전체에서 84%가 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13.5%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빈곤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근로빈곤여성의 20%, 차상위 계층에서의 10%가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라는 화두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써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은 빈곤정책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주로 고용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빈곤정책과는 보다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빈곤집단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율이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더욱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고용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빈곤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는 차상위 계층이 빈곤집단에 비하여 더 나은 상황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가입도 빈곤집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인은 근로빈곤집단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이거나 이들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는데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6〉 주된 일자리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

(단위: %)

사회보험 가입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민연금	30.85	23.20	30.77	14.31	60.10	41.69
특수직연금	2.00	0.54	0.00	2.29	10.88	9.19
산재보험	33.43	22.20	35.85	21.46	66.31	44.96
고용보험	35.32	25.90	34.50	27.53	66.95	48.27
건강보험	34.05	24.45	35.31	23.81	71.99	50.79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 및 장애인이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빈곤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을 수급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특히 차상위 계층에서는 수급경험이 남녀 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경활인구나 실업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면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이들 빈곤근로자들이 각종 복지체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이 취업하고 있더라도 빈곤한 근로자

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급조건을 개선하고 이들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Ⅲ-27> 사회보험 급여 수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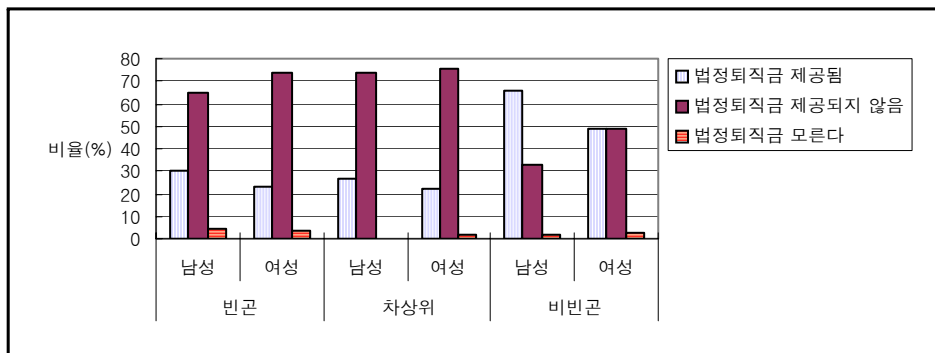
(단위: %)

사회보험 수급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음	3.46	4.18	7.81	1.97	3.26	1.54
받은 적이 없음	96.54	95.82	92.19	98.03	96.74	98.4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여기에서 사회보험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실업급여, 특례노령연금 등이 포함됨

라. 임금근로자의 복리후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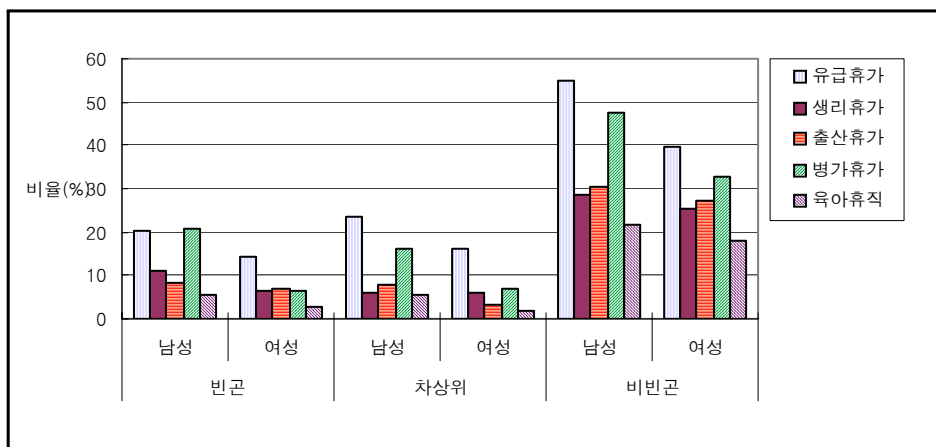
이어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Ⅲ-32>는 직장에서 제공되는 퇴직금지원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빈곤집단의 경우 전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집단 중 여성은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비중이 더욱 낮아 빈곤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Ⅲ-32> 법정퇴직금 지원현황

퇴직금의 소득 보장적 기능은 근로자들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노후의 생활보장기능과 근로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비하는 실업 보험적 기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근로빈곤이 여성, 특히 고령자 및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금 제도에 대한 남·여 성차별과 빈곤집단에 집중된 열악한 퇴직금 지원상황은 여성근로자의 빈곤을 악화 내지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근로빈곤문제의 측면에서 퇴직금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서 <그림 III-33>은 직장에서 임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가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것이다. 먼저 직장에서 제공여부를 살펴보면 유급휴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비율이 낮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은 51%가 유급휴가를 제공받고 여성은 37%정도만이 유급휴가를 지원받는다. 심지어 모성보호와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있어서도 여성근로자가 취업한 사업장의 복리후생 상황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3> 휴가지원현황

기타 생계와 관련된 보조금지원의 경우 식사, 학비 등에 대한 지원여부는 근로빈곤집단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 전체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집단의 임시 및 일용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빈곤 집단이 주로 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때 이들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I-28> 생계보조금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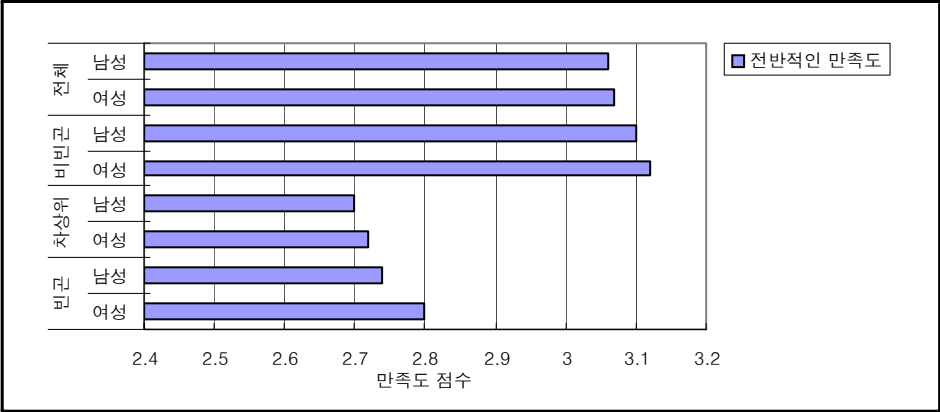
(단위: %)

생계보조금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식사비용	54.81	50.93	58.29	53.45	75.41	61.03
학비	6.61	3.25	5.89	0.85	31.49	16.82
사내근로복지기금	3.79	1.54	3.76	0.00	14.26	6.94
경조사	16.38	9.51	19.99	8.53	41.83	25.01
휴가비용	11.16	11.26	21.63	12.46	32.44	20.83
보육비	2.81	2.35	2.46	0	14.33	9.10

마. 근로자의 근로관련 및 생활 만족도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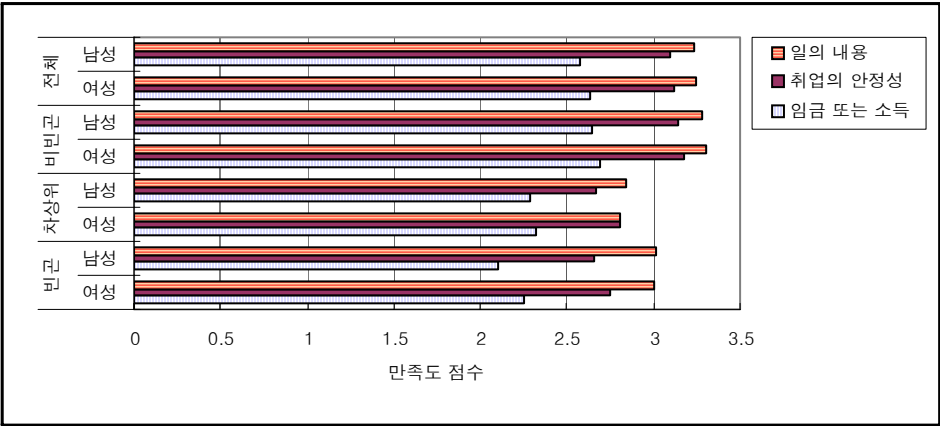
근로자의 만족도는 일의 내용, 취업안정성, 소득이나 임금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근로시간과 환경 만족도 등으로 측정해볼 수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빈곤 및 차상위집단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빈곤집단과 차상위, 비빈곤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로 일의 내용이나 안정성, 임금 및 소득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빈곤집단의 상당수가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보유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취업만족도가 저하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근로빈곤정책에서 취업알선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그러한 실태와 관련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 빈곤한 집단이 본인의 학력이나 기술수준과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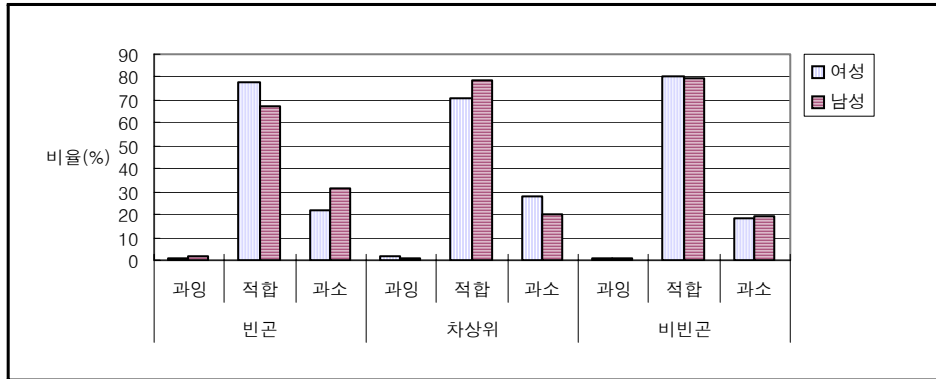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5점이 만점이다.

<그림 III-34> 남·여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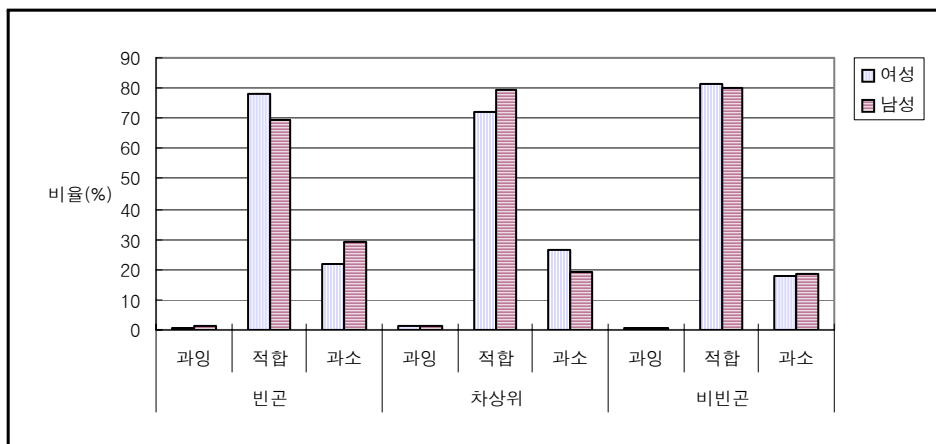


<그림 III-35> 일의 내용, 취업의 안정성 및 소득에 대한 만족도 점수

본인의 학력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요구하는 학력 간의 불일치, 본인이 보유한 기술과 요구되는 기술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빈곤집단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빈곤집단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그러한 경향이 강하나 차상위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직업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의 창출 및 연계 정책이 빈곤을 탈출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등 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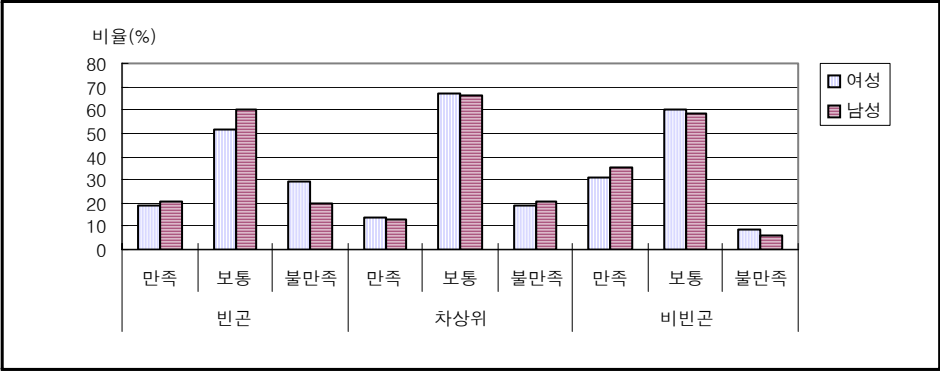


<그림 Ⅲ-36> 남·여근로자의 교육 불일치정도



<그림 Ⅲ-37> 남·여근로자의 기술 불일치정도

이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및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불만족의 비중이 빈곤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보통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8> 남·여 근로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근로빈곤집단은 비빈곤에 비하여 전 영역에서 측정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에 대한 불만족이 약 80%에 달하며 여가 등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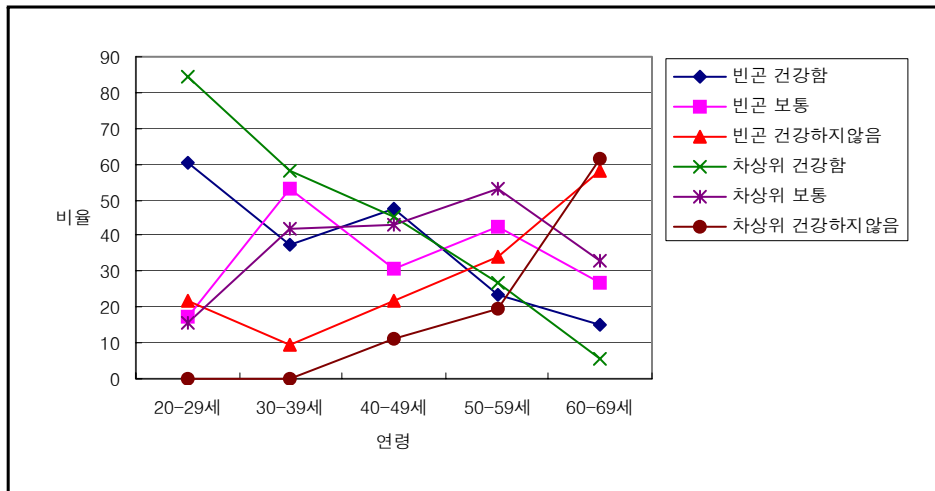
<표 III-29> 항목별 생활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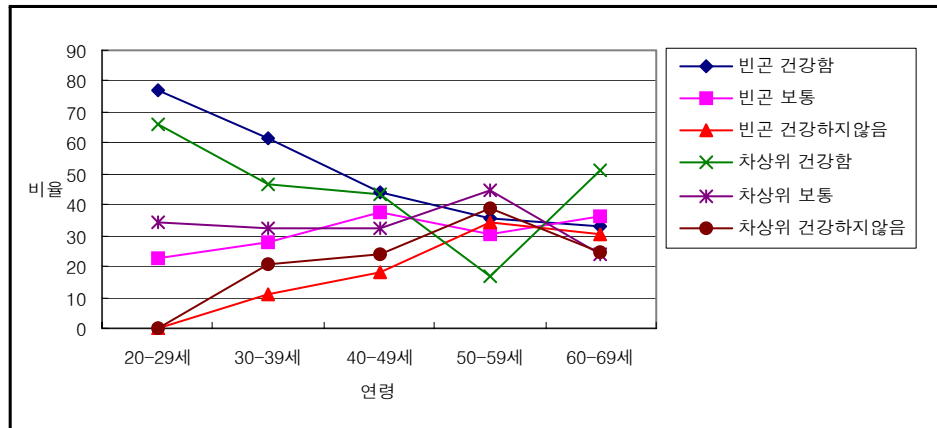
항 목	빈곤			차상위			비빈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여성									
가족의 수입	3.03	18.24	78.73	1.77	25.59	72.64	13.13	51.20	35.67
여가생활	7.04	39.41	53.54	4.26	45.64	50.10	20.06	46.97	32.97
주거환경	20.16	53.62	26.22	19.25	56.46	24.29	37.03	49.28	13.70
가족관계	37.74	54.25	8.01	42.74	47.25	10.01	59.65	37.18	3.17
친인척관계	30.07	58.95	10.98	29.06	63.11	7.83	42.37	53.70	3.93
사회적 친분관계	29.74	62.16	8.10	34.34	54.47	11.19	39.74	56.99	3.27
전반적인 만족도	19.00	51.88	29.12	13.68	67.41	18.91	30.61	60.39	8.99
남성									
가족의 수입	2.51	22.96	74.53	5.73	26.45	67.82	13.91	51.82	34.27
여가생활	10.08	53.63	36.29	9.12	47.79	43.09	23.05	49.92	27.03
주거환경	19.01	56.92	24.07	22.51	59.05	18.44	40.18	48.45	11.37
가족관계	46.42	50.47	3.11	46.17	49.19	4.64	63.68	34.42	1.90
친인척관계	36.34	59.04	4.62	31.97	59.18	8.85	48.40	49.10	2.51
사회적 친분관계	36.90	60.18	2.92	25.96	65.68	8.36	45.19	52.79	2.02
전반적인 만족도	20.62	59.98	19.40	12.94	66.37	20.69	35.47	58.14	6.40

여성들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 등의 사항 외에도 가족관계나 인척관계에서도 불만족 사항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인간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보아도 여성빈곤층의 불만족이 남성빈곤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빈곤집단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근로가 기본적으로 육체 및 정신에 대한 건강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여부는 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근로빈곤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성 근로빈곤 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본인을 평가한 경우가 전체 및 차상위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고 연령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은 근로빈곤집단의 주관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이 오히려 차상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근로빈곤의 경우 본인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근로 장애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여성들이 비하여 낙관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9>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여성)



<그림 III-40>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남성)

흥미로운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근로상태의 경우 여성근로빈곤 집단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객관적인 장애나 활동의 제약은 남성 집단에게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빈곤 집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감각기관의 장애비중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육체적인 제약이나 활동의 제약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교해볼 때 빈곤집단의 육체 및 활동제약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를 저해하는 요인,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저소득을 초래하는 요인 등이 건강상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Ⅲ-30> 남·여 근로자의 계층별 장애 및 활동제약 여부

(단위: %)

장애 및 활동제약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감각기관 장애	2.51	3.22	4.13	0.00	0.80	0.53
육체적제약 여부	10.08	9.81	7.49	6.33	1.79	2.78
활동제약여부1	19.01	5.61	1.63	0.94	0.68	0.79
활동제약여부2	46.42	1.27	0.87	0.94	0.12	0.16
활동제약여부3	36.34	2.56	1.82	1.94	0.29	0.39
활동제약여부4	36.90	15.27	2.64	6.23	1.74	2.60

* 주: 활동제약1: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활동제약2: 옷 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활동
 활동제약3: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 집밖활동
 활동제약4: 작업 활동

바. 직업훈련 사항

직업훈련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적인 수단이다.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이들의 취업지위향상으로 이어져 빈곤을 완화하는 것으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표 Ⅲ-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빈곤집단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차상위 집단, 전체집단으로 갈수록 직업훈련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빈곤집단과 차상위집단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는 여성 집단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직종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고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 비중이 높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김종숙 외, 2005).

<표 III-31> 남·여근로자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직업훈련경험 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업훈련경험 있음	4.92	3.09	7.98	3.96	11.02	7.64

* 주: 직업훈련은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의 지원형태를 보면 다음의 <표 III-32>와 같다. 반수 이상이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이고 정부지원 훈련의 비중이 비빈곤 집단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빈곤여성의 경우 정부지원훈련 비중은 전체 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개인이 선택한 교육 훈련을 받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빈곤집단의 정부지원훈련 수급 비중을 파악하고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여성가입률이 낮아 발생하는 현상인지, 정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여성 빈곤근로자와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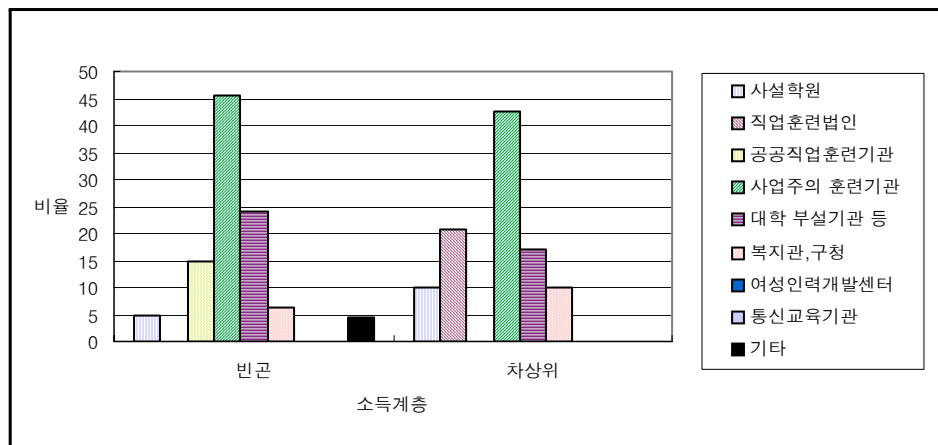
<표 III-32> 남·여근로자의 최근 받은 훈련지원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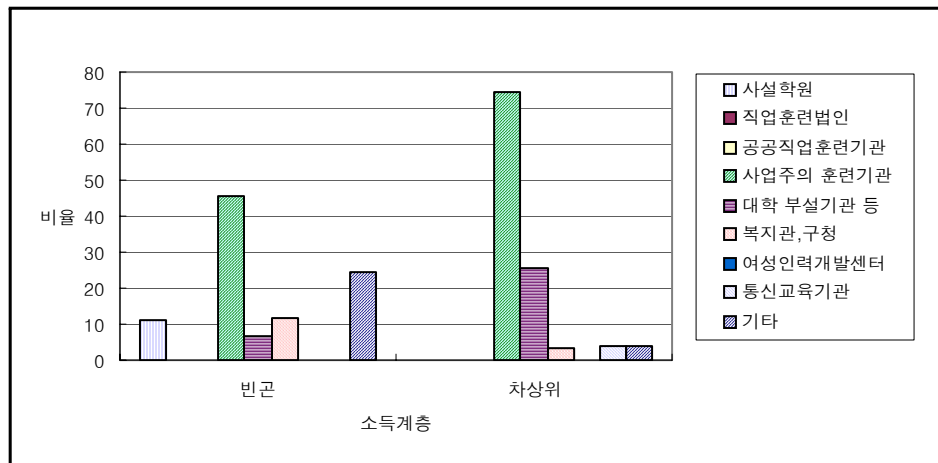
훈련지원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회사업무능력 향상훈련	55.05	53.47	44.65	40.22	67.60	58.95
정부지원 훈련	29.84	11.89	25.32	34.42	16.99	19.18
개인선택 교육훈련	10.15	34.65	22.34	25.37	12.73	17.07
기타	4.96	0.00	7.69	0.00	2.69	4.8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의 경우 남성 빈곤층은 근무 외의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77.47%), 여성은 근무 장소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55.74%). 정부지원 교육훈련 형태는 남성 근로빈곤 집단의 경우 고용보험의 재직자 직업훈련 비중이 61%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실업자 훈련, 기능사 양성훈련이나 정부

위탁훈련 비중이 높는데 반하여 여성 근로빈곤이나 차상위 집단은 기능사 양성훈련이나 정부위탁훈련 참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집단을 보면 고용보험 재직자 직업훈련 비중이 남녀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41〉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남성)



〈그림 Ⅲ-42〉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여성)

개인선택 교육훈련 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녀 근로빈곤 집단 공히 사업주의 훈련기관 비중이 약 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빈곤집단은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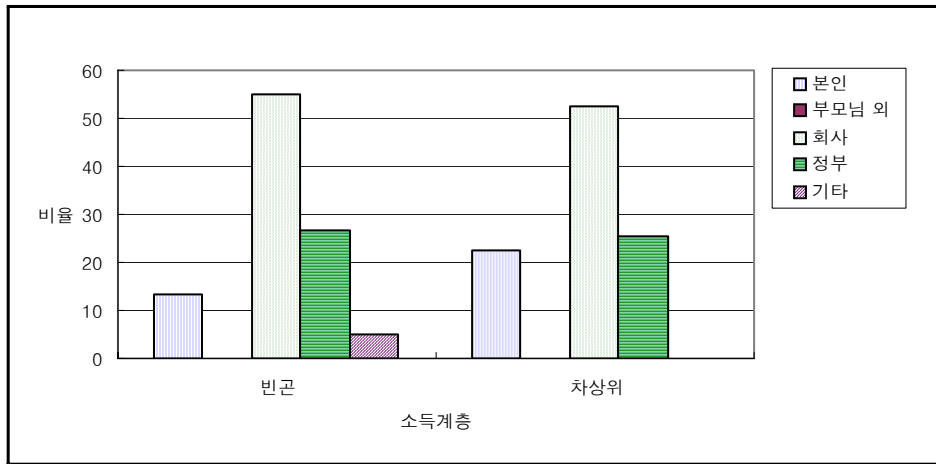
설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을 이용하는 비중이 24%에 달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이어서 공공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는데 반하여 여성근로빈곤집단은
사업주 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남성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성은 복지관
이나 구청, 사설학원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남성 근
로빈곤집단의 경우 보다 공공훈련기관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은 보다
개별화된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원인은 여성에게 적합한 훈련,
여성이 받고자 하는 훈련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복지관 구청 등이 여성에게 보다 유용하게 전달되는 경로이거나 하는 프로그램 상
의 차이, 전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표 III-33> 최근 받은 교육훈련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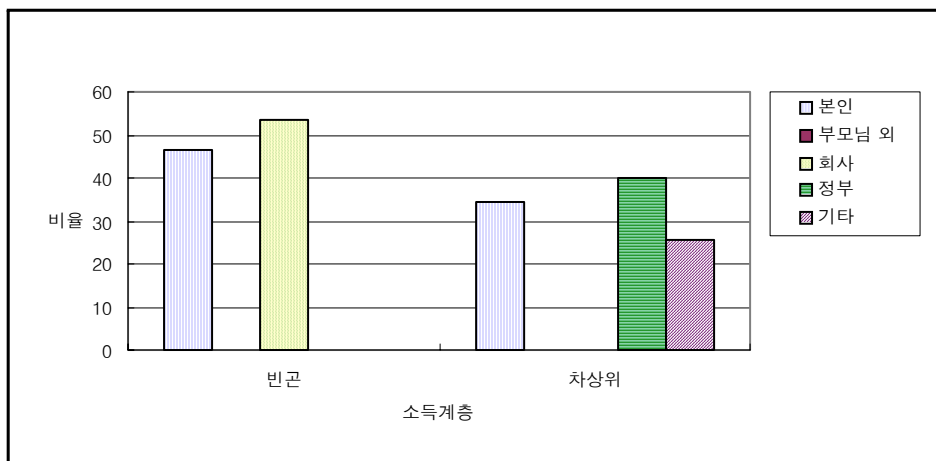
(단위: %)

교육훈련 목적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창업을 위해	5.25	0.00	9.18	25.37	1.42	5.20
(재)취업을 위해	10.11	0.00	0.00	0.00	2.18	4.16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84.64	71.13	83.13	74.63	92.16	84.46
자격증 취득을 위해	0.00	0.00	0.00	0.00	2.06	4.58
기타	0.00	28.87	7.69	0.00	2.18	1.6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최근 받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보면 남성 근로빈곤집단의 경우 재취업 및 창업
목적의 훈련 수급이 많고 남성 차상위의 경우는 창업목적의 훈련 수급이 많은 특
징이 있다. 여성은 오히려 차상위 집단에서 창업목적의 훈련수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빈곤집단과 차상위 집단 간의 훈련목적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43>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남성)



<그림 Ⅲ-44>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여성)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를 살펴보면 위의 교육훈련 기관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남성 빈곤집단의 경우 회사나 정부부담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근로빈곤 집단은 훈련의 본인부담이 46.5%에 달하여 훈련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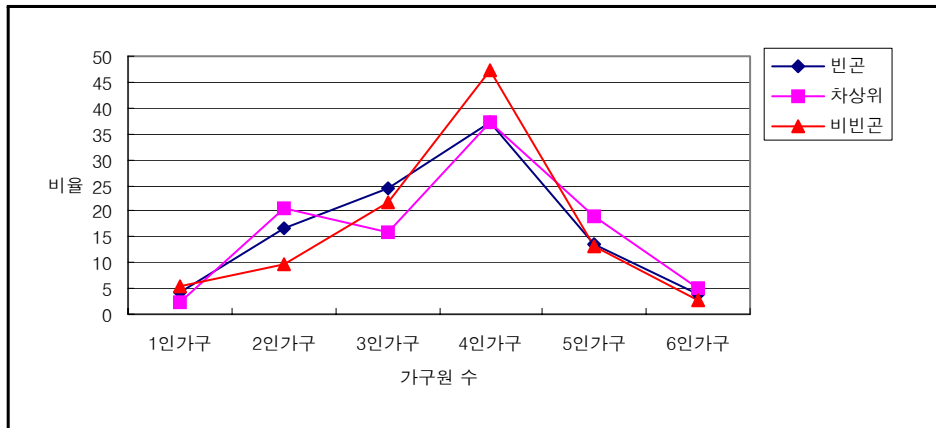
전장에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와 빈곤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전장에서 근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파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가구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 내 근로소득자 유무 및 가구형태(여성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등), 가구 내 취직아동 및 고령자 현황 등에 있어서 근로빈곤가구는 일반 가구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가구 중 근로여성이 속한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가 소속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7%를 나타낸다. 비빈곤 가구의 약 50.7%, 차상위 가구의 약 41.4%, 빈곤가구의 약 29.9%에 여성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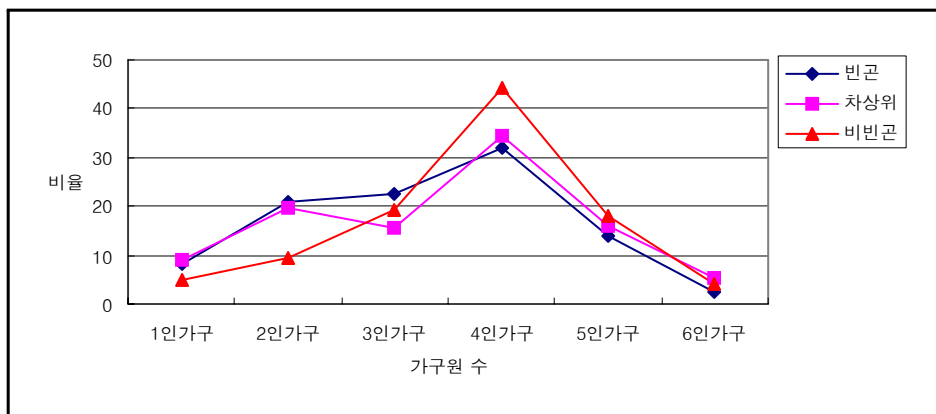
〈표 III-34〉 전체 가구 중 근로여성이 속한 가구의 분포

	빈곤층	차상위	비빈곤	전체
전체 가구 수	2,290,149	545,643	10,515,183	13,350,974
근로여성이 속한 가구 수	684,566	225,916	5,332,670	6,243,152
비율(%)	29.89	41.40	50.71	46.76

이어서 여성근로빈곤 집단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여성근로빈곤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순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비교하면 3인 이하 4인 가구 보다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 모자가정의 경우나 독거노인가구 등 대표적인 빈곤집단의 포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Ⅲ-45>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남성)



<그림 Ⅲ-46> 소득계층별 가구원수 분포(여성)

남녀 근로집단을 대상으로 가구주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남녀 가구주 비율을 보면 남성가구주는 82%, 여성가구주는 약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가구주 집단은 비빈곤이 73%, 차상위 계층이 2.8%, 빈곤이 6.3%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빈곤이 10.8%, 차상위 1%, 빈곤 2.4%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빈곤율은 88.9%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76.0%로 여성의 비빈곤율이 낮고 빈곤의 경우 7.7%, 여성은 16.7%로 여성의 빈곤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표 III-35> 소득계층별 가구주 비율

(단위: %)

	빈곤층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근로인구	877026	748323	360342	252101	9700456	6374961	10937824	7375385
가구주	694031	176442	303974	75872	7977733	799493	8975738	1051807
비율1(%)	6.35	2.39	2.78	1.03	72.94	10.84	82.06	14.26
비율2(%)	79.13	23.58	84.36	30.1	82.24	12.54	82.06	14.26
비율3(%)	7.73	16.78	3.39	7.21	88.88	76.01	100	100

*주: 1)비율1: 전체 근로인구 중 가구주의 비율
 2)비율2: 근로인구 중 가구주의 비율
 3)비율3: 전체 가구주에서 가구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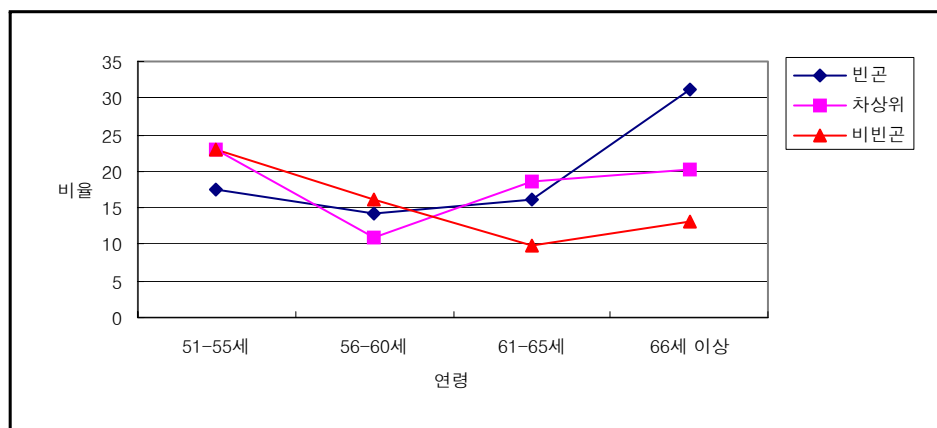
<표 III-36> 여성근로가구의 가구형태

가구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부모+부부+자녀	41118	6.01	9945	4.40	379282	7.11	430344	6.89
부부+자녀	338152	49.40	113058	50.04	3633483	68.14	4084692	65.43
부부가구	96368	14.08	36014	15.94	390530	7.32	522912	8.38
모자가구	116409	17.00	39338	17.41	456070	8.55	611817	9.80
부자가구	2004	0.29	2517	1.11	48012	0.90	52533	0.84
조손가구	8948	1.31	0	0.00	19996	0.37	28944	0.46
근로여성 1인 가구	58893	8.60	21727	9.62	315086	5.91	395706	6.34
기타	22675	3.31	3318	1.47	90211	1.69	116203	1.86
합계	684566	100	225916	100	5332670	100	6243152	100

여성은 혼인상태 등으로 인하여 빈곤화되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여성근로자 가구의 특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빈곤 집단인 68.8%에 비하여 빈곤집단은 부부+자녀의 구성이 50% 미만이다.

반면 모자가구의 경우 비빈곤 집단은 이 비중이 8.5%에 불과하나 빈곤집단에서는 1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부자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빈곤집단의 비중이 비빈곤 집단의 구성비에 비하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이 빈곤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어서 고령자의 상황을 개괄해 보면 빈곤집단일수록 고령자가 근로하는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빈곤가구의 경우 66세 이상이 약 13%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집단의 경우 이 비율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Ⅲ-47> 여성근로가구의 고령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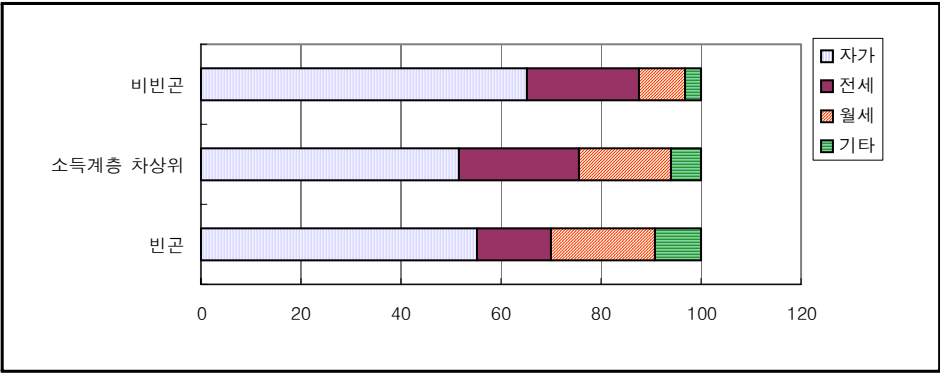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애로요인을 제거하여 근로를 통한 빈곤의 탈출을 꾀하는 것은 정부의 빈곤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한 근로애로 요인들이 많이 발견된다. 미취학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전체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9.4% 수준이다. 이들의 보육 상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타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보육 시설 이용이 저소득 가구에서 낮은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표 Ⅲ-37> 여성근로가구 내의 미취학아동 교육 및 탁아 서비스

서비스 시설	빈곤층		차상위		비빈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	1564	2.54	4022	35.67	90485	15.48	96071	14.61
민간 어린이집	26956	43.76	2412	21.39	107812	18.44	137180	20.86
시설놀이방	3299	5.36	0	0.00	15536	2.66	18835	2.86
직장보육시설	0	0.00	0	0.00	2468	0.42	2468	0.38
유치원	2840	4.61	8411	74.60	160114	27.39	171365	26.06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수	61604		11275		584631		657510	

*주: 비율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각 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

마지막으로 여성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입주형태를 보면 월세나 기타 등 주거가 불안정한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불안정성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Ⅲ-48> 여성 근로가구의 입주형태

4. 남녀취업자의 빈곤여부와 임금 결정요인

가. 남녀 근로자의 빈곤결정요인

근로빈곤가구에 속한 취업자와 근로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은 취업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취업자 개인의 측면에서 전체 근로집단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성별로 빈곤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가구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크게 빈곤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취업자와 비빈곤 가구에 속한 취업자를 식별하였다. 이후 각각의 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 모형에서 추정계수가 갖는 의미는 표본자료에서 독립변수 한 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0'의 값을 갖는 확률에 대하여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갖는 확률의 비율인 odds비율의 로그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 가이다.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β 는 추정될 계수벡터이며 e_i 는 오차항이다. 추정 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 x_i + e_i \quad (3-1)$$

종속변수는 근로빈곤과 비빈곤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text{Prob}(Y_i = j) = \frac{e^{\beta_j x_i}}{\sum_{k=0}^1 e^{\beta_k x_i}}, \quad (3-2)$$

여기서 오차항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와이불 분포(weibull)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의사결정시 J 개의 선택치를 가지고 있는데 J가 0이면 비빈곤, J가 1이면 근로빈곤이다. 근로빈곤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가능하다.

$$\text{Prob}(Y_i = j) = \frac{e^{\beta_j x_i}}{1 + \sum_{k=1}^2 e^{\beta_k x_i}}, \quad j = 1, 2 \quad (3-3)$$

$$\text{Prob}(Y_i = 0) = \frac{e^{\beta x_i'}}{\sum_{k=0}^2 e^{\beta_k x_i'}} \quad (3-4)$$

모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관심은 각 변수들이 각 선택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이다.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특정 설명변수의 값이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확률이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낸다. 선형 모형의 경우 추정 계수 값이 곧 한계효과를 의미하지만 비선형확률모형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할 때는 한계효과를 구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취업자가 빈곤가구에 속하면 ‘1’의 값을, 비 빈곤가구에 속하면 ‘0’의 값을 지닌다.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더미, 가구주 관계더미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 변수, 그리고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영업 여부, 임시·일용직 여부와 산업 및 직종 더미를 사용하였다.

<표 III-38>은 전체 근로집단, 남성 및 여성 근로집단에서의 빈곤여부 추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정결과 성과 가구주와의 관계 요인들은 취업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과 별 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확률은 적어지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다시 빈곤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혼/사별의 경우는 근로자개인이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높여준다. 특히 여성들에게 혼인상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혼에 비하여 유배우나 이혼/사별 모두 빈곤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이혼/사별 중인 취업자들이 미숙련근로자이거나 여성고령자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라는 점과 상응한다.

교육수준은 취업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육수준 변수들을 보면 대졸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전문대졸을 제외한 전 학력계층에서 빈곤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저학

력계층일수록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낮은 학력, 높은 연령,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혼인상태 등이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계층의 빈곤화에 대한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취업형태와 관련하여 임시·일용직 여부는 빈곤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와 남성근로자, 그리고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임시일용직에 근로한 집단은 빈곤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등에 종사할 때 빈곤가구에 속할 위험성을 높이거나 여성근로자에게는 유의하지 않다. 반대로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빈곤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직업이 관리자이거나 (준)전문가일 경우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

<표 III-38> 빈곤결정요인 분석

빈곤여부 판단기준: 최저생계비기준	종속변수(1: 빈곤 0: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상수항	0.4296(0.5283)	0.7208(0.4175)	0.4768(0.6672)
성별(1:남성 0:여성)	0.2438(0.1632)		
연령	-0.1331(0.0001)**	-0.1201(0.0015)**	-0.1600(0.0004)**
연령²	0.00135(0.0001)**	0.0012(0.0021)**	0.00172(0.0002)**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3652(0.1669)	0.1507(0.6152)	1.3950(0.0163)*
이혼/사별	0.9251(0.0055)**	0.3784 (0.4864)	1.6088(0.0101)*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785(0.6879)	-0.2107(0.7010)	-0.4409(0.1565)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0.5014(0.2901)	0.9101(0.2840)	-1.1748(0.0453)
자녀	-0.0760(0.7773)	-0.2132(0.4915)	0.2177 (0.7001)
기타	-0.5436(0.2797)	-0.4779(0.4922)	-1.0554(0.1818)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1.6900(0.0001)**	1.3915(0.0036)**	1.7770(0.0002)**
초졸	0.9252(0.0001)**	0.8506(0.0026)**	1.0184 (0.0059)**
중졸	0.7251(0.0004)**	0.6922(0.0064)**	0.7769(0.0347)*
고졸	0.5266(0.0013)**	0.4079(0.0412)*	0.7113(0.0197)*
전문대졸	-0.0522(0.8122)	0.0647(0.8127)	-0.2468(0.5277)
전년도 근로소득 유무 (있었음: 1, 없었음: 0)	-0.8802(0.0001)**	-1.2282(0.0001)**	-0.8174(0.0001)**
고용형태(상용직 기준)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0.3052(0.0256)**	0.6572(0.0002)**	-0.2329(0.2916)
임시·일용직	0.8785(0.0001)*	1.0171(0.0001)**	0.5924(0.0019)**
산업(제조업 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4620(0.0491)*	0.8138(0.0101)*	0.2659(0.4824)
건설	-0.2163(0.2791)	0.1052(0.6637)	-1.9546(0.0618)
도소매, 음식숙박	-0.2539(0.1979)	-0.00291(0.9914)	-0.5884(0.0595)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0.4268(0.0617)	-0.0732(0.7836)	-1.3920(0.0152)*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0.2058(0.2772)	0.4221(0.0856)	0.00242(0.9941)
교육서비스 외	0.0611(0.7344)	0.0758(0.7694)	-0.0273(0.9257)
직종(단순 노동직 기준)			
관리자, (준)전문가	-0.4394(0.0200)*	-0.3518(0.1345)	-0.4505(0.1824)
사무직	-0.3876(0.0832)	-0.5229(0.1198)	-0.0223(0.9451)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0.1326(0.4659)	-0.1563(0.5525)	0.0192(0.9412)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0.3337(0.2070)	-0.6318(0.0941)	-0.1421(0.7143)
기능원 및 조작원	-0.2398(0.1398)	-0.2776(0.1618)	-0.0559(0.8582)
관찰치수	61151	3675	2440
LR χ^2	419.0804	218.4048	246.5034

*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p-value

2) * p-value < 0.05, ** p-value < 0.01.

이어서 본 연구의 관심 중 하나인 차상위 집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상태를 빈곤, 차상위, 비빈곤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가질 경우 종속변수를 나누는 기준상 순서가 발생한다. 소득의 비율에 의거한 구분이므로 빈곤선 아래에 위치할 경우 빈곤, 빈곤선의 120% 하에 위치할 경우 차상위, 그 이상의 경우 비빈곤이 된다. 이렇듯 순서가 발생하는 경우 순차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순차로짓 모형의 경우 $Y^* = \beta'x + e$ 일 경우 종속변수는 비 관측치 이며 다만

$$\begin{aligned} Y=0 & \quad \text{if } Y^* \leq \mu_1 \\ Y=1 & \quad \text{if } \mu_1 < Y^* \leq \mu_2 \\ Y=2 & \quad \text{if } \mu_2 < Y^* \end{aligned} \quad (3-5)$$

여기서 μ_1 은 빈곤선을 의미하며 μ_2 는 빈곤선의 120% 수준에 달하는 차상위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0일 경우는 빈곤, 1일 경우는 차상위, 2일 경우는 비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 종속변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text{Prob}(Y=0) &= \Phi(\mu_1 - \beta'x) \\ \text{Prob}(Y=1) &= \Phi(\mu_2 - \beta'x) - \Phi(\mu_1 - \beta'x) \\ \text{Prob}(Y=2) &= 1 - \Phi(\mu_2 - \beta'x) \end{aligned} \quad (3-6)$$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III-39>와 같다.

<표 III-39> 빈곤결정요인 분석(ordered logit)

빈곤여부 판단기준: 최저생계비기준	종속변수(0: 빈곤 1: 차상위 2: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상수항0	-0.02846(0.7005)	-0.5229(0.5008)	-0.2387(0.8061)
상수항1	0.1148(0.7005)	0.9244(0.2340)	0.6363(0.5128)
성별(1:남성 0:여성)	0.1972(0.1919)		
연령	0.1340(0.0001)**	0.1315(0.0001)**	0.1485(0.0002)**
연령 ²	-0.00138(0.0001)**	-0.00129(0.0001)**	-0.00163(0.0001)**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5218(0.0226)*	-0.4212(0.1146)	-1.1966(0.0129)*
이혼/사별	-1.1911(0.0001)**	-0.8598(0.0589)	-1.4970(0.0037)**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1274(0.4508)	0.3135(0.5239)	0.4755(0.0766)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0.8276(0.0613)	-0.5704(0.4808)	1.4264(0.0083)**
자녀	-0.1118(0.6276)	-0.0343(0.8982)	-0.1209(0.7949)
기타	0.00803(0.9828)	-0.2457(0.6438)	0.5793(0.3040)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1.7330((0.0001)**	-1.5999(0.0002)**	-1.6227(0.0001)**
초졸	-1.0633(0.0001)**	-1.0137(0.0001)**	-1.0258(0.0024)**
중졸	-0.9148(0.0001)**	-0.9515(0.0001)**	-0.8077(0.0117)*
고졸	-0.6197(0.0001)**	-0.5570(0.0015)**	-0.6779(0.0120)*
전문대졸	-0.0448(0.8141)	-0.1470(0.5363)	0.0929(0.7788)
전년도 근로소득 유무 (있었음: 1, 없었음: 0)	0.7410(0.0001)**	0.1541(0.0001)**	0.6199(0.0001)**
고용형태(상용직 기준)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0.2542(0.0307)*	-0.6151(0.0001)**	0.2874(0.1337)
임시·일용직	-0.8954(0.0001)**	-1.0690(0.0001)**	-0.6042(0.0003)**
산업(제조업 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3352(0.1103)	-0.6458(0.0210)*	-0.2175(0.5236)
건설	0.2130(0.2194)	-0.0660(0.7523)	1.6579(0.0326)*
도소매, 음식숙박	0.1232(0.4662)	0.0205(0.9300)	0.3145(0.2425)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0.3059(0.1063)	-0.0794(0.7178)	1.4842(0.0037)**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0.1544(0.3555)	-0.3644(0.0880)	0.0584(0.8411)
교육서비스 외	-0.0481(0.7603)	-0.0538(0.8098)	-0.0201(0.9381)
직종(단순 노무직 기준)			
관리자, (준)전문가	0.5148(0.0017)**	0.3313(0.1027)	0.7643(0.0114)*
사무직	0.4723(0.0151)*	0.6790(0.0241)*	0.0806(0.7719)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0.1954(0.2109)	0.1245(0.5849)	0.1267(0.5666)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0.0581(0.8048)	0.3728(0.2565)	-0.1987(0.5720)
기능원 및 조작원	0.2891(0.0389)*	0.3247(0.0570)	0.1146(0.6749)
관찰치수	6115	3675	2440
LR χ^2	525.6492	295.7976	287.1654

*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p-value

2) * p-value < 0.05, ** p-value < 0.01.

$P(Y=0|x)$ 의 평균 확률은 0.093, $P(Y=1|x)$ 의 평균 확률은 0.035, $P(Y=2|x)$ 의 평균 확률은 0.872로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 확률은 9.3%, 차상위 집단으로 편입될 확률은 3.5% 수준으로 나타난다.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실시한 빈곤 확률 분석과 다소 다른 점은 혼인상태의 영향이다.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가 전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여성의 경우 별거를 포함한 유배우의 경우 빈곤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지는 않으나 차상위를 거쳐 빈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산업이나 직종에서도 빈곤여부만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차상위 집단, 빈곤집단의 서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여성 관리자 및 남성 사무직, 기능원이나 조직원 집단의 유의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나.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결정요인

이어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빈곤, 차상위, 비빈곤집단의 월평균 임금의 로그변화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전체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이면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증가와 임금이 일정시점에 이르면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속년수를 보면 빈곤집단의 경우 오히려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유의하게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비빈곤집단은 근속기간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에게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정근속년수 이후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근속기간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아 여성의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완전한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근속과 임금 간의 뚜렷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혼인상태에서 유배우 상태일수록 비빈곤 근로자의 임금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그 밖에는 혼인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효과는 주로 비빈곤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빈곤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일 경우 빈곤집단의 임금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에서 빈곤 뿐 아니라 비빈곤집단에서

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업체규모면에서는 소규모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대규모 기업에서는 높은 임금을 주는 경향이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업종효과 는 여성비빈곤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하위직종에서 임금과 유의한 부(-)의 영향을 나타내 직종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이러한 경향이 여성과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단순노무직과 장치 및 조립원 등 직종에서 이러한 영향이 가시적이었다.

<표 III-40> 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의 로그변환 값	전체			남성			여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빈곤	차상위	비빈곤	빈곤	차상위	비빈곤
Constant	3.584***	2.231***	3.73***	3.34***	2.389***	3.609***	4.165***	2.504***	3.06***
성별 (1:남성 0:여성)	0.277***	0.382***	0.373***						
연령	0.05***	0.087***	0.049***	0.064***	0.104***	0.076***	0.048*	0.056	0.031***
연령 ²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근속년수	-0.034**	0.004	0.041***	-0.021	-0.006	0.033***	-0.036	0.015	0.038***
근속년수 ²	0.001*	-0.0004	-0.001***	0.0003	-0.0001	-0.001***	0.001	-0.001	-0.001
결혼상태 (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13	0.01	0.062***	0.114	-0.004	0.143***	0.021	0.252	-0.034
이혼/사별	0.16	0.128	0.065	-0.089	0.34	0.144*	0.082	0.322	0.003
교육수준 (대졸이상기준)									
무학	-0.351*	0.725	-0.275***	-0.084		-0.261**	-0.042	0.553	-0.254**
초졸	-0.188	0.225	-0.322***	-0.266		-0.313***	-0.309	0.604	-0.331***
중졸	-0.045	0.11	-0.319***	0.108	-0.13	-0.332***	-0.228	0.622	-0.294***
고졸	0.058	0.109	-0.173***	0.213	0.02	-0.133***	-0.171	0.458	-0.261***
전문대졸	-0.001	0.175	-0.147***	0.242*	-0.22	-0.137***	-0.297	0.836*	-0.209***
종사상지위 (상용직기준)									
임시직	-0.376***	0.014	-0.358	-0.437***	-0.087	-0.296***	-0.303**	0.07	-0.383***
일용직	-0.403***	-0.146	-0.256	-0.426***	-0.303	-0.2***	-0.488***	-0.194	-0.334***
업체규모 (300~499인기준)									
1~4인	-0.027	-0.013	-0.103***	0.026	-0.05	-0.113***	-0.202	0.194	-0.085***
5~9인	0.035	0.184	-0.083***	0.015	0.144	-0.12***	-0.076	0.331	-0.063***
10~29	0.078	-0.022	-0.075***	0.127	-0.172	-0.048***	-0.064	0.13	-0.119***
30~99인	0.119	0.002	0.013	0.107	0.112	-0.032***	0.16	0.029	0.061
100~299인	-0.038	0.068	0.047	-0.001	-0.151	0.034***	0.302	0.635	0.089
500인 이상	0.184	0.706*	0.183***	0.267		0.175***	-0.133	1.352*	0.212***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의 로그변환 값	전체			남성			여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빈곤	차상위	비빈곤	빈곤	차상위	비빈곤
업종 (농업 등 기준)									
제조업	0.068	0.198	-0.097	-0.566	0.293	-0.097	0.403	-0.043	0.52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23		0.017	-0.895		-0.049			0.944**
건설업	0.225	0.181	0.11	-0.487	0.342	0.01	0.888	-0.237	0.747**
도소매업	-0.170	0.055	-0.062	-0.816*	0.057	-0.119	0.279	0.041	0.653**
숙박 및 음식점업	0.129	0.227	-0.017	-0.788	0.403	-0.154	0.76	0.06	0.71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024	0.02	-0.089	-0.542	0.083	-0.186*	0.374	0.008	0.718**
금융 및 보험업	0.691	0.802*	0.142		0.74	0.059	1.253*		0.89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091	0.342	-0.073	-0.481	0.467	-0.133	0.495	-0.154	0.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57	-0.174	0.09	-0.3	-0.164	0.024	0.373		0.79**
교육서비스업	-0.059	0.222	-0.088	-0.529		-0.178*	0.166	0.546	0.57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83	0.046	-0.04			-0.126	0.426	-0.028	0.642**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055	-0.22	-0.178*	-0.716	0.049	-0.227**	0.678	-0.66	0.485
직종(농업, 어업 숙련근로자기준)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및 전문가	0.192		0.34***	0.989**		0.262**	-0.412		0.774*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25	0.404*	0.145	0.633	0.288	0.075	-0.604		0.586
사무직	-0.022	0.317**	0.119	0.688	0.348	0.032	-0.679	0.212	0.539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0.003	0.254*	0.042	0.919*	0.295	0.017	-0.743	-0.028	0.4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029	0.183	0.043	0.832*	0.207	-0.007	-0.621	0.037	0.393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365	0.185	0.004	0.243	0.073	-0.062	-0.836*	0.335	0.441
단순노무직	-0.250		-0.129	0.506		-0.185	-0.772*		0.312
사용된 관측치수	319	136	3652	173	72	2233	146	64	1419
R^2	0.527	0.673	0.596	0.596	0.766	0.54	0.5	0.688	0.524
$Adj R^2$	0.461	0.554	0.592	0.489	0.594	0.53	0.32	0.368	0.511

*주: *p-value<0.1 **p-value<0.05 ***p-value<0.01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2004년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실태와 가구사항, 빈곤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집단 중 여성의 경우 업종 및 직종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 열악성 등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 일용직 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빈곤 집단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이들의 노동시장 사항, 훈련 및 능력개발, 가구사항 등 전 부문에서 비빈곤 집단과 다른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종합적으로 이들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원인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 확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저학력일수록, 임시일용직이거나 농림어업 종사자 일수록, 단순노무직일 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의 여성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순차로짓 모형의 분석결과는 혼인상태의 영향에서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가 전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여성의 경우 별거를 포함한 유배우의 경우에도 소득집단의 순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이나 직종에서도 빈곤여부만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차상위 집단, 빈곤집단의 서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여성 관리자 및 남성 사무직, 기능원이나 조직원 집단의 유의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종효과가 빈곤집단에게서, 사업장 규모효과가 비빈곤집단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빈곤집단에서 나타내는 영향이 매우 유의하여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교육수준은 주로 비빈곤 집단에게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속기간은 여성근로자의 소득계층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5.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계층의 실태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계층은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이며 동시에 빈곤가구에 소속된 집단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구성 중 여성들은 실업자 비중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에 빈곤층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국의 최근의 정책동향에서는 현재의 근로상태 뿐 아니라 근로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간주한다(노대명, 최승아, 2005). 그 이유로는 첫째, 근로빈곤층의 유동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사실상 매우 모호해지면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집단의 유동화 경향이 강해져 현재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책대상화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Matire & Nolan, 2000). 정태적인 분류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신규 정책집단의 발굴이다. 노동시장 정책 및 빈곤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화 하면서 새로운 정책집단의 발굴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자가 주요한 정책집단으로 부각되었으며 감추어진 노동인구의 발굴은 향후 고령화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천한 가운데 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가능빈곤집단을 주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활지원정책 등은 그 한 예로 미취업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등도 보다 많은 빈곤층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때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가능인구에 대한 검토와 정책방안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가능인력에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고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들의 불완전한 취업지위 등이 여성의 빈곤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들의

8) 노대명, 최승아(2005)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빈곤층을 크게 경제활동빈곤층과 비경제활동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경제활동빈곤층을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고 있다.

취업 불연속성과 빈곤여부와와의 관계이다. 단적으로 이들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애로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인지,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취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거나 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은 뒤로 미루고 이들 집단의 근로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개인 특성

우선 1절에서 보았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여부를 <표 III-41>에서 다시 제시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빈곤이 22%, 차상위가 4%, 비빈곤이 7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은 빈곤이 19%, 차상위가 4%, 비빈곤이 77%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내의 빈곤비율이 남성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빈곤비율이 훨씬 높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집단에서도 남성 비중은 39%이며 나머진 여성이 61%를 차지한다. 차상위 집단에서도 여성이 65%를 차지하고 남성은 35%에 그치고 있다. 남녀를 통틀어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빈곤집단이 12.22%, 남성빈곤집단이 7.7%, 여성 차상위 집단이 2.7%, 남성 차상위 집단이 1.42%를 차지하고 있어 빈곤집단의 여성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41> 2004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집단의 분포

	총 비경제활동인구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빈도 (단위: 천명)	5109	9577	1129	1794	209	391	3771	7392
비율 (단위: %)	100 (34.79)	100 (65.21)	22.10 (38.63)	18.73 (61.37)	4.08 (34.82)	4.08 (65.18)	73.81 (33.78)	77.19 (66.22)
	100		19.90		4.09		76.01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다. 66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이 비경제활동 빈곤집단 중 31%정도이며 여성의 비중은 35%로 남성 26%보다 월등히 높아 평균수명이 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근로가능연령대에서는 60대를 제외하고는 36세에서 50세까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남성은 41~45세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이어서 46~50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집단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56~60세에 이어서 36~40세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인구학적 사항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차상위 집단은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이들 역시 41~45세 연령이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녀 모두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차상위 집단 남성의 경우 오히려 고령자에 비하여 이들 집단의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이 있고 여성은 46~50세 연령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III-42〉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

(단위: %)

[illegible]

[illegible]

비 취업사유를 통하여 이들이 근로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 세대, 비교적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나 일시휴직 등의 문제는 개인의 근로의사에 의하여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비구직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들의 인구학적 사항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이들의 학력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고졸학력자 집단의 비중이 크고 여성은 고졸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남성은 초급대학과 대학졸업자 이상 집단의 비중이 24%에 달할 정도로 고학력자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차상위 집단에서는 빈곤집단과 비교할 때 남성 고졸자의 비중이 오히려 고졸이하 집단보다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Ⅲ-44>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분포

(단위: %)

학력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무학	16.88	7.12	24.84	7.19	3.38	10.57	3.09	0.87	5.28
초졸	21.94	18.11	25.06	16.30	10.76	21.21	9.13	6.30	11.92
중졸	14.86	17.43	12.76	18.05	18.87	17.32	12.39	11.19	13.56
고졸	29.09	33.37	25.60	39.94	42.72	37.47	36.80	37.79	35.83
초급대	5.48	7.14	4.12	7.40	10.00	5.10	12.05	11.31	12.78
대학	10.78	15.05	7.30	10.76	13.83	8.04	23.40	28.06	18.81
대학원	0.98	1.78	0.32	0.36	0.44	0.29	3.14	4.48	1.8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혼인상태를 보면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사별이나 이혼비율은 전체의 21% 수준이나 남성들은 이 비중이 8% 미만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32%수준으로 나타나 여성사별 및 이혼집단의 규모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빈곤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표 III-45> 비경제활동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혼인상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미혼	22.95	30.28	16.96	26.48	31.90	21.67	30.26	33.70	26.89
유배우	55.65	61.84	50.60	60.21	63.18	57.58	62.64	63.03	62.26
사별·이혼	21.40	7.88	32.44	13.31	4.91	20.75	7.10	3.28	10.8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이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간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경우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여성가구주 비중은 약 50%에 달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과 해당 여성의 빈곤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동시에 차상위 집단 중에서도 여성가구주의 경우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사회에서 여성가구주가 된다는 점은 곧 이들의 빈곤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6>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분포

(단위: %)

가구주와의 관계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가구주	27.41	0.89	49.16	29.45	1.03	54.69	30.75	0.89	60.31
가구주의 배우자	3.29	0.77	5.36	2.02	0.83	3.08	2.71	0.65	4.76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	20.68	26.84	15.63	25.63	30.79	21.04	27.73	30.40	25.08
가구주의 자녀	0.04	0.00	0.08	0.14	0.00	0.26	0.05	0.00	0.09
기타	48.57	71.50	29.77	42.77	67.35	20.93	38.76	68.07	9.76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또 한 가지 이들은 상당수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남성의 경우 13% 정도, 여성은 이보다 낮은 8% 정도만이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차상위집단의 경우는 이보다 더 취업의사가 낮았다. 그러나 빈곤집단의 취업의사는 비빈곤집단의 경우에 비하여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90%가

취업의사가 없다는 점은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회의적으로 만들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렇게 취업의사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취업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III-48>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 사유를 분석해 보았다.

〈표 III-47〉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 여부

(단위: %)

[illegible]

〈표 III-48〉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 사유

(단위: %)

[illegible]

비구직사유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성 비경활집단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사 및 육아로 인해 구직을 포기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빈곤집단에서는 가사 및 육아가 비구직의 사유라고 대답한 비율이 비빈곤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점이다. 오히려 남성과 비슷하게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장이 없다거나 근처에 마땅한 일자리 및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비구직 사유에 대한 결측치가 다소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비경활 빈곤여성들의 구직 포기요인이 가구 내 성별분업에 기인하는 점 이외에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흡수할 만한 충분한 공급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경활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 공급정책을 실시하되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고려할 때 남성과는 달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거나 근거리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여부는 빈곤집단이 차상위나 비빈곤 집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빈곤여성은 현재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1% 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차상위, 비빈곤 집단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소폭이기는 하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취업지원에 있어 훈련지원도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9>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훈련경험 여부

(단위: %)

직업훈련 경험 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	1.54	2.36	0.88	2.58	3.85	1.45	5.63	7.64	3.66
2	0.18	0.40	0.00	0.82	1.23	0.46	0.68	0.66	0.70
3	98.28	97.24	99.12	96.60	94.91	98.10	93.69	91.70	95.6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받아본 경험 있다 2. 현재 받고 있다 3. 받아 본 적 없다

이러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비경제활동 빈곤인구들은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며 구직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남성은 친구나 친지, 전에 하던 일에

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하여 구직을 하는 경향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개인적 구직경로를 알 수 있으며 비빈곤 집단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는 경향과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친구나 친지, 인터넷 매체 이용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비빈곤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⁹⁾.

이들은 취업 시 고용주나 자영업 보다는 임금근로를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대체로 육아문제와 건강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는 희망하는 비중이 여성빈곤층 중 18%미만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전일제 근로를 원하고 있어 빈곤층의 취업정책으로 시간제 근로를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구직의 어려움을 파악해보면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층은 절대다수인 90%가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취업이나 창업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전체의 77%에 이르고 있다. 이 비율들은 빈곤집단이라고 해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들이 학력이나 본인의 기능과 맞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 인구들의 약 30%로 남성 44%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비빈곤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인이 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여 비빈곤 집단은 이 비율이 51%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빈곤집단은 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경험 등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본인이 원하는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54%로 나타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의 연령 및 성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9) 빈도분석 시 결측치가 많아 표는 생략함

나.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가구 특성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가구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사나 육아, 연로, 건강상의 이유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가구의 특성은 이들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집단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4인가구의 비중이 높지만 2인가구와 3인가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비경제활동 빈곤 집단 중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 4.9%에 비하면 약 5배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여성노인의 단독가구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집단에서는 남성의 경우 4인 가구 비중이 빈곤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50〉 비경제활동인구의 가구원수 분포

(단위: %)

가구원수 (단위: 명)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	12.39	4.85	18.54	5.72	3.08	8.05	3.99	4.53	3.47
2	25.41	26.81	24.27	21.53	22.24	20.89	9.83	9.93	9.73
3	22.40	25.89	19.55	14.59	14.93	14.29	20.26	21.18	19.35
4	27.49	30.11	25.36	33.63	37.70	30.03	45.51	46.62	44.41
5	9.49	9.70	9.32	18.17	16.32	19.82	16.82	14.88	18.73
6	2.81	2.64	2.95	6.36	5.72	6.92	3.59	2.86	4.3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경제활동인구 빈곤집단 중에 가구원 중 전년도에 취업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사대상년도 전년도에 취업자가 있었던 경우가 비경제활동 빈곤집단 전체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상위의 경우는 이 비율이 88%에 이른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이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때 함께 빈곤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 가구의 1인 부양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이나 자녀 및 부모

의 취업도 여전히 한 가구를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1> 비경제활동 인구의 전년도 가구 내 취업자 유무

(단위: %)

취업자 유무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있음	62.14	66.11	58.91	87.57	89.07	86.23	96.14	96.50	95.77
없음	37.86	33.89	41.09	12.43	10.93	13.77	3.86	3.50	4.2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빈곤집단에게 사회보험 수혜는 중요한 소득원이다. 비경제활동인구 빈곤집단 중에 사회보험 수급을 받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이 대체로 노동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취업경험이 적거나 없는 여성들은 빈곤하다 할지라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표 Ⅲ-52> 비경제활동인구의 사회보험급여 여부

(단위: %)

사회보험 급여 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	2.84	4.01	1.89	3.39	5.82	1.23	1.68	2.43	0.94
2	3.80	4.51	3.22	2.01	3.57	0.63	1.94	2.92	0.98
3	93.36	91.47	94.90	94.60	90.61	98.14	96.38	94.65	98.0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받은 적이 있다 2. 현재 받고 있다 3. 받은 적이 없다

빈곤가구가 보호대상 가구로 지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비경제활동 남성빈곤 집단의 16%, 여성 19%가 보호대상 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차상위나 비빈곤에 비하여 남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단독가구의 빈곤 비중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표 III-53> 비경제활동인구의 보호대상 가구 여부

(단위: %)

보호대상 가구 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	17.77	16.11	18.98	10.41	10.28	10.53	0.51	0.41	0.60
2	82.23	83.89	81.02	89.59	89.72	89.47	99.49	99.59	99.4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보호대상 가구였거나 현재 보호대상 가구임 2. 보호대상 가구 아님

이들의 소득과 생활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면 <표 III-54>와 같다. 비경제활동인구 빈곤집단의 생활비 비중은 월평균 생활비를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된다. 1이면 모든 소득을 생활비에 지출한 것이 되며 1을 초과할 경우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가 전체의 22%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의 3배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차상위집단의 경우는 비교적 건전한 소비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III-54>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생활비 규모

(단위: %)

월평균총생 활비/총월평 균소득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0.5미만	0.49	0.53	0.45	0.61	0.65	0.58	21.23	21.62	20.85
0.5이상 1미만	21.08	21.06	21.10	42.43	39.49	45.03	62.47	62.00	62.93
1이상 1.5미만	29.82	29.95	29.71	40.31	40.52	40.12	14.02	14.14	13.90
1.5이상 2이하	15.67	15.37	15.92	10.34	10.84	9.90	1.88	1.88	1.89
2이상 3이하	12.02	11.87	12.13	6.10	8.06	4.37	0.43	0.36	0.43
3이상	20.93	21.22	20.69	0.20	0.43	0.00	0.00	0.00	0.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들의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을 살펴보았더니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중이 빈곤층에서는 44%, 차상위 집단에서는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렵

다고 응답한 경우가 빈곤집단 중에서 83%를 차지하고 차상위에서도 82% 수준으로 나타나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상태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5>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계층별 주관적 현재경제상태 인식 정도
(단위: %)

현재경제상태 인식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매우 여유 있음	0.06	0.00	0.11	0.00	0.00	0.00	0.031	0.33	0.30
여유가 있는 편임	1.14	1.12	1.15	0.92	1.19	0.68	5.73	5.94	5.52
보통임	14.22	13.06	15.17	16.51	15.26	17.61	46.43	46.67	46.20
조금 어려운 편임	39.37	40.81	38.20	41.38	41.99	40.85	32.76	32.43	33.08
매우 어려움	44.41	44.19	44.59	41.19	41.56	40.87	13.83	13.74	13.92
응답 시 모름	0.80	0.81	0.78	0.00	0.00	0.00	0.93	0.89	0.9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특성과 시사점

2004년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은 고령자 비중이 높고, 가구주 비중이 높고, 학력은 주로 고졸 이하 학력이며 가구원 중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의 비중이 높다. 남성과 비교할 때 취업빈곤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빈곤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 빈곤집단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고령자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년층의 빈곤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차상위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연로 등으로 인한 자발적 비취업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을 하며 빈곤하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장년층의 경우 가구구성상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세대의 빈곤은 자녀의 빈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취업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나 실제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결측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내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빈곤집단이라 할지라도 취업의사가 높지 않게 나타났고, 구직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도 적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해 취업, 구직 등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사항 중 빈곤집단이 비빈곤집단과 대비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어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들에 대한 반영,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정책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집단들은 시간제 근로가 육아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할 수는 있으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요구는 전일제 근로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근로형태로서의 시간제 근로 등은 또 다른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취업가능한 집단인 중장년이하 연령집단 중 취업하는데 건강상의 장애가 없는 집단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 집단이 되는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빈곤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 정책대상 집단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빈곤집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보호대상에서 누락된 집단을 발굴하는 작업, 사회보험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들을 적극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훈련 및 취업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정책에서 정책 집단화 하였던 계층이다.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은 빈곤집단의 경우 자활 지원제도 등 빈곤정책에서, 여성가장 창업지원,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정책에서 추진되어 왔다. 향후 이들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빈곤정책을 통하여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소결 및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2004년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실태와 가구사항, 빈곤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전체 빈곤 및 차상위 집단 중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나 실질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의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높다. 전체 취업자 측면에서 빈곤비중을 살펴봐도 취업자 중 빈곤 및 차상위 비중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 집단 중 여성비의 증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사항을 보면 근로빈곤집단 중 여성의 경우 업종 및 직종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 열악성 등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 일용직 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빈곤 집단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이들의 노동시장 사항, 훈련 및 능력개발, 가구사항 등 전 부문에서 비빈곤 집단과 다른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종합적으로 이들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원인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 확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저학력일수록, 임시일용직 이거나 농림어업 종사자 일수록, 단순노무직일 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의 여성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순차로짓 모형의 분석결과는 혼인상태의 영향에서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가 전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여성의 경우 별거를 포함한 유배우의 경우에도 소득집단의 순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이나 직종에서도 빈곤여부만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차상위 집단, 빈곤집단의 서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여성 관리자 및 남성 사무직, 기능원이나 조직원 집단의 유의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종효과가 빈곤집단에게

서, 사업장 규모효과가 비빈곤집단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빈곤집단에서 나타내는 영향이 매우 유의하여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교육수준은 주로 비빈곤 집단에게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속기간은 여성근로자의 소득계층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집단으로 편입되고 있는 빈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은 고령자 비중이 높고, 가구주 비중이 높고, 학력은 주로 고졸 이하 학력이며 가구원 중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의 비중이 높다. 남성과 비교할 때 취업빈곤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 비경제활동 빈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빈곤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 빈곤집단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고령자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년층의 빈곤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차상위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연로 등으로 인한 자발적 비취업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을 하며 빈곤하다는 점은 가구구성상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세대의 빈곤은 자녀의 빈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빈곤집단이라 할지라도 취업의사가 높지 않게 나타났고, 구직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도 적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한 취업, 구직 등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한 집단 중 어려움으로 나타난 사항 중 비빈곤 집단과 대비되는 것은 여성들이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어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들에 대한 반영,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정책 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집단들은 시간제 근로가 육아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할 수는 있으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요구는 전일제 근로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근로형태로서의 시간제 근로 등은 또 다른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V

여성근로빈곤계층의 동태적 변화

1. 여성근로자의 동태적 변화실태	2
2. 여성의 동태적 빈곤실태	13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동태적 변화	6
4. 소결 및 시사점	18

근로빈곤의 동학을 파악하는 것은 근로하면서도 빈곤한 집단의 규모가 동일한 집단이 빈곤상태에 머무르는데 기인하는 것인지, 다양한 집단이 빈곤집단으로의 이동과 탈출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근로빈곤집단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파악할 경우 빈곤으로의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용하여 각 집단이 처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구제정책에서 더 나아가 빈곤화할 수 있는 잠재집단을 발굴하여 사전적으로 빈곤화를 예방할 수 있는 빈곤방지의 구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근로빈곤의 동태적 변화는 여성들의 취업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소득의 안정성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여성근로자들의 열악한 취업지위는 필연적으로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해 왔으며 저임금 근로는 빈곤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또한 개인의 빈곤여부는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과 가구의 이원화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빈곤집단에 대한 파악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에 대한 이해, 여성들이 소속된 가구의 빈곤진입과 탈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들을 파악함으로써 여성근로빈곤 집단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1. 여성근로자의 동태적 변화실태

여성근로자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패널자료의 개인과 가구자료를 결합하여 그 속에 위치한 개인들의 취업상태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생용설문지에 응답한 19세 미만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 19세 이상의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상태 변화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태적으로 여성 집단이 취업상태를 변화시켜 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김중숙, 박수미, 2003).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측기간 내에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비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하여 비취업 상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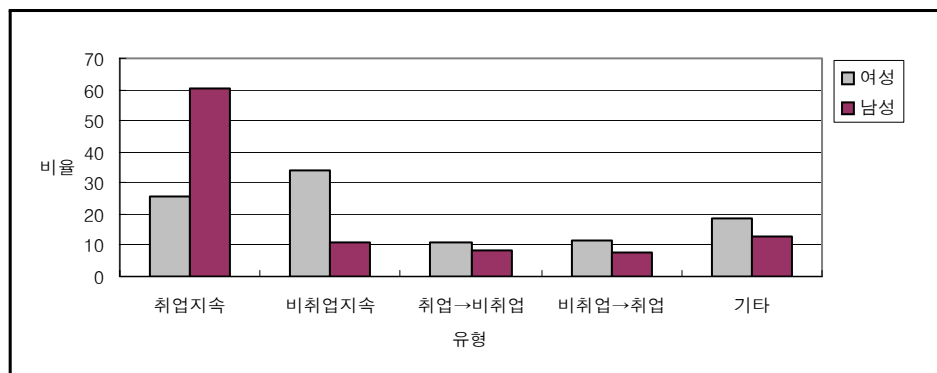
머무르는 경우,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여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경우, 취업과 비취업을 관측기간 내에 수회 오가는 경우 등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각각 type 1에서 type 5로 정하기로 하고 이들의 상태변화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자료는 1998년에서 2004년까지 7차년도 자료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설문문항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1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2차에서 7차까지 6개년간의 자료를 패널화 하였다. 1차 년도에 학생인 경우 비취업 비중이 매우 높아 19세 이상을 중심으로 패널화 하였다.¹⁰⁾ <표 IV-1>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동 기간 중 취업을 지속해온 경우(type1)는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 중 25%에 불과하였다. 반면 남성은 이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비취업을 지속한(type2) 여성 집단은 33.8%, 남성 집단은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년도에는 취업상태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비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우측절단(right censored) 집단(type3)은 여성의 경우는 11% 정도, 남성은 8% 정도로 나타났고, 처음에는 비취업이었으나 취업으로 이행하여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좌측절단(left censored) 집단(type4)은 여성은 11.5%, 남성은 7.7%로 오히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관측기간 동안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type5)의 경우는 짧은 관측기간인 6년간 취업상태의 변화를 3회 이상 경험하는 집단이다. 여성은 과거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집단의 비중이 18.3% 수준으로 남성 12.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응답을 모두 지속한 표본만을 유효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전장에서와 같은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로서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나 이들 집단의 상태변화를 보다 미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표 IV-1>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상태변화의 유형별 분포

성별	유형	빈도(명)	비율(%)
여성	취업지속(Type 1)	867	25.42
	비취업지속(Type 2)	1153	33.80
	취업→비취업(Type 3)	373	10.94
	비취업→취업(Type 4)	393	11.52
	취업-비취업 반복(Type 5) ¹¹⁾	625	18.32
	합계	3411	100
남성	취업지속(Type 1)	1747	60.64
	비취업지속(Type 2)	317	11.00
	취업→비취업(Type 3)	232	8.05
	비취업→취업(Type 4)	222	7.71
	취업-비취업 반복(Type 5)	363	12.60
	합계	28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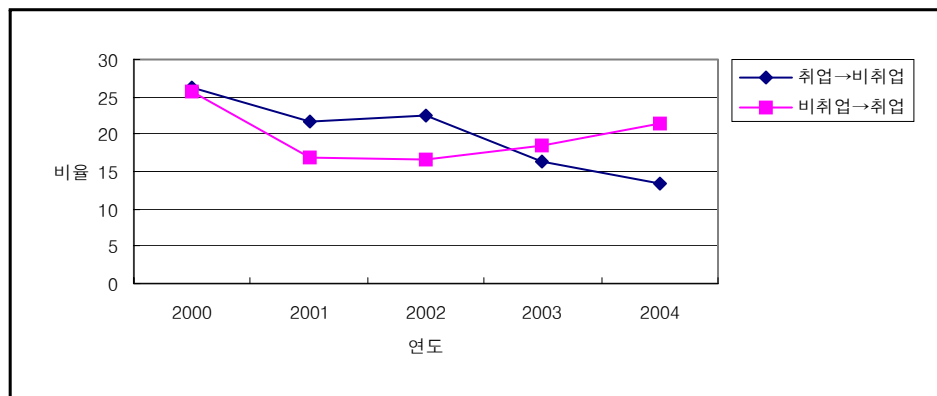


<그림 IV-1>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상태변화의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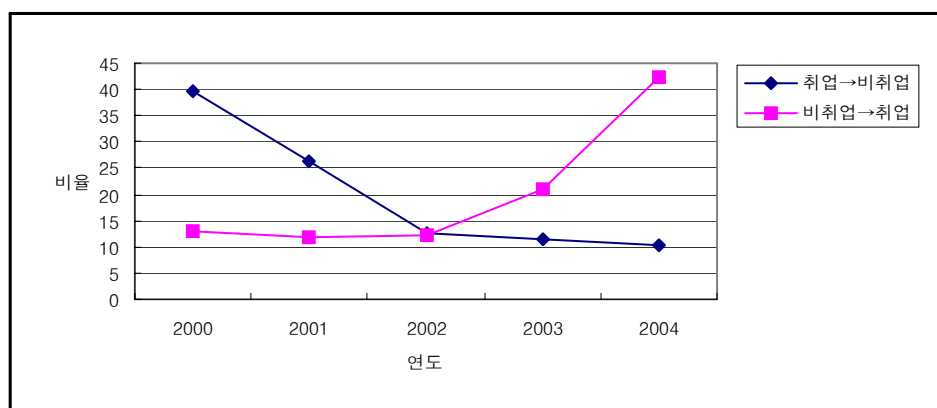
이렇듯 취업상태를 변화시키는 집단의 경우 최초 상태변화를 경험하는 연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type3과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type4의 경우 변화 이후 상태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이행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IV-2>와 <그림 IV-3>을 보면 1999년 취업상태에 있던

11)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은 이후 기타(type5)로 그림과 표에서 표기되었음.

여성이 비취업 상태로 전환한 시기는 2000년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이어서 2002년 2001년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후 2003년과 2004년에도 이들의 분포가 나타나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경우도 2000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2004년의 비중이 뒤를 이어 2004년 취업으로 이행한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행이 2000년 약 40%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고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에서 2004년에 매우 큰 폭의 취업이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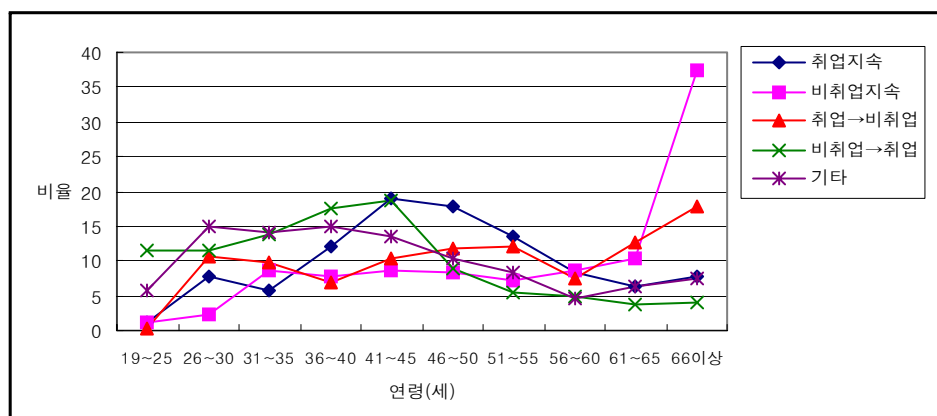


<그림 IV-3>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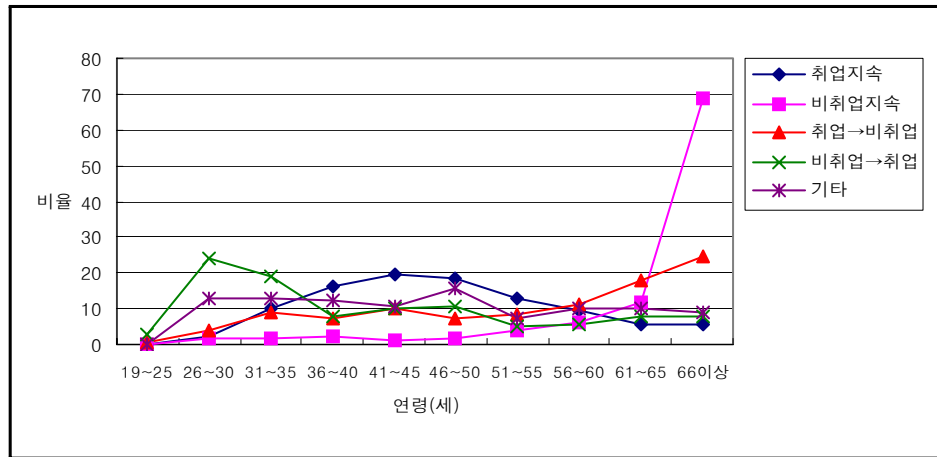
가. 취업변화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사항

취업변화유형과 이들의 인구학적 사항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인 type1의 경우 2004년도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공히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연령대가 취업에 가장 지속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type2, 즉 비취업 지속자의 경우 남녀 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30대 초반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비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55세까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행의 경우 여성은 일차적으로 20대 후반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30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비취업에서의 취업으로의 이행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 20대 후반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후 지속적인 취업이행 경향을 보인다. 노동시장 출입을 반복하는 집단의 경우 남성은 보다 고 연령층에서 여성은 출산과 양육시기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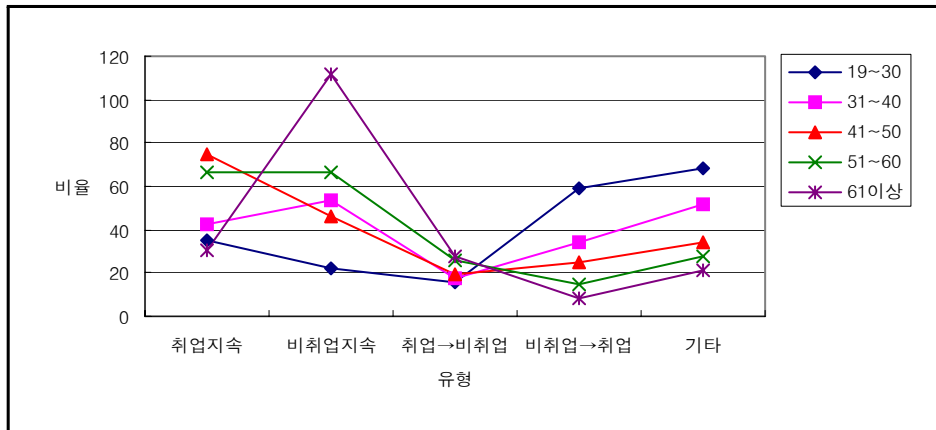


<그림 IV-4> 취업변화 유형별 연령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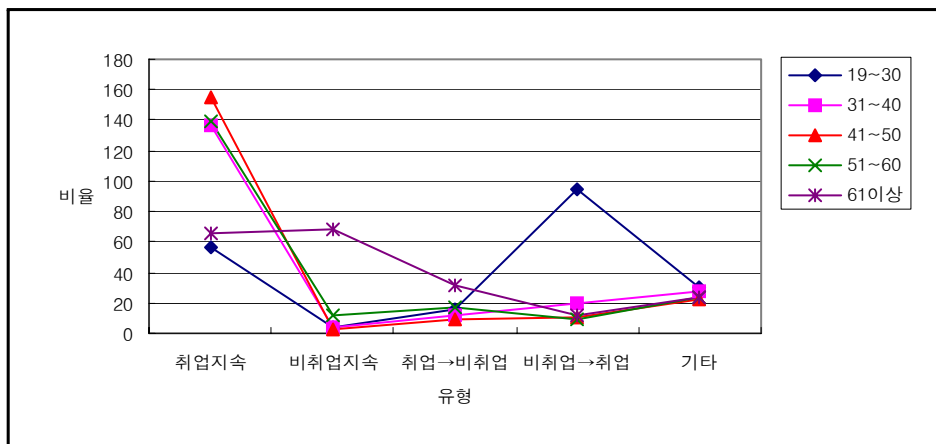


<그림 IV-5> 취업변화 유형별 연령분포 (남성)

각 연령집단에서 각 타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각 코호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 여성들의 이동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19~30대의 경우 type5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type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 취업단절이 2회 이상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들 집단의 불완전한 취업형태를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취업을 지속하는 type2 집단의 비중이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 역시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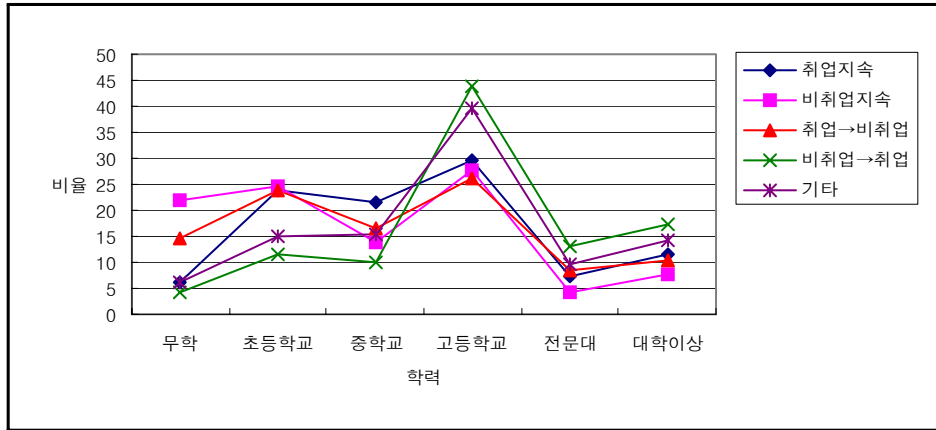


<그림 IV-6> 연령별 취업변화유형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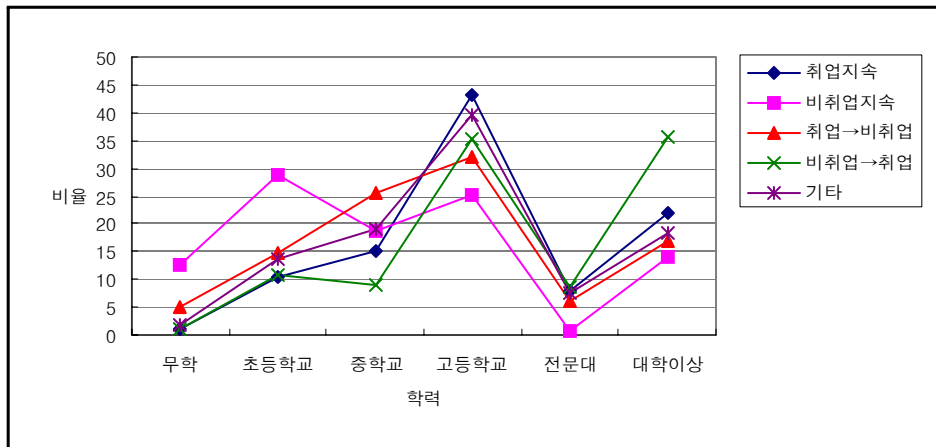


<그림 IV-7> 연령별 취업변화유형분포 (남성)

이들의 학력분포도 주요한 관심이다. 학력시점을 2004년도로 볼 때 여성들의 경우 관측기간 동안 취업을 지속한 집단은 고졸학력 이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ype5와 type4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역시 고졸학력집단이다. 고졸학력자가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는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특히 중년기의 이행경향이 높은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림 IV-8> 취업변화유형별 학력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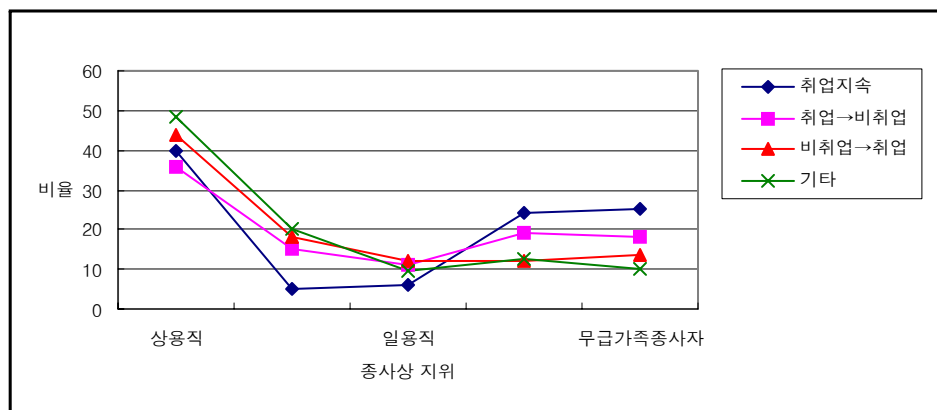


<그림 IV-9> 취업변화유형별 학력분포(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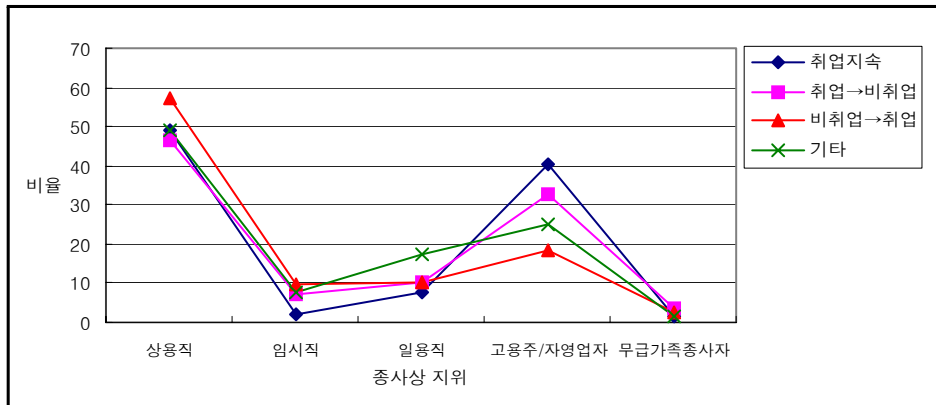
나. 취업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사항

취업유형에 따른 종사상지위 변화를 파악해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유형별로 다음의 <그림 IV-10>, <그림 IV-11>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취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비교적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전체 취업지속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역시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남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고

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집단(type3)의 경우 비취업 이행 직전의 종사상지위는 여성의 경우 상용직이나 자영업/무급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임시직의 비중이 15%, 일용직의 비중이 11%로 취업을 이어간 집단에 비하여 이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이러한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는 여성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비취업으로의 이행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인 type4의 경우 취업으로 이행 초기에 여성 남성 공히 상용직으로의 취업이 여성은 약 44%, 남성은 5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집단의 비중이 큰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직으로 취업자 상태로 전환한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남성에 비하여 10% 높은 비중을 보인다. 여성의 불완전한 취업지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경우이다.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20%에 달하여 불완전한 취업형태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규모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을 이어가는 집단과 비교할 때 남성은 매우 적은 규모이나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차이가 적은 수준이며 취업으로 이행하거나 비취업으로 한차례 이행하는 집단에 비하여 매우 큰 규모를 보이고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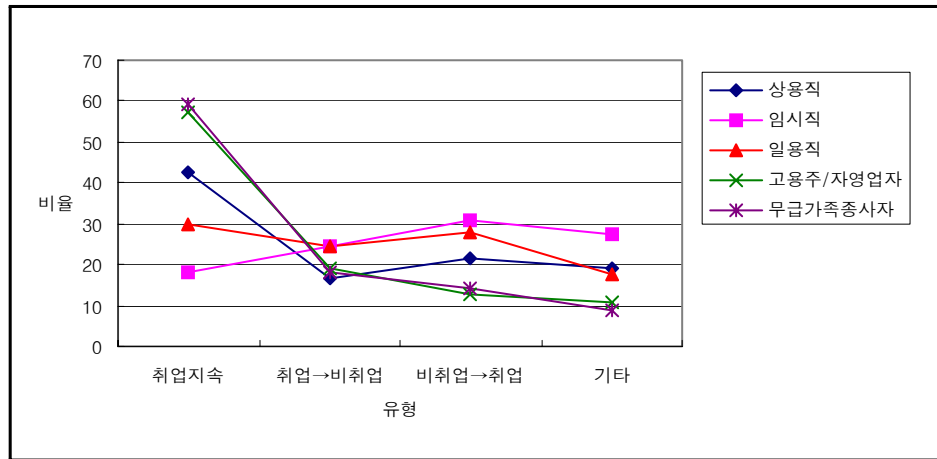


<그림 IV-10> 취업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 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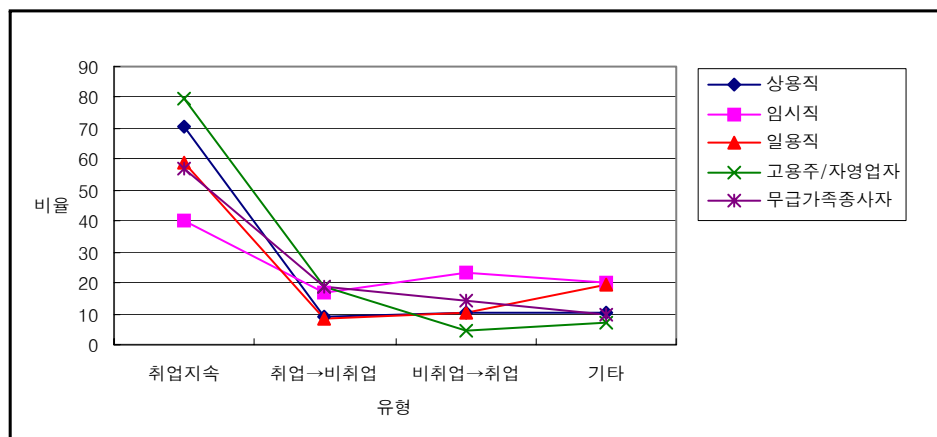


<그림 IV-11> 취업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 분포(남성)

각 종사상지위별로 취업이행 유형을 구분해보면 상용직에서는 취업을 지속해온 집단의 비중이 크고 여성은 43%, 남성은 71%에 달한다.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은 여성 20%, 남성 10%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임시직에서는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type5의 비중이 예상대로 매우 높아 여성의 27%, 남성의 20%가 type5유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type4의 경우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은 30%에 달한다. 청년층의 취업이행, 여성 40대의 재취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취업지위가 불안정한데 기인한 것이다. 일용직에서도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비중이 높아 여성고용의 질을 기늬해볼 수 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취업을 지속한 경우가 전체의 59%를 차지하여 여성의 취업을 지속하는 가장 빈번한 취업유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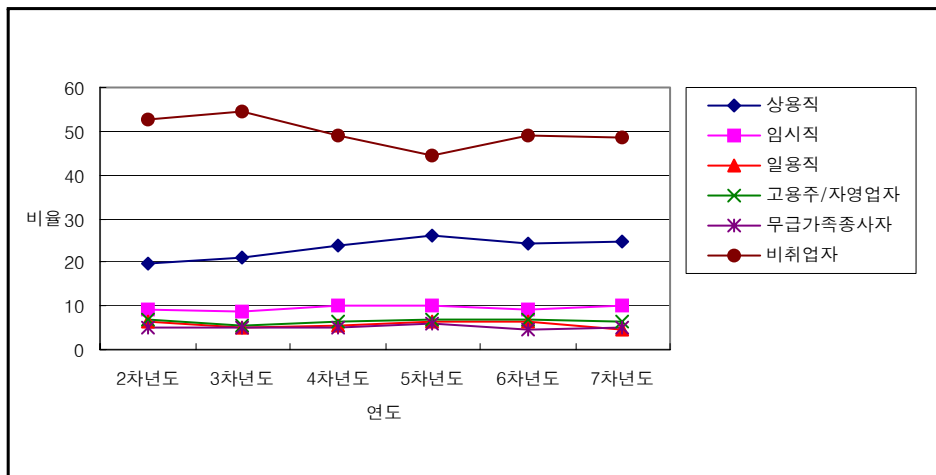
<그림 IV-12> 종사상지위별 취업변화유형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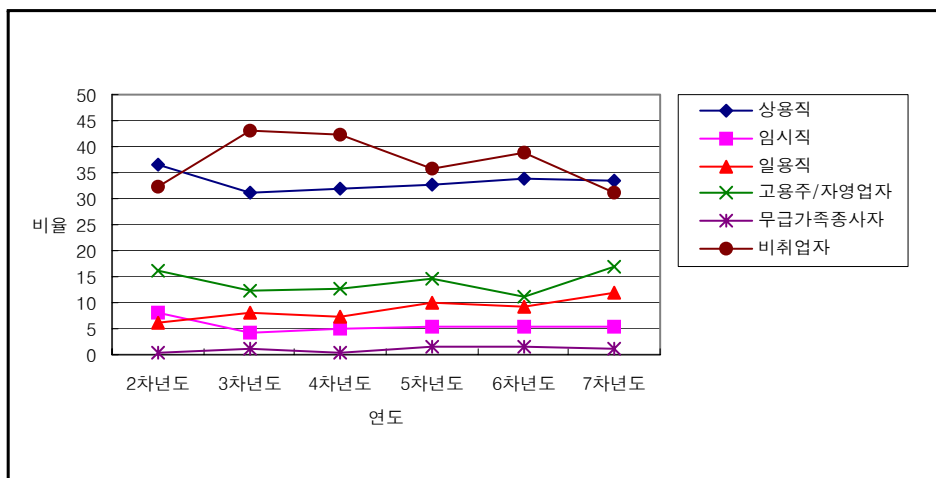
<그림 IV-13> 종사상지위별 취업변화유형분포(남성)

type5인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에 대하여 이들의 취업지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화를 파악해보면 보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의 <그림 IV-14>, <그림 IV-15>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종사상 지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비취업의 경우를 보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비중으로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이 어떤 이동경로를 가지는가와 무관하게 유사한 규모의 집단들이 취업과 비취업을 오가며 유사한

규모로 종사상 지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4>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여성)



<그림 IV-15>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남성)

취업자들의 유형별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여성은 취업을 지속한 집단들의 경우 제조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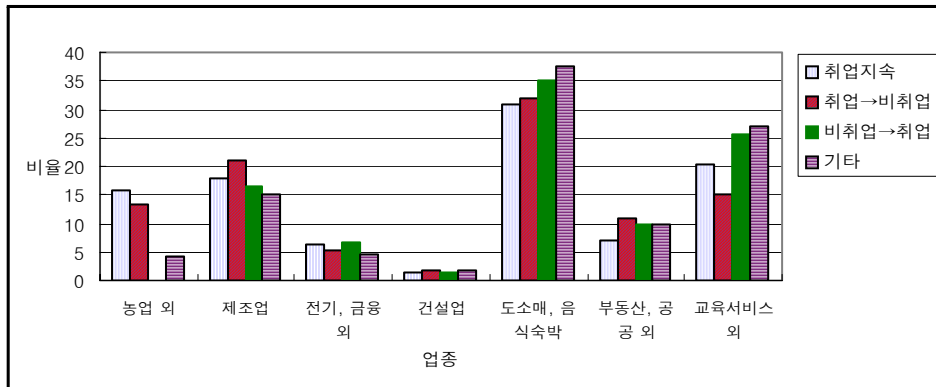
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집단(type3)의 이행직전시기 업종은 제조업의 비중이 21%로 월등히 높았으며 도소매업의 비중도 18%나 되었고 남성은 제조업이 24%, 도소매업이 15%로 나타난다. 비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대체로 젊은 연령보다는 장년층 및 고령자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이들 집단이 대체로 취업을 중단하는 업종이 제조업에서의 임금근로자나 도소매업에서의 임금 및 자영업자 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type4)의 경우 여성은 도소매업으로 남성은 제조업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type5)은 7차년도 시점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남성은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2>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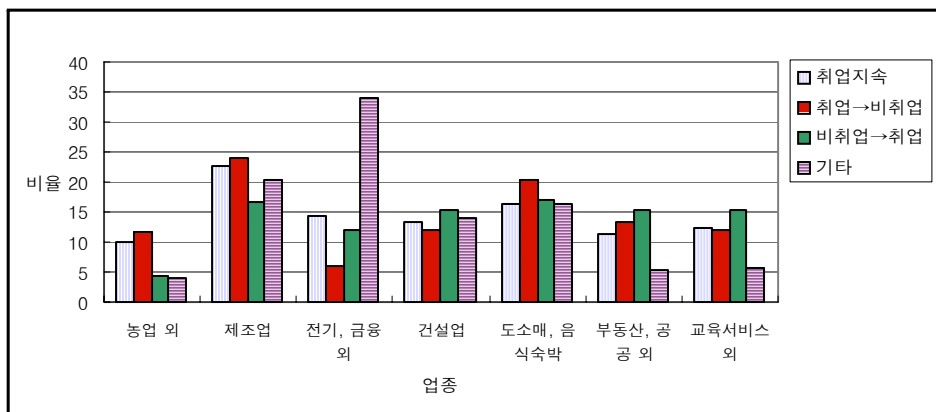
(단위: %)

업 종	Type1		Type3		Type4		Type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산업1)	15.86	9.91	13.40	11.64	3.82	4.50	4.10	4.15
제조업(산업2)	17.82	22.62	21.18	24.14	16.54	16.67	15.14	20.3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산업3)	0.12	0.80	0	0.86	0.51	0.90	0	20.33
건설업(산업4)	1.39	13.17	1.88	12.07	1.27	15.32	1.89	14.11
도소매(산업5)	17.25	13.23	17.96	15.09	22.14	14.41	18.61	6.22
숙박 및 음식점업(산업6)	13.66	2.98	13.94	5.17	12.98	2.70	18.93	9.96
운수창고 및 통신업(산업7)	2.08	10.60	1.88	4.74	2.04	6.76	0.32	2.07
금융 및 보험업(산업8)	4.28	3.04	3.22	0.43	4.07	4.50	4.10	11.6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산업9)	4.86	7.33	10.72	9.91	9.16	13.96	8.52	2.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10)	2.20	4.12	0.27	3.45	0.51	1.35	1.26	2.90
교육서비스업(산업11)	7.87	4.64	6.43	3.45	11.70	4.95	12.30	0.8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산업12)	3.13	0.97	1.61	1.29	3.05	2.70	5.36	4.56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산업13)	9.49	6.59	6.97	7.33	10.69	7.66	9.46	0.4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유형2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취업자가 없으므로 제외



<그림 IV-16> 취업변화유형별 산업 분포(여성)



<그림 IV-17> 취업변화유형별 산업 분포(남성)

업종별로 취업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등 산업10에서의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어서 농림어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근로자들이 불연속 취업하는 type5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및 제조업으로 나타난다. 각 산업 중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운수창고통신,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이 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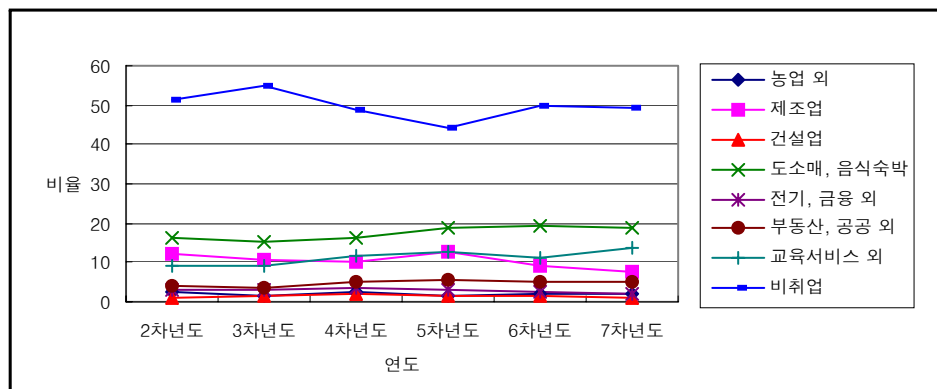
<표 IV-3> 19세 이상 남녀의 산업별 취업변화유형분포

(단위: %)

유형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11	산업12	산업13
Type1	여성	63.72	44.51	33.33	40.00	41.16	41.99	52.94	47.44	28.97	73.08	38.42	43.55	45.56
	남성	78.64	73.56	77.78	70.55	73.80	55.32	85.65	57.61	68.09	80	79.41	45.95	76.67
Type3	여성	23.26	22.83	0.00	23.33	18.51	18.51	20.59	15.38	27.59	3.85	13.56	9.68	14.44
	남성	12.27	10.43	11.11	8.59	11.18	12.77	5.09	1.09	12.23	8.89	7.84	8.11	11.33
Type4	여성	6.98	18.79	66.67	16.67	24.03	18.15	23.53	20.51	24.83	7.69	25.99	19.35	23.33
	남성	4.55	6.89	11.11	10.43	10.22	6.38	6.94	10.87	16.49	3.33	10.78	16.22	11.33
Type5	여성	6.05	13.87	0.00	20.00	16.30	21.35	2.94	16.67	18.62	15.38	22.03	27.42	16.67
	남성	4.55	9.12	0.00	10.43	4.79	25.53	2.31	30.43	3.19	7.78	1.96	29.73	0.67
합계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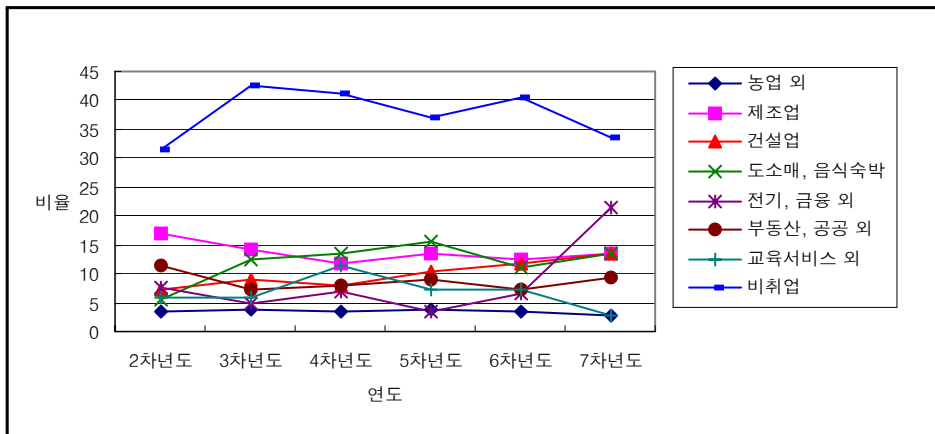
*주: 유형2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취업자가 없으므로 제외

가장 문제가 되는 취업과 비취업 반복집단(type5)의 각 연도별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우 각 산업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제조업 부문 근로자가 취업과 비취업부문을 오가는 경우가 보다 많았으나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서는 산업별로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아 업종을 막론하고 여성근로자에게 매우 일반적인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8>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산업분포(여성)

반면 남성의 경우 업종별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업종의 변화가 발견된다. 남성 역시 제조업 종사자들의 취업-비취업반복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기나 금융업종, 부동산이나 공공부문 등 과거 취업-비취업반복이 많았던 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 종사자의 경우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업종효과는 남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 취업과 비취업 반복이 여성에게는 보다 노동공급적 요인에 의하여, 남성에게는 보다 노동수요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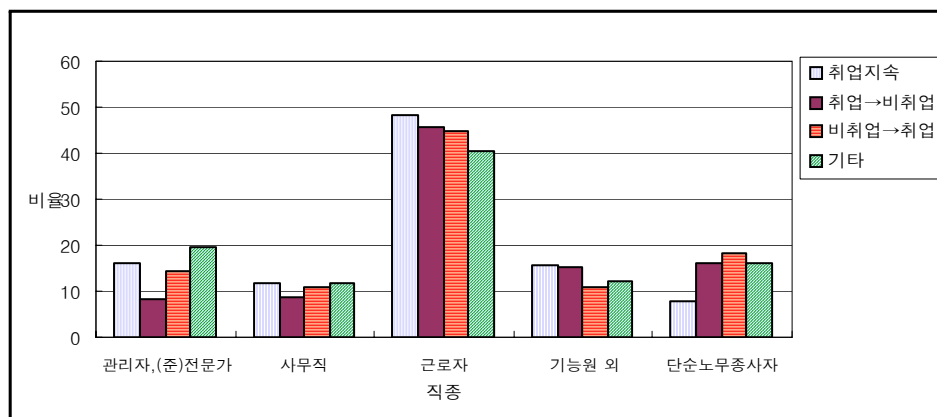
<그림 IV-19> 취업-비취업 반복집단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산업분포(남성)

이어서 취업유형별로 직종분포를 살펴보았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 중 여성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의 비중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하는 type3의 경우에는 여성은 동일한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32%, 남성은 단순노무직근로자 비중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type4)의 경우 남녀 공히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남녀 각각 40%, 21%로 나타나 주목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취업과 비취업 반복집단의 경우 여성은 역시 동일한 직종분야인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36%, 남성은 단순노무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중이 각각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취업지위를 이어가는 집단의 직종분포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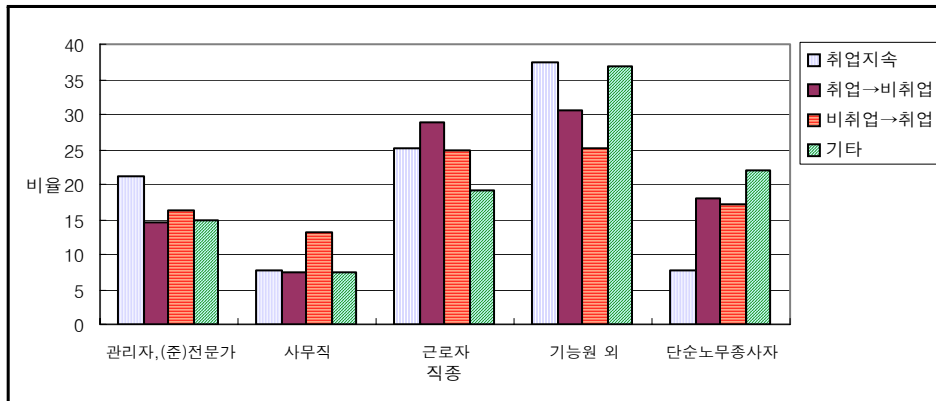
<표 IV-4>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

직 종	Type1		Type3		Type4		Type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직종1)	0.58	3.38	0	2.59	0.51	0	0.31	3.64
전문가(직종2)	7.15	6.58	2.14	2.59	3.56	5.41	8.75	2.83
기술공 및 준전문가(직종3)	8.42	11.22	6.17	9.48	10.18	10.81	10.31	8.50
사무직원(직종4)	11.65	7.84	8.85	7.33	10.69	13.06	11.88	7.29
서비스근로자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직종5)	33.10	15.57	32.27	17.67	40.71	20.72	36.25	14.98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직종6)	15.34	9.67	13.40	11.21	4.07	4.05	4.06	4.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직종7)	9.57	21.24	8.85	17.67	5.85	13.51	5.63	17.8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직종8)	6.00	16.26	6.43	12.93	5.09	11.71	6.56	19.03
단순노무종사자(직종9)	7.84	7.78	16.09	18.10	18.32	17.12	16.25	21.8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유형2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취업자가 없으므로 제외



<그림 IV-20>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 (여성)



<그림 IV-21>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분포 (남성)

직종별로 어떤 취업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상위직종일수록 취업을 지속하는 type1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 남녀 공히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type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취업과 비취업 전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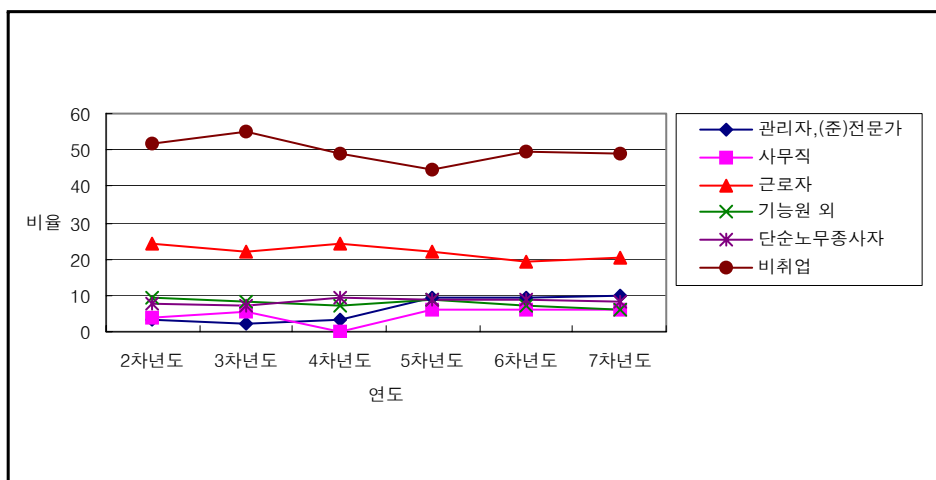
<표 IV-5> 19세 이상 남녀의 직종별 취업변화유형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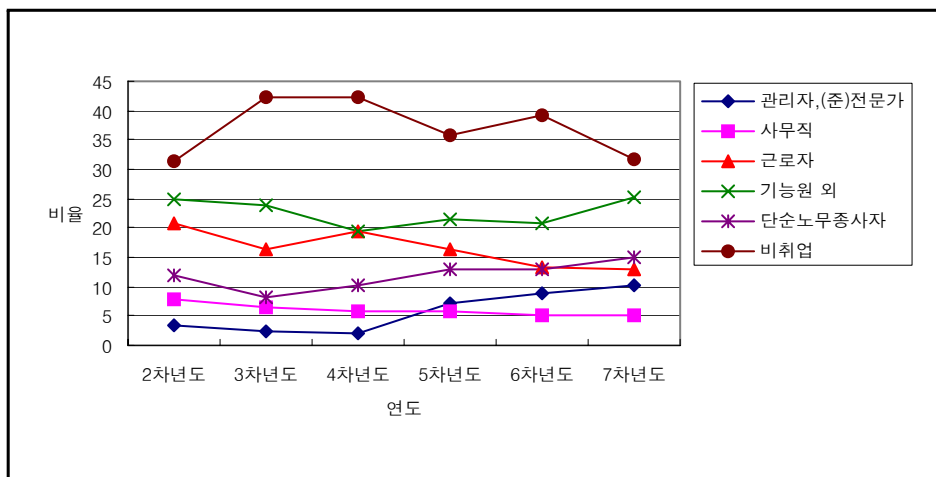
유 형		직종1	직종2	직종3	직종4	직종5	직종6	직종7	직종8	직종9
Type1	여성	62.50	55.36	43.20	47.20	40.88	62.74	52.87	44.44	26.98
	남성	79.73	82.14	74.52	68.16	68.69	78.97	76.34	73.39	50.37
Type3	여성	0.00	7.14	13.61	15.42	19.80	23.58	21.02	20.51	23.81
	남성	8.11	4.29	8.37	8.46	10.35	12.15	8.44	7.75	15.56
Type4	여성	25.00	12.50	23.67	19.63	22.79	7.55	14.56	17.09	28.57
	남성	0.00	8.57	9.13	14.43	11.62	4.21	6.17	6.72	14.07
Type5	여성	12.50	25.00	19.53	17.76	16.52	6.13	11.46	17.95	20.63
	남성	12.16	5.00	7.98	8.96	9.34	4.67	9.05	12.14	20.00
합계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유형2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취업자가 없으므로 제외

특히 취업과 비취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type5의 경우에는 비취업으로 이행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숙련형성과 무관한 직종의 분포가 높았다. 최근으로 올수록 사무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취업의 안정성이 전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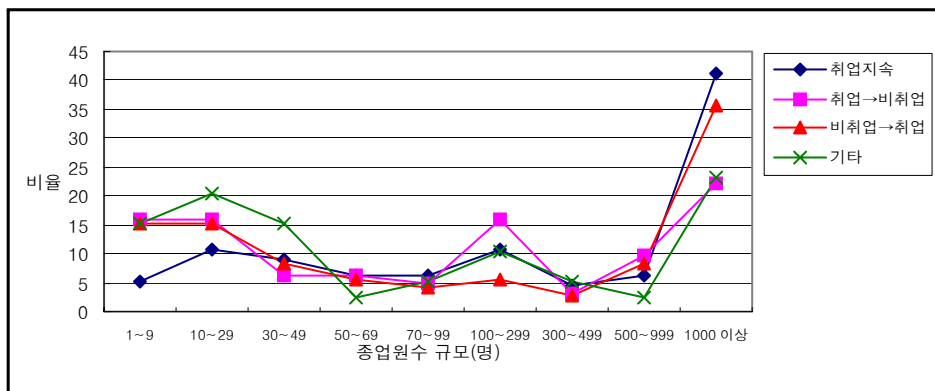


<그림 IV-22> 기타유형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직종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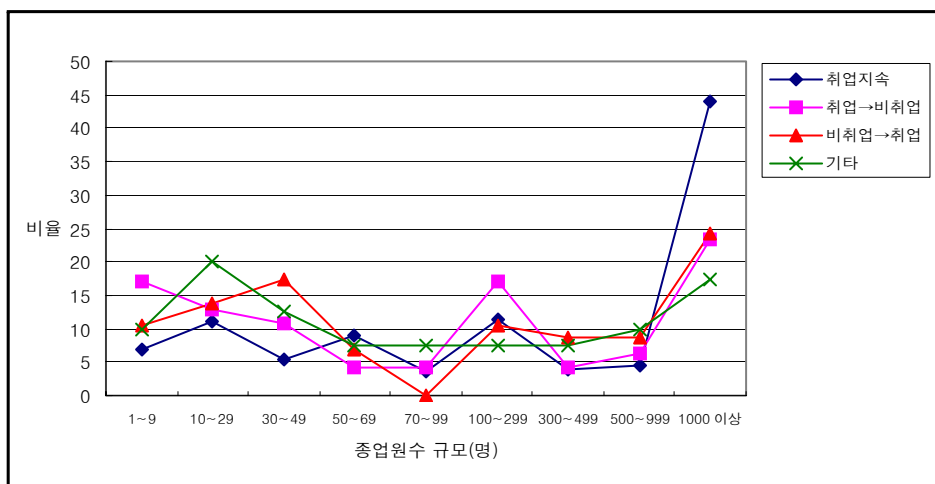


<그림 IV-23> 기타유형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직종분포 (남성)

이들 근로자들이 근로한 사업장의 규모와 이들의 취업유형별 관계를 <그림 IV-24>와 <그림 IV-25>에서 살펴보았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비중이 특히 높았다. 그러나 취업과 비취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type5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비중이 높고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규모사업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기업체 규모와 취업의 안정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4>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 (여성)



<그림 IV-25>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 (남성)

2. 여성의 동태적 빈곤실태

가. 빈곤의 유형화

앞서 여성근로자의 동태적 근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여성들의 동태적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빈곤의 변화에 따라 각 타입을 구분하고 각 타입별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빈곤 유형을 7개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ptype1의 경우 빈곤을 지속한 집단으로 여성의 경우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근로집단 중 비빈곤을 지속한 집단은 전체의 57.88%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빈곤과 비빈곤을 오가는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횡단조사에서의 비빈곤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집단이 빈곤과 비빈곤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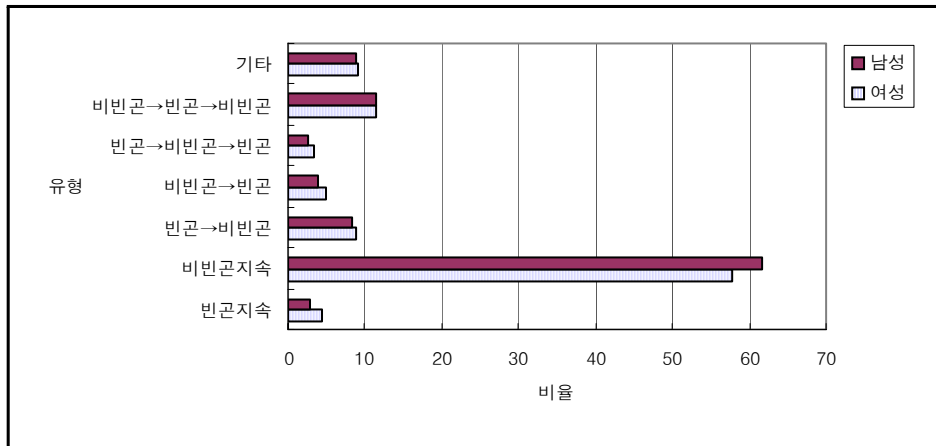
<표 IV-6> 남녀 근로집단의 유형별 빈곤상태의 변화분포

성별	유형		빈도(명)	비율(%)
여성	빈곤지속(Ptype 1)		133	4.51
	비빈곤지속(Ptype 2)		1708	57.88
	빈곤→비빈곤(Ptype 3)	1회 전환	263	8.91
	비빈곤→빈곤(Ptype 4)		143	4.85
	빈곤→비빈곤→빈곤(Ptype 5)	2회 전환	97	3.29
	비빈곤→빈곤→비빈곤(Ptype 6)		341	11.56
	기타(Ptype 7) ¹²⁾	3회이상 전환	266	9.01
	합계		2951	100
남성	빈곤지속(Ptype 1)		73	2.91
	비빈곤지속(Ptype 2)		1550	61.75
	빈곤→비빈곤(Ptype 3)	1회 전환	210	8.37
	비빈곤→빈곤(Ptype 4)		99	3.94
	빈곤→비빈곤→빈곤(Ptype 5)	2회 전환	65	2.59
	비빈곤→빈곤→비빈곤(Ptype 6)		290	11.55
	기타(Ptype 7)	3회이상 전환	223	8.88
	합계		2510	100

* 주: 1) 향후 취업변화와 함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취업변화 유형의 대상 집단 중에서 2차에서 7차까지 빈곤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없는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함. 결측치에 대한 비율은 여성은 13.48%, 남성은 12.72%임.

2) 기존 차상위는 비빈곤 집단에 포함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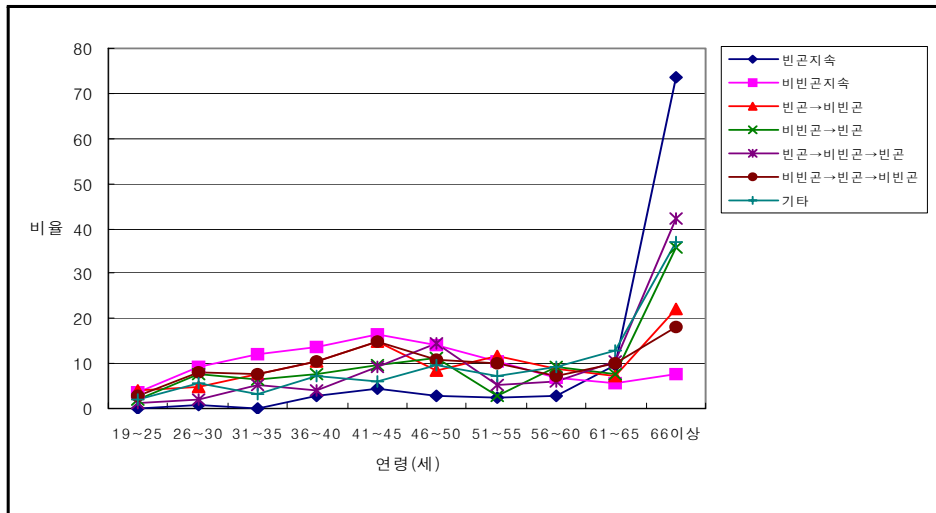
12) 빈곤-비빈곤 반복집단은 이후 기타(type7)로 그림과 표에서 표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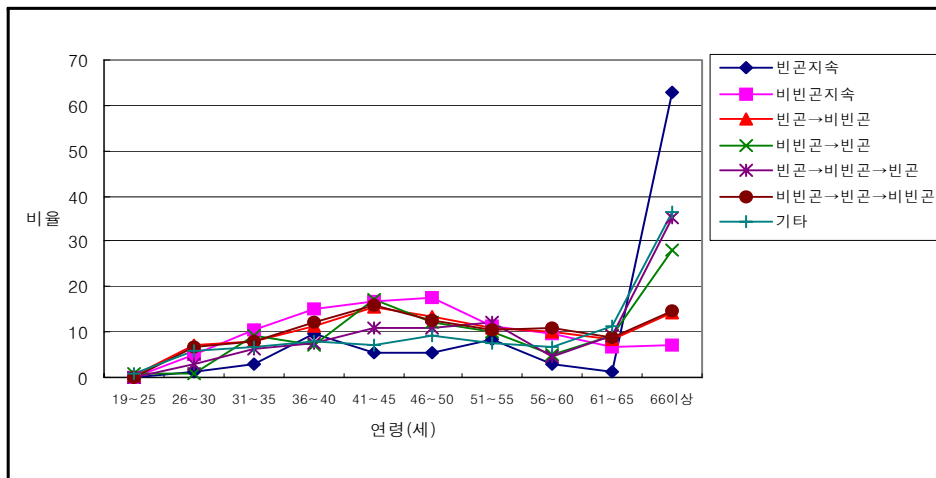
<그림 IV-26> 남녀 근로집단의 유형별 빈곤상태의 변화분포

나. 유형별 인구학적 사항

빈곤변화집단의 유형별로 그들의 인구학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압도적으로 고령자 집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빈곤지속 집단 중 여성은 전체의 73%, 남성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집단이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한 집단의 경우 의외로 여성은 66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 비중이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 초반과 고령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경우는 고령자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남성은 4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도 빈곤으로 이행하는 집단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장년층의 빈곤화 경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빈곤과 비빈곤을 반복하는 경우도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다시 비빈곤으로 탈출하는 집단의 경우는 장년층의 경우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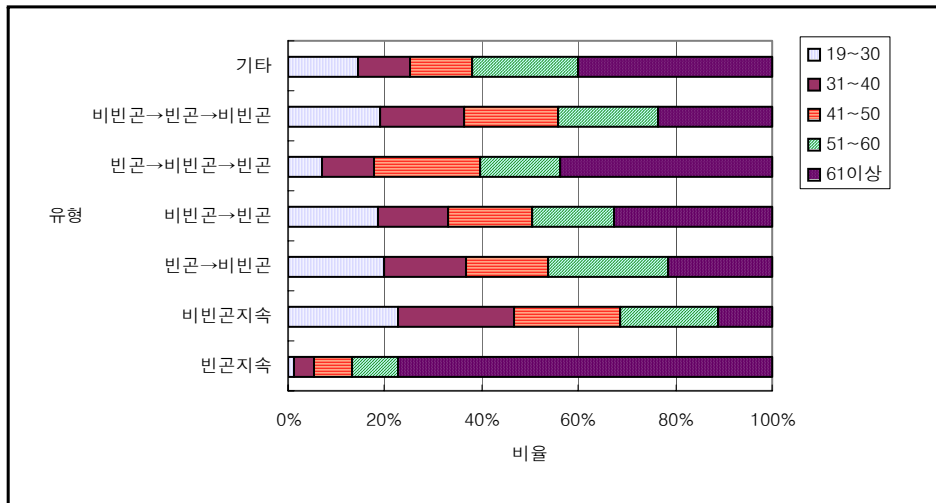
<그림 IV-27> 빈곤변화유형별 연령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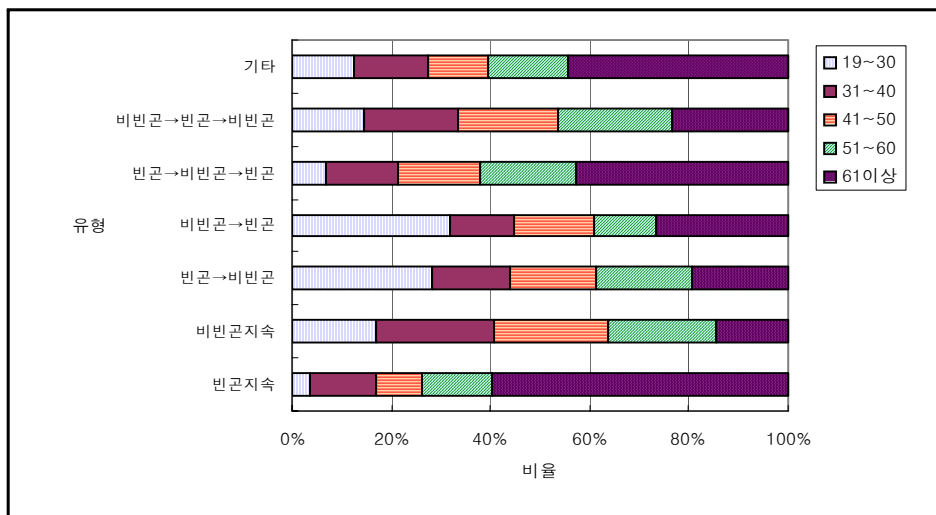
<그림 IV-28> 빈곤변화유형별 연령분포 (남성)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청년층의 경우 여성은 비빈곤을 지속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고 이어서 빈곤에 한차례 진입 후 탈출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비빈곤 비중이 높고 오히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혹은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하는 집단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연령집단 내 비중도 증가하여 66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여성은 18%, 남성은 13%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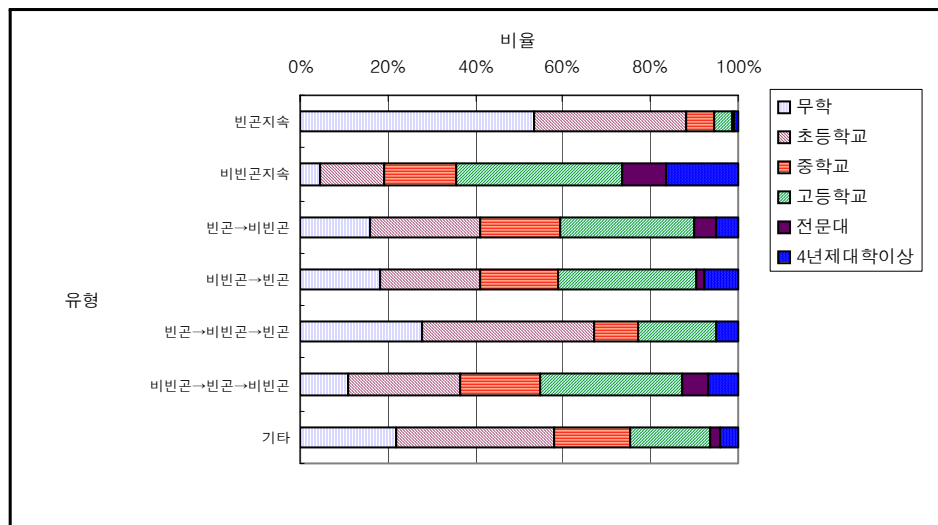


<그림 IV-29> 연령별 빈곤변화유형 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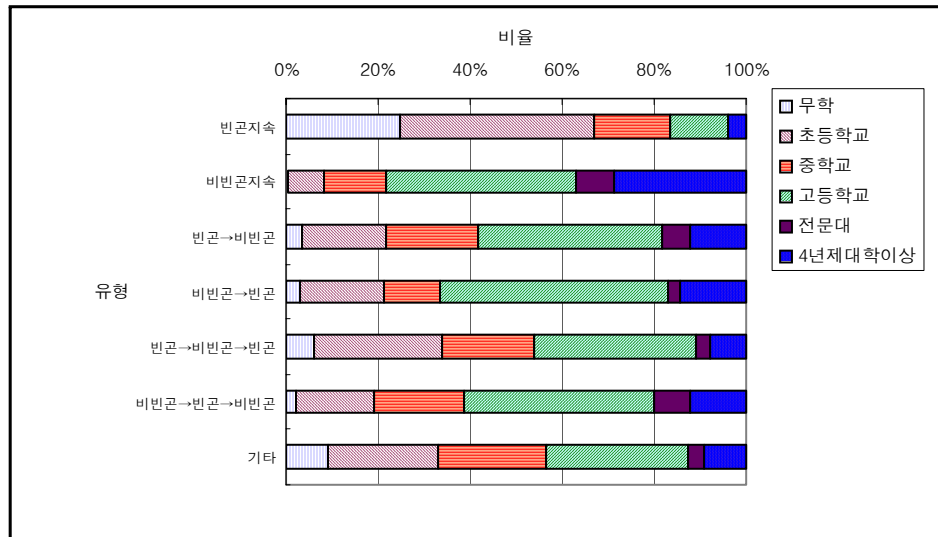


<그림 IV-30> 연령별 빈곤변화유형 분포 (남성)

학력대별로 비교해 보면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주로 저학력 집단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에 머무를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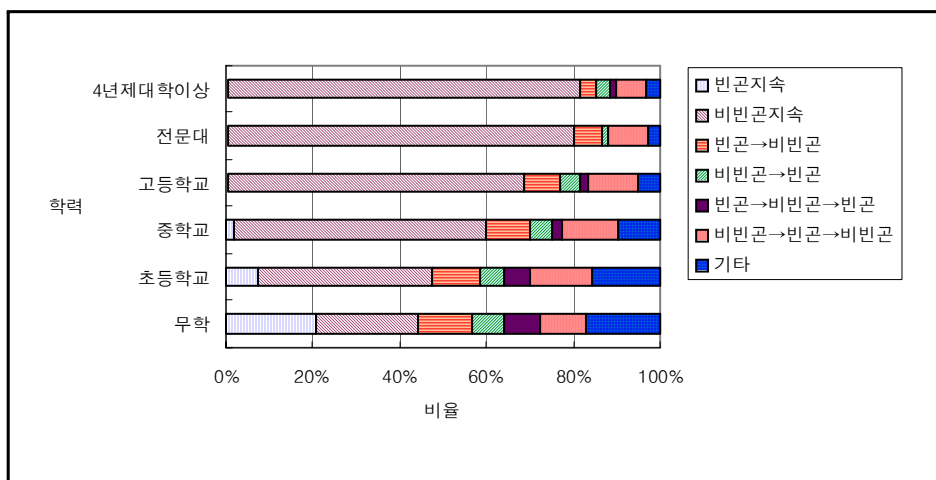


<그림 IV-31> 빈곤변화유형별 학력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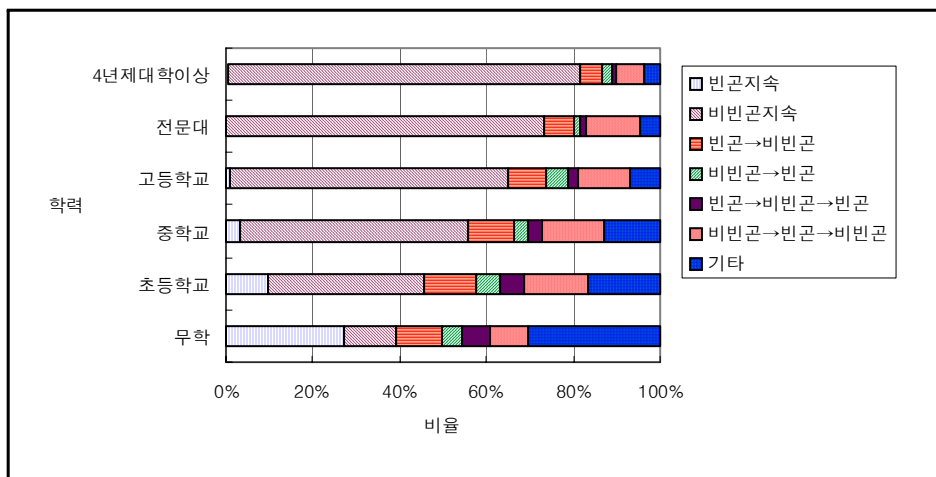


<그림 IV-32> 빈곤변화유형별 학력분포(남성)

남녀 공히 동일 학력 대에서 비교해보면 무학집단의 빈곤지속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비빈곤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집단의 비중이 전체 학력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빈곤상태를 변화시키는 경향은 학력증가와 함께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비빈곤을 유지하는 경향이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빈곤간의 관계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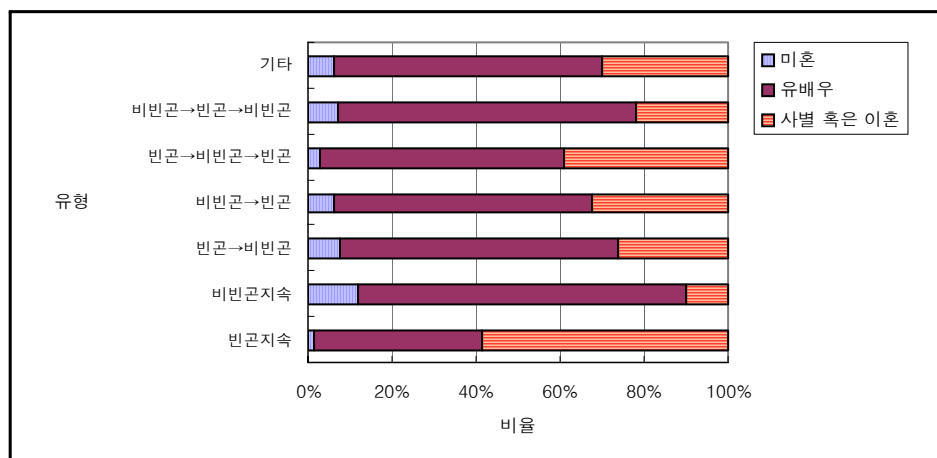


<그림 IV-33>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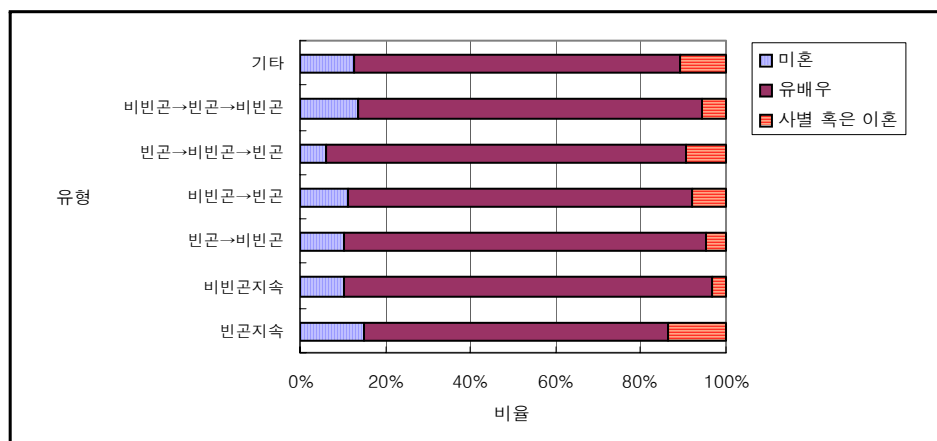


<그림 IV-34>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남성)

혼인상태로는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 빈곤집단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은 남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의 비중은 그러한 남성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남성은 미혼들의 빈곤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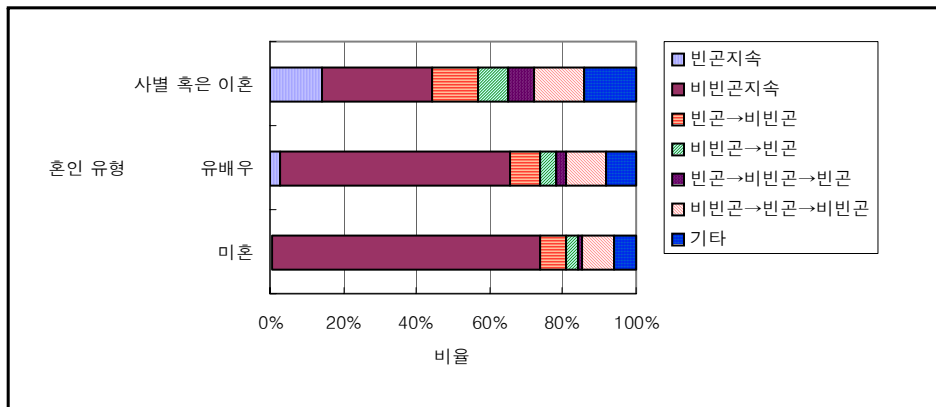


<그림 IV-35> 빈곤변화유형별 혼인상태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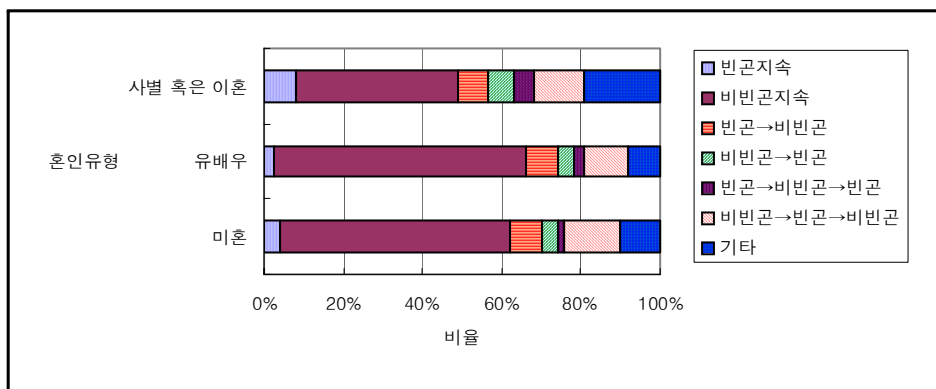


<그림 IV-36> 빈곤변화유형별 혼인상태분포 (남성)

혼인상태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으나 남성들이 미혼일 경우 보다 빈곤한 경향,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일 경우 빈곤한 경향들은 뚜렷이 발견되는 특징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빈곤유형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남성들, 동시에 연령대가 상이한 이들 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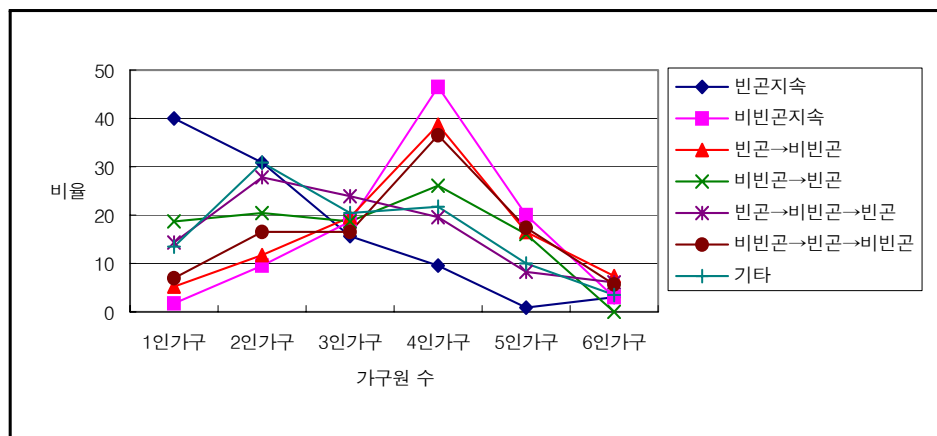
<그림 IV-37> 혼인상태별 빈곤변화유형 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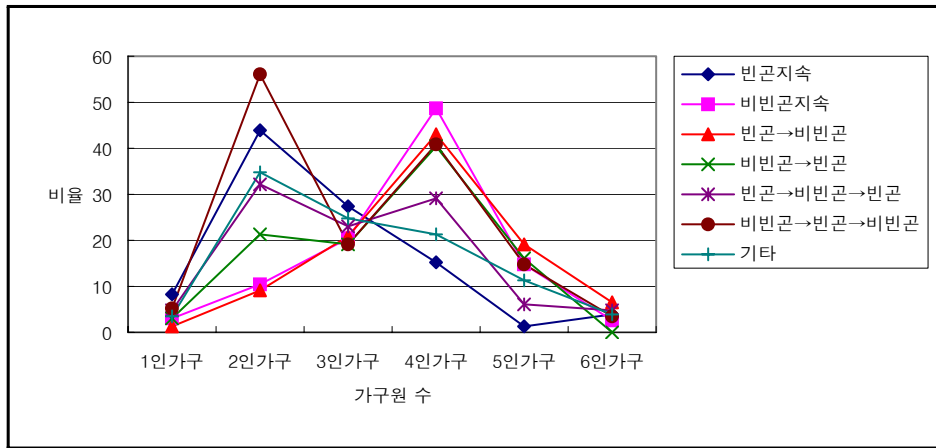
<그림 IV-38> 혼인상태별 빈곤변화유형 분포 (남성)

다. 유형별 가구 사항

빈곤유형별로 이들의 가구사항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을 지속하는 여성 집단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 빈곤화하거나 빈곤과 비빈곤을 오가는 집단의 경우에도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1인 가구에 속한 여성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은 전술한 개인의 인구학적 사항 중 고령자, 이혼이나 사별, 저학력자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들의 특성별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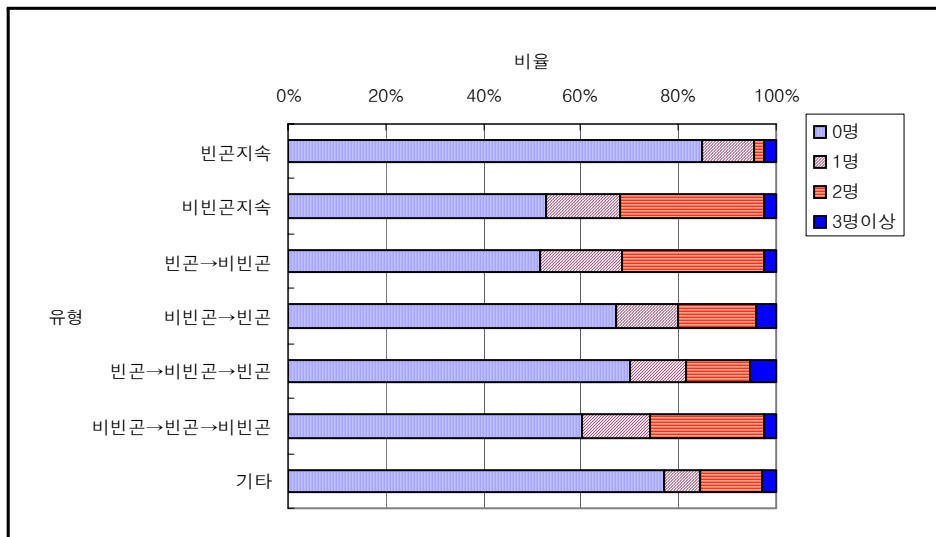


<그림 IV-39>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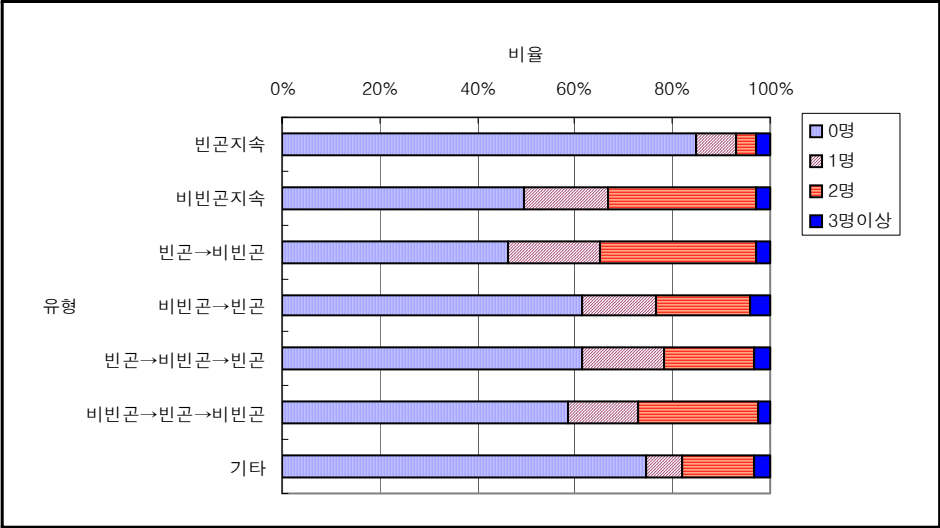


<그림 IV-40>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남성)

가구원수 뿐 아니라 가구구성 역시 빈곤유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취학연령대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비빈곤에서 빈곤화하는 집단은 자녀가 2명인 경우의 비중이 높다.



<그림 IV-41> 가구 내 19세 이하(재학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 (여성)



<그림 IV-42> 가구 내 19세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 (남성)

가구 내 근로소득자의 유무는 빈곤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가구내 근로소득자가 있었던 경우가 여성은 37%, 남성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ptype4의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구내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표 IV-7> 작년 한해 가구 내 근로소득자 유무

(단위: %)

근로소득자 유무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작년에 근로소득 자 있었음	36.84	52.05	97.01	96.90	93.16	95.71	66.43	73.74	53.61	63.08	90.91	91.72	76.69	79.37

근로빈곤 집단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 및 소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소득대비 생활비규모를 분석하였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여성은 월평균 소득 34.8만원, 월평균 생활비 38.8만원 수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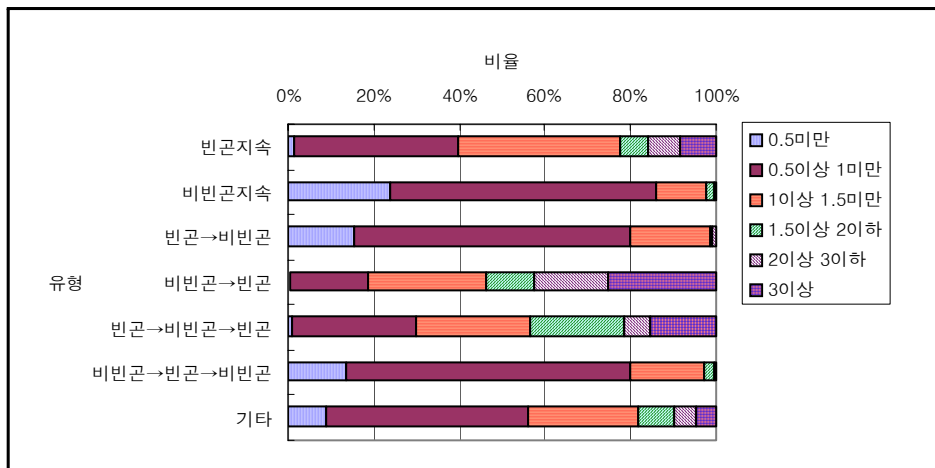
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높아 소득 월평균 42.6만원, 생활비 월평균 46.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8> 월 평균 가구 생활비, 소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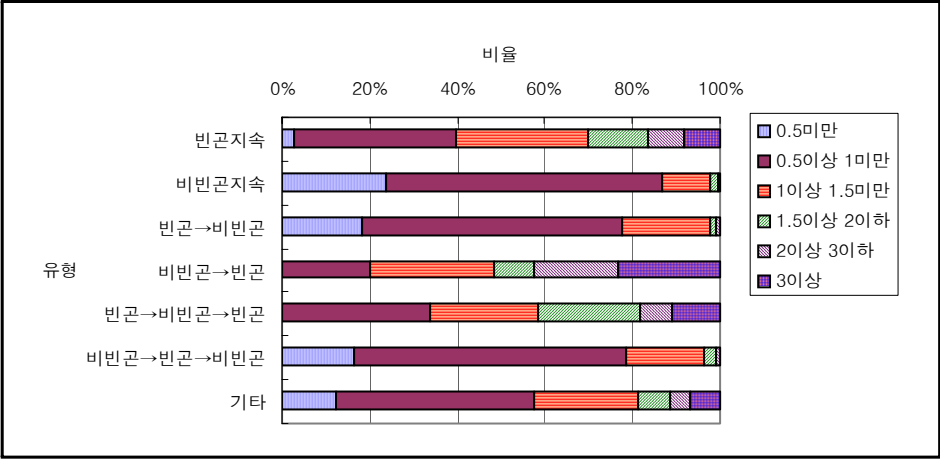
(단위: 만원)

월 평균 생활비 및 소득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생활비 월평균값 (A)	38.8	45.7	214.6	208.4	143.8	154.9	88.6	101.6	83.2	87.5	151.6	151.6	96.3	99.3
소득 월평균값 (B)	34.8	42.6	350.1	340.8	198.6	214	48.1	57	50.4	56.8	223.6	218.6	123.2	138.8
A/B의 월평균값	1.6	1.45	0.71	0.71	0.78	0.79	4.71	3.7	7.7	5.51	0.79	0.79	2.03	1.46

소득수준보다 높은 생활비지출 비율을 보인 경우가 여성 남성 공히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비빈곤가구와 비교하면 매우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ptype4)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소득보다 소비를 2~3배 이상 하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V-43> 소득대비 생활비 규모 (여성)



<그림 IV-44> 소득대비 생활비 규모 (남성)

라. 유형별 정책수급 사항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빈곤정책은 근로와 무관하게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근로빈곤 집단이 소속된 가구가 보호대상 가구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현재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보호대상 가구 비중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비중은 30% 미만으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의 경우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빈곤집단의 보호대상 가구 포괄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9> 보호대상 가구여부

(단위: %)

보호대상 가구여부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보호대상 가구였거나 현재 보호대상	29.32	26.03	0.12	0.19	2.28	0.48	6.29	2.02	15.46	7.69	1.17	0.34	4.51	3.14

이어서 가구 내 사회보험 수혜자 유무를 보면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그 비중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20% 수준이거나 낮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사회안전망을 통한 빈곤완화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0>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혜자유무

(단위: %)

수혜자 유무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수혜자 있음	20.30	19.18	9.43	9.16	7.98	6.67	10.49	17.17	16.49	13.85	10.26	8.97	16.92	20.63

빈곤집단 지원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취업애로요인을 제거하는 노동공급측면의 지원, 직업훈련이나 가족지원 등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고용의 질이 나은 분야로 취업을 지원하고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노동부, 2006). 빈곤집단의 현재 직업훈련 상태를 살펴보면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직업훈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한 집단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나 업종에서 숙련형성에 따른 기대수익이 미미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며 직업훈련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곤집단의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1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교육훈련 직업 유무

직업훈련 경험유무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직업훈련 경험	0	0	4.27	11.35	1.14	6.97	1.39	5.05	2.06	0.88	1.94	6.06	0.38	3.14

라. 빈곤의 진입과 탈출 요인

1) 분석의 모형

빈곤상태에서 비빈곤 상태로 탈출하거나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상태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태적인 모형보다는 동태적인 모형이 적합하다. 정태적 모형은 기준시점에서 일어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 어떠한 현상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태적 모형인 해자드 모형(hazard model)은 빈곤상태지속분포를 식별할 수 있고 최우도함수(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여 추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이행자료가 가지고 있는 단절(censoring)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자드 모형의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빈곤상태 혹은 비빈곤상태의 지속기간을 연속확률변수(continuous random distribution)라 할 때 그 기간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빈곤에서 탈출하거나 빈곤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분포를 갖게 한다. 한 상태의 지속기간과 탈출기간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빈곤에서의 탈출을 혹은 전환율은 근로빈곤지속기간이나 비빈곤지속기간의 역수이다(Greene, 1992).

본 분석에서 사용한 해자드 모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J 개의 탈출경로가 존재하고 미완료상태를 고려할 때 빈곤에서 비빈곤으로의 탈출에 소요된 기간은 식 (4-1) 과 같이 정의된다. 식 (4-1)에서 T 는 관찰된 경과기간이며 T_j^c 는 미 관찰되는 완료된 탈출경로별 경과기간(uncensored destination-specific durations), c 는 미 완료상태의 경과기간(censoring time)이

다.

$$T = \text{Min}(T_1^c, T_2^c, \dots, T_j^c, c) \quad (4-1)$$

탈출경로 j 를 통해 한 상태에서 탈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탈출경로 지표함수(destination-specific indicator function)는 식 (4-2)과 같이 정의된다. 일정시점인 t 직전까지 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문 개인이 그 상태에서 탈출경로 j 를 통해 탈출할 조건부 확률인 탈출경로별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식 (4-3)과 같이 정의된다. 식 (4-3)에서 $\text{prob}[z]$ 는 사건(event) z 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이 위험함수의 적분함수인 탈출경로별 누적위험함수(integrated hazard)는 식 (4-4)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부 탈출경로별 잔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식 (4-5)로 표현되며 일정시점 t 에서의 탈출확률함수(destination-specific failure time sub-density function)는 식 (4-6)으로 정의된다.

$$d_j = 1, (\text{탈출경로 } j \text{를 통해 탈출}) \\ 0 (\text{그렇지 않은 경우}) \quad (4-2)$$

$$h_j(t) = \lim_{\Delta t \rightarrow 0} \text{prob}[t \leq T < t + \Delta t, J = j | T_j \geq 1, 2, \dots, J] / \Delta t \quad (4-3)$$

$$H_j(t) = \int_0^1 h_j(u) \quad (4-4)$$

$$S_j(t) = \exp[-H_j(t)] \quad (4-5)$$

$$f_j(t) = h_j(t)S_j(t) \quad (4-6)$$

분석을 위해서 식 (4-3)의 해자드 함수의 형태를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식 (4-7)과 같다. 식 (4-7)의 첫 번째 항은 탈출경로별 기준선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며 두 번째 항 X 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벡터, β 는 설명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벡터이다.

$$h_j(t) = h_{j0}(t) \exp(-X'_{ij} \beta_j) \quad (4-7)$$

$$\frac{\ln h(t, x)}{\ln h(t, 0)} = -\beta' x \quad (4-8)$$

빈곤에서 탈출하는 집단에 대한 분석, 비빈곤에서 탈출하여 새롭게 빈곤으로 진입하는 집단에 대한 분석 모두 탈출구가 하나($j=1$)인 비례적 해자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비례적 해자드 모형은 시간의존(time dependent covariates)과 무관하게 비례적으로 독립변수의 영향이 분석되므로 시간의존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상태변화 이행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본 해자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위의 기초분석에 이용된 한국노동패널 2차(1999)~7차년도(2004)의 6년간 자료를 패널화한 것이다. 노동패널 2차에서 7차까지의 자료 중 각 년도의 19세 이상의 남녀 인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취업 및 빈곤변화 유형별 분석과 첫 빈곤 혹은 첫 비빈곤으로의 이행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년도의 자료를 패널화해서 구성한 데이터의 총 관측치 수가 남성은 총 28,177명, 여성은 총 30,886명이다. 이 중 취업변화와 빈곤변화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차에서 7차까지 결측이 한 번도 없는 개인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는데 남성이 2,876명, 여성이 총 3,411명이었고 이 중 빈곤변수에 대한 결측이 없는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남성이 2,510명 여성이 2,951명으로 총 5,461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6개년도의 자료를 붙인 것이므로 분석에 사용된 남성의 관측치수는 15,060개(53.4%), 여성은 17,706개(57.32%)이다.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패널데이터 중에서 점하는 비율이다.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대한 사건사 분석을 위하여 빈곤과 비빈곤의 변화가 3회 이상이었던 ptype7 집단을 제외하였고 이렇게 해서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표본은 남성은 2,287명, 여성은 2,685명이며 관측치의 수는 남성은 13,722개(48.7%), 여성은 16,110개(52.2%)이다.

3) 분석결과

다음의 표들에서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대한 해자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는 비빈곤 상태에서 처음으로 빈곤으로 진입한 경우에 대한 계수추정과 재해율을 정리한 것이다. 남녀를 통틀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자녀수 등의 인구학적

요인, 전년도 취업여부 등 취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탈출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을 기준으로 할 때 유배우자는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는 가구주의 자녀가 빈곤할 경우 탈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을 기준으로 할 때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졸업 학력자들의 탈출가능성이 낮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탈출가능성이 높았으나 고등학생이하의 취학연령대 자녀가 많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인 취업사항들과 빈곤탈출과의 관계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근로를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오히려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측기간 내에 빈곤한 집단들이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혹은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탈출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비취업자에 비하여 자영업자나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약간 유의한 빈곤탈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형태나 업종, 직종 등이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들의 인적속성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유형화될 뿐 업종이나 직종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동시에 정부의 사회보험 수급자가 빈곤집단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수급여부가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수급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체 사항은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인구학적 사항인 연령효과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 탈출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특정연령 이후에는 오히려 기간이 짧아지는 u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성에게는 연령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은 혼인상태가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빈곤에서 탈출하는 기간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역시 여성의 경우는 빈곤탈출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은 중졸이하 학력을 중심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상태도 여성에게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남성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IV-12> 빈곤탈출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Parameter Estimate

Model Information	Defendent Variable: 빈곤기간(0-6) Censoring Variable: 빈곤(1:빈곤 0:비빈곤)		
분석대상 집단	전체	여성	남성
성별(1:남성 0:여성)	-0.058(0.3285)		
연령	-0.030(0.0009)***	-0.039(0.0009)***	-0.019(0.1853)
연령²	0.00014(0.0561)*	0.00022(0.0254)**	0.00004(0.7297)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315(0.0103)**	0.132(0.6088)	0.440(0.0055)***
이혼/사별	0.246(0.0525)*	0.173(0.4800)	0.303(0.0720)*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67(0.3068)	0.065(0.5282)	0.181(0.4406)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0.123(0.1881)	0.206(0.0496)**	-0.184(0.4976)
자녀	-0.356(0.0036)***	-0.298(0.2127)	-0.288(0.0628)*
기타	-0.090(0.5887)	-0.116(0.5530)	0.323(0.3783)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0.371(0.0001)***	-0.242(0.1098)	-0.537(0.0002)***
초졸	-0.273(0.0027)***	-0.163(0.2665)	-0.346(0.0039)***
중졸	-0.216(0.0171)**	-0.125(0.3878)	-0.276(0.0221)**
고졸	-0.003(0.9715)	0.074(0.5824)	-0.030(0.7838)
전문대졸	0.123(0.3145)	-0.044(0.8083)	0.197(0.2464)
전년도 근로여부(1:근로 0:비근로)	-0.260(0.0001)***	-0.157(0.0128)**	-0.445(0.0001)***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급여부(1:수급 0:비수급)	-0.050(0.3658)	-0.045(0.5335)	-0.072(0.4146)
가구원 수	0.101(0.0001)***	0.104(0.0001)***	0.092(0.0021)***
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이하 자녀 수	-0.127(0.0001)***	-0.130(0.0003)***	-0.116(0.0084)***
고용형태(무직 기준)			
상용직	0.401(0.0881)*	0.557(0.0829)*	0.103(0.7517)
임시·일용직	0.290(0.2211)	0.459(0.1540)	0.108(0.7395)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0.488(0.0359)**	0.734(0.0186)**	0.124(0.7004)
산업(무직 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260(0.2684)	-0.599(0.0561)*	0.310(0.3507)
제조업	-0.232(0.3765)	-0.329(0.4016)	-0.080(0.8271)
건설	-0.253(0.3402)	-0.634(0.1822)	-0.190(0.6044)
도소매, 음식숙박	-0.223(0.3980)	-0.225(0.5599)	-0.123(0.7415)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0.125(0.6567)	-0.109(0.8202)	-0.051(0.8935)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0.198(0.4612)	-0.348(0.3800)	-0.012(0.9741)
교육서비스 외	-0.218(0.4095)	-0.103(0.7893)	-0.312(0.4073)
직종(무직 기준)			
단순노무직	0.101(0.6639)	-0.060(0.8608)	0.345(0.3007)
사무직	-0.084(0.7438)	-0.147(0.7026)	0.117(0.7469)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0.021(0.9282)	-0.320(0.3574)	0.506(0.1403)
기능원 및 조작원	0.125(0.5831)	-0.079(0.8251)	0.427(0.1836)
관리자 및 전문가	-0.049(0.8477)	-0.120(0.7650)	0.178(0.6169)
합계(event) LR χ^2 (df)	29832(4125) 413.5721	16110(2495) 257.2817	13722(1630) 195.4735

*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p-value

2)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표 IV-13> 빈곤탈출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hazard ratio

분석대상 집단	전체	여성	남성
성별(1:남성 0:여성)	0.937		
연령	0.970	0.961	0.979
연령²	1.000	1.000	1.000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1.382	1.134	1.579
이혼/사별	1.280	1.168	1.369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929	1.059	1.195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1.131	1.221	0.837
자녀	0.705	0.746	0.748
기타	0.909	0.888	1.392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0.682	0.785	0.572
초졸	0.749	0.846	0.690
중졸	0.796	0.879	0.741
고졸	0.987	1.078	0.950
전문대졸	1.127	0.960	1.209
전년도 근로여부(1:근로 0:비근로)	0.780	0.865	0.651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급여부(1:수급 0:비수급)	0.949	0.957	0.925
가구원 수	1.108	1.112	1.095
고등학생(재학생 포함)이하 자녀 수	0.879	0.879	0.890
고용형태(상용직 기준)			
임시·일용직	0.917	0.932	1.022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1.123	1.242	1.046
산업(제조업 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1.102	0.908	1.448
건설	0.984	0.751	0.919
도소매, 음식숙박	1.016	1.135	0.982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1.128	1.297	1.052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1.057	1.011	1.128
교육서비스 외	1.029	1.291	0.826
직종(관리자 및 전문가외 기준)			
단순노무직	1.256	1.117	1.350
사무직	1.039	1.027	1.056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1.153	0.853	1.567
기능원 및 조작원	1.290	1.124	1.472

이어서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으로 최초 진입한 집단에 대한 해자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초기 비빈곤 상태이나 관측기간 동안 빈곤으로 상태를 전환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최초 빈곤진입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와 남성, 여성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빈곤탈출과 마찬가지로 빈곤진입에도 연령은 여전히 유의한 변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진입 기간은 짧아지고 일정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측기간이 짧아 연령변화를 길게 관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초기에 비빈곤이었던 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한다고 하여 빈곤화하는 것은 아닌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으로 진입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빈곤상태에 진입하기 쉽고 한번 진입하면 빠져나오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원수의 효과는 빈곤탈출과 유사하여 가구원수가 많으면 빈곤화 가능성이 낮고 가구원 중 취학연령자녀수가 많으면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노동시장 사항을 보면 고용상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특정 유형이 빈곤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업종별로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과는 달리 전기나 운수, 통신, 금융, 보험업종 종사자, 부동산, 사업서비스 종사자 등일 경우 빈곤화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직종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분석결과와 여성들의 차이점은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다소 유의한 빈곤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빈곤탈출에서와 달리 교육효과가 빈곤해지는데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업종효과(전기나 운수, 통신, 금융, 보험업종 종사자)는 여성에게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구원수나 가구구성원에 따른 효과도 여성에게 유의하게 나타날 뿐 남성에게는 그다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표 IV-14> 비빈곤탈출(빈곤진입)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Parameter Estimate

Model Information	Dependent Variable: 비빈곤기간(0-6) Censoring Variable: 빈곤(1:빈곤 0:비빈곤)		
분석대상 집단	전체	여성	남성
성별(1:남성 0:여성)	-0.014(0.6090)		
연령	-0.018(0.0001)***	-0.022(0.0001)***	-0.015(0.0157)**
연령²	0.00021(0.0001)***	0.00026(0.0001)***	0.00017(0.0071)***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030(0.4750)	0.078(0.3899)	-0.043(0.4089)
이혼/사별	0.072(0.1607)	0.151(0.0880)*	-0.015(0.8377)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55(0.0687)*	-0.115(0.0441)**	-0.014(0.9077)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0.381(0.0001)***	-0.434(0.0001)***	-0.314(0.0103)**
자녀	0.008(0.8526)	0.027(0.7530)	-0.019(0.7200)
기타	-0.132(0.0460)**	-0.238(0.0070)***	0.039(0.7518)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0.343(0.0001)***	0.293(0.0001)***	0.422(0.0001)***
초졸	0.240(0.0001)***	0.219(0.0001)***	0.237(0.0001)***
중졸	0.158(0.0001)***	0.162(0.0001)***	0.147(0.0001)***
고졸	0.108(0.0001)***	0.110(0.0004)***	0.111(0.0001)***
전문대졸	0.035(0.1756)	0.011(0.7552)	0.069(0.0707)*
전년도 근로여부(1:근로 0:비근로)	0.032(0.1336)	0.027(0.2941)	0.019(0.6222)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급여부 (1:수급 0:비수급)	-0.033(0.2018)	-0.021(0.5329)	-0.070(0.0727)*
가구원 수	-0.029(0.0001)***	-0.035(0.0006)***	-0.019(0.0814)*
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이하 자녀 수	0.022(0.0168)**	0.022(0.0857)*	0.022(0.1136)
고용형태(무직 기준)			
상용직	0.038(0.6771)	0.029(0.8510)	0.014(0.9001)
임시·일용직	0.139(0.1422)	0.108(0.4917)	0.127(0.2973)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0.095(0.3067)	0.074(0.6347)	0.078(0.5055)
산업(무직 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063(0.5195)	-0.046(0.7736)	-0.086(0.4896)
제조업	-0.169(0.0975)*	-0.182(0.2536)	-0.198(0.1375)
건설	-0.166(0.1106)	-0.178(0.3504)	-0.179(0.1849)
도소매, 음식숙박	-0.142(0.1602)	-0.184(0.2393)	-0.165(0.2178)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0.233(0.0232)**	-0.304(0.0588)*	-0.235(0.0799)*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0.211(0.0411)**	-0.202(0.2085)	-0.243(0.0712)*
교육서비스 외	-0.178(0.0805)*	-0.206(0.1896)	-0.203(0.1310)
직종(무직 기준)			
단순노무직	0.120(0.1901)	0.201(0.2351)	0.069(0.5332)
사무직	0.040(0.6570)	0.140(0.4060)	-0.021(0.8412)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0.048(0.5895)	0.145(0.3823)	-0.021(0.8421)
기능원 및 조직원	0.049(0.5823)	0.125(0.4617)	-0.004(0.9672)
관리자 및 전문가	0.051(0.5741)	0.124(0.4630)	0.009(0.9271)
합계(event)	29832(25707)	16110(13615)	13722(12092)
LR χ^2 (df)	460.4311	291.5353	203.8858

*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p-value

2)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표 IV-15> 비빈곤탈출(빈곤진입)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 Hazard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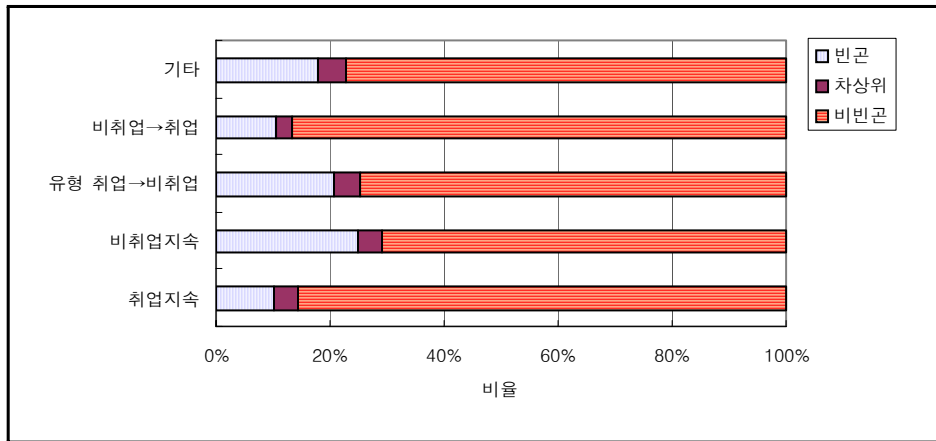
분석대상 집단	전체	여성	남성
성별(1:남성 0:여성)	0.986		
연령	0.982	0.978	0.984
연령²	1.000	1.000	1.000
결혼상태(미혼기준)			
유배우(별거포함)	0.970	1.081	0.958
이혼/사별	1.075	1.163	0.984
가구주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946	0.891	0.986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	0.683	0.647	0.730
자녀	1.008	1.028	0.981
기타	0.875	0.788	1.040
교육수준(대졸이상 기준)			
무학	1.409	1.340	1.526
초졸	1.271	1.246	1.268
중졸	1.172	1.177	1.159
고졸	1.115	1.116	1.118
전문대졸	1.037	1.012	1.072
전년도 근로여부(1:근로 0:비근로)	1.033	1.028	1.019
전년도 가구 내 사회보험 수급여부 (1:수급 0:비수급)	0.967	0.978	0.932
가구원 수	0.971	0.965	0.981
고등학생(재수생 포함)이하 자녀 수	1.023	1.023	1.022
고용형태(무직 기준)			
상용직	1.040	1.030	1.015
임시·일용직	1.150	1.114	1.136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1.100	1.077	1.082
산업(무직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939	0.954	0.917
제조업	0.844	0.833	0.820
건설	0.847	0.836	0.836
도소매, 음식숙박	0.867	0.831	0.848
전기, 운수·통신, 금융, 보험	0.792	0.737	0.790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	0.810	0.817	0.784
교육서비스 외	0.836	0.813	0.816
직종(무직 기준)			
단순노무직	1.128	1.223	1.072
사무직	1.041	1.151	0.978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직 근로자	1.050	1.156	0.979
기능원 및 조작원	1.051	1.134	0.996
관리자 및 전문가	1.053	1.132	1.010

3. 여성근로빈곤집단의 동태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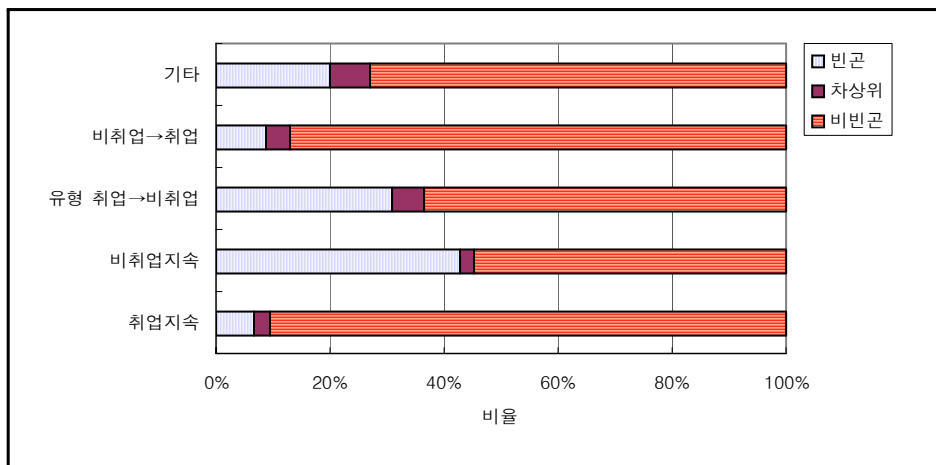
가. 빈곤유형과 취업 상태

앞서 살펴본 근로자와 빈곤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상인 빈곤하면서 취업한 집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취업상태의 변화와 빈곤변화를 함께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상태변화에 따른 빈곤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취업과 빈곤과의 관계는 가구소득, 즉 타 가구구성원의 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빈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이유로 취업한다 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취업유형별로 2004년 시점에서 이들의 빈곤여부를 파악해보았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빈곤집단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가장 빈곤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 경우 남성의 빈곤비율이 여성의 빈곤비율보다 높아 남성이 비취업을 지속하는 경우 개인과 가구는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취업한 경우나 일정 시점이후 취업을 지속해오는 집단은 빈곤집단 비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취업과 빈곤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차상위 집단에서 나타난다. 여성은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라 차상위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경우 차상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집단의 빈곤비율이 높은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나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type3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빈곤비율이 높아 이들의 비취업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원인, 건강의 문제나 장애문제, 고 연령 등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빈곤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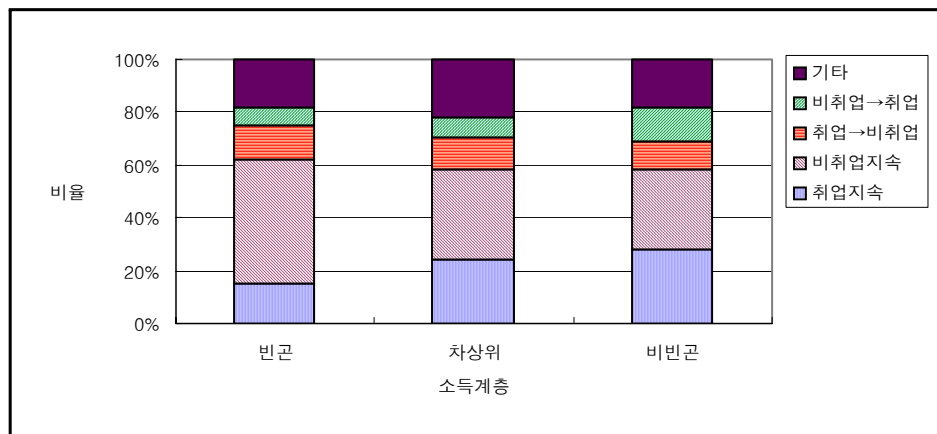
<그림 IV-45>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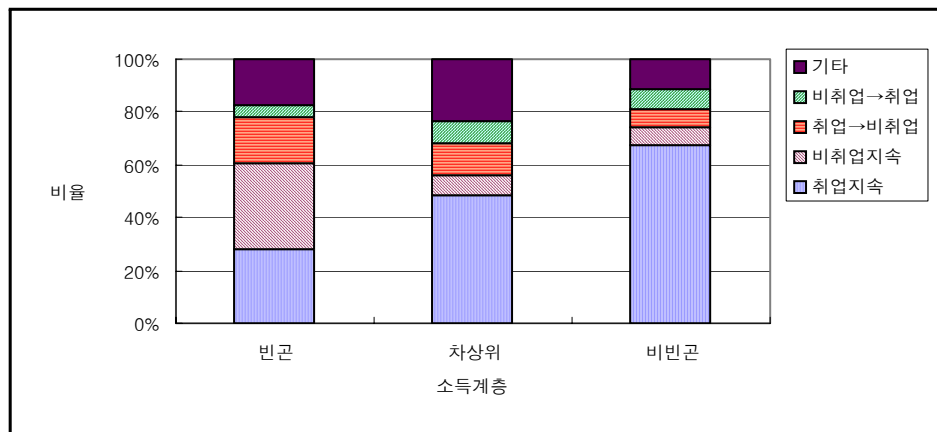
<그림 IV-46> 취업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 (남성)

다른 방향에서 각 소득계층별로 취업유형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V-47>, <그림 IV-48>과 같다. 빈곤유형에 따른 취업유형을 파악해보면 연속 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연속취업자의 비중도 여성은 15%, 남성은 28%에 달한다. 빈곤집단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역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남성은 오히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빈곤집단 내에서 더 높고 여성도 취업 비취업 반복자와 연속 취업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다. 차상위 집단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취업을 지속하고도 차상위에 머무르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는 취업에서 얻는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어 저 소득자들의 취업의 질이 취업여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47>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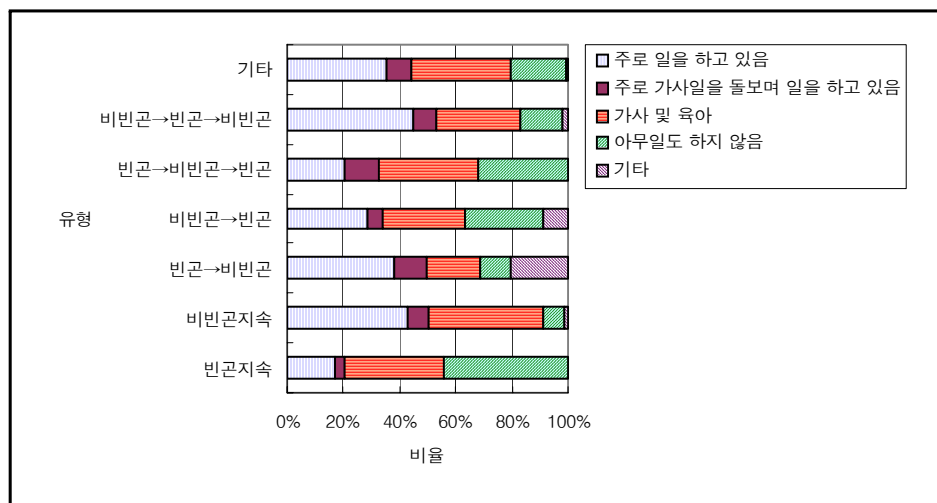


<그림 IV-48>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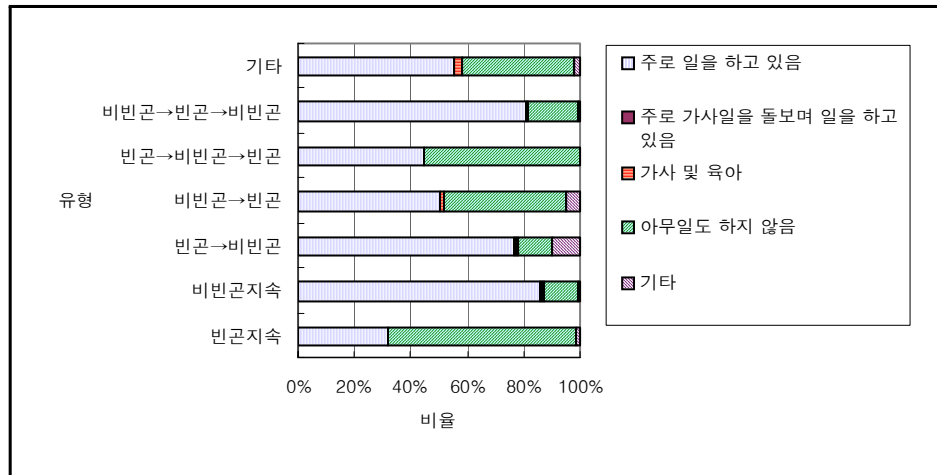
빈곤유형에 따른 취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해보기로 하자. <그림 IV-49>와 <그림 IV-50>에서 Ptype1, Ptype2, Ptype7은 2004

년(7차년도 자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 유형은 마지막으로 전환된 해의 평소활동을 본 것이다. 빈곤을 지속한 집단을 우선 보면 남성의 경우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빈곤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사를 돌보고 있는 집단의 비중이 뒤를 잇는다.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은 가사를 주로 돌보는 집단의 반수에 불과하였다. 여성 빈곤지속집단의 경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물론 남성에 비하여 적은 수이지만 하나 가사가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이를 지원하여 일하는 집단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전환한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주로 일을 하거나 가사 일을 돌보며 일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든 빈곤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돌보는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가사활동에 여성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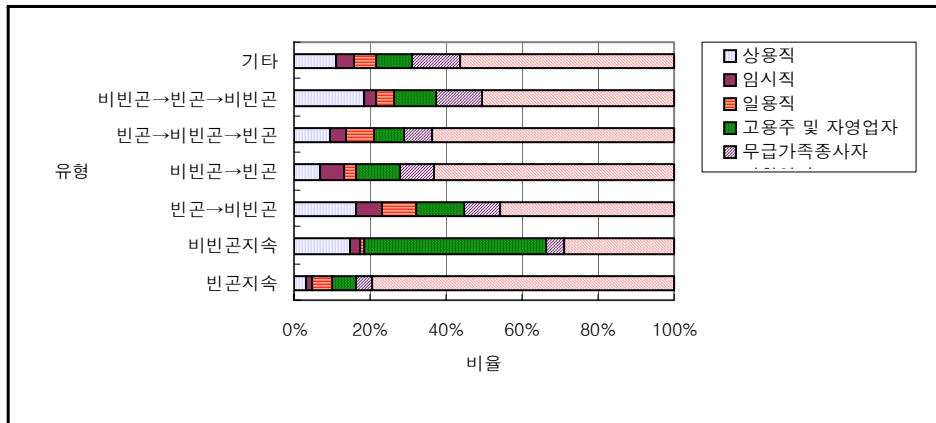
<그림 IV-49> 빈곤변화유형별 주된 평소활동(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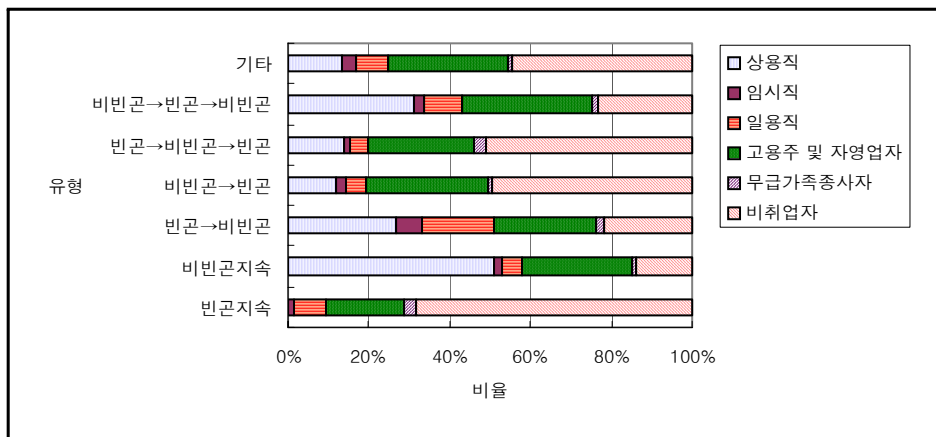
<그림 IV-50> 빈곤변화유형별 주된 평소활동(남성)

빈곤의 유형별로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V-51>와 <그림 IV-51>과 같다. 빈곤의 유형 중 첫 번째인 빈곤지속 집단(ptype1)의 경우 측정 마지막시점인 2004년 현재 여성의 80%가 비취업 상태, 남성의 70% 정도가 비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에서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전환한 집단의 전환시점 정보를 살펴보면 여성은 상용직에 이어 고용주/자영자 집단의 탈출비중이 높았으나 남성은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자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에서 여성은 무급종사자 및 고용주/자영자 집단, 남성은 고용주/자영자 집단의 비중이 높아 영세자 영업자를 중심으로 빈곤화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하였다가 다시 빈곤으로 진입한 집단인 ptype5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비빈곤 상태에 있다가 빈곤으로 다시 비빈곤으로 탈출한 집단의 경우에는 자영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부문 근로자들의 빈곤화보다 오히려 자영업부문 및 상용직 부문의 문제점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여성들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을 고려하면 자영업부문의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1> 빈곤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상태 분포(여성)



<그림 IV-52> 빈곤변화유형별 종사상지위상태 분포(남성)

이들 중 취업자 집단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빈곤을 지속하는 근로빈곤집단은 1차 산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남성은 건설업종사자의 비중이 여성은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하는 경향은 제조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진입하는 경향은 여성은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남성은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표 IV-16>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취업인구의 산업별 분포

(단위: %)

업종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53.83	50.00	5.35	4.39	17.40	17.38	21.74	13.73	21.39	15.62	10.85	9.26	27.83	29.75
제조업	7.70	0	18.79	23.30	19.57	19.89	26.09	29.41	21.39	18.74	19.87	20.37	7.83	14.8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0	0.36	0.91	0	0.62	0	0	3.01	0	0	0.46	0	0
건설업	0	18.17	1.19	12.33	2.89	26.10	0	17.65	0	18.74	0	17.13	3.48	15.71
도소매	19.23	9.10	17.72	12.79	18.84	12.42	0	11.76	15.06	21.87	24.70	22.68	10.44	15.71
숙박 및 음식점업	0	0	13.08	3.03	18.12	3.11	21.74	1.96	6.04	0	14.46	3.24	18.25	4.13
운수창고 및 통신업	0	0	2.62	10.97	0.72	6.83	0	1.96	0	9.38	0	8.80	0.88	4.13
금융 및 보험업	0	0	6.18	4.24	2.17	1.24	0	0	3.01	0	3.01	0	0	0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	0	7.25	8.70	5.80	6.83	8.71	13.73	6.04	6.26	5.42	7.40	8.69	8.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70	4.55	1.78	5.22	0	0.62	2.16	1.96	3.01	0	1.20	0.46	0.88	0.82
교육서비스업	0	0	13.20	5.74	2.17	1.24	4.35	1.96	3.01	0	6.03	3.24	6.08	0.8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	0	4.52	1.66	2.17	0	2.16	0	3.01	0	3.01	0.46	2.60	0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53	18.17	7.97	6.73	10.14	3.73	13.06	5.88	15.06	9.38	11.44	6.48	13.04	5.7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비취업자를 제외한 비율임

취업자 집단의 직종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서비스근로자, 단순노무직근로자가 중심이 되어있으며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전 직종에 걸친 고른 분포를 보이며 농림어업종사자와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비중이 빈곤집단과 비교할 때 낮은 특징이 있다.

<표 IV-17>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직종별 분포

(단위: %)

직종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0	0.72	3.64	0	0	0	4.00	0	9.38	0	0.46	0.86	0.82
전문가	0	0	10.65	8.35	0	1.89	3.92	4.00	5.88	3.13	0.61	1.39	6.03	0.82
기술공 및 준전문가	0	4.55	12.20	14.05	0.71	0	3.92	6.00	2.94	0	4.85	5.56	3.45	7.38
사무직원	3.85	0	15.31	10.33	4.29	8.18	3.92	4.00	2.94	0	8.48	4.63	6.03	2.46
서비스근로자와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23.08	9.09	32.06	15.34	42.86	13.84	35.29	18.00	28.13	28.13	43.64	24.54	31.90	12.30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50.00	50.00	5.38	4.25	17.14	16.98	17.65	14.00	14.71	18.75	10.30	8.33	26.72	28.6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0	22.73	7.78	19.44	13.57	22.01	9.80	34.00	14.71	15.63	9.70	24.54	6.90	22.9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69	0	6.58	16.48	5.71	15.09	11.76	10.00	8.82	12.50	5.45	20.37	2.59	9.02
단순노무종사자	15.38	13.64	9.33	8.05	15.71	22.01	13.73	6.00	23.53	12.50	16.97	10.19	14.66	15.5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비취업자를 제외한 비율임

나. 취업지속유형과 빈곤지속유형

빈곤의 변화와 취업간의 교차표를 통하여 빈곤과 취업변화 경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취업상태의 변화는 빈곤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취업상태,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빈곤상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빈곤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비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취업상태에 있다가 비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빈곤지속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중에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의 규모가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하는 집단의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은 빈곤을 지속한 집단 중 취업을 지속한 경우가 전체의 1/4에 달할 정도로 취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규모는 오히려 노동시장을 드나드는 불완전 취업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탈출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이행한 ptype3의 경우 여성은 비취업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집단의 비중이 26%이며 취업자를 지속한 경우가 28.5%에 그치는데 반하여 남성은 빈곤에서 탈출한 집단 중 취업을 지속한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을 결정하는데 남성의 취업여부가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의 경우도 남성은 취업을 지속한 집단,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반하여 여성이 비취업을 지속하는 일관된 경향과 더불어 type5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빈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다시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빈곤선 근처에 머무른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비빈곤의 반복횟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남녀 근로집단의 빈곤변화유형별 취업변화유형 분포

(단위: %)

유형	Ptype1 (빈곤지속)		Ptype2 (비빈곤지속)		Ptype3 (빈→비)		Ptype4 (비→빈)		Ptype5 (빈→비→빈)		Ptype6 (비→빈→비)		Ptype7 (기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Type1 (취업지속)	12.03	24.66	29.04	75.23	28.52	59.52	15.38	35.35	15.46	27.69	28.74	51.72	23.68	38.12
Type2 (비취업지속)	60.15	56.16	31.62	5.35	25.86	6.67	43.86	18.18	46.39	29.23	28.74	10.69	33.08	22.42
Type3 (취→비취)	13.53	6.85	10.19	5.94	11.79	7.14	16.78	25.25	8.25	13.85	9.97	7.93	10.90	13.45
Type4 (비취→취)	3.76	2.74	12.24	5.48	14.45	13.33	6.29	5.05	8.25	4.62	13.20	9.66	10.53	7.62
Type5 (기타)	10.53	9.59	16.92	8.00	19.39	13.33	18.18	16.16	21.65	24.62	19.35	20.00	21.80	18.3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래서 취업상태에 따라 빈곤이행 여부를 다시 파악해보면 취업을 지속한 집단의 경우 비빈곤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여성은 63%가 남성은 73%가 비빈곤 상태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취업을 지속한 경우에도 빈곤과 비빈곤을 넘나드는 집단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취업을 지속한 여성 중 22%에 달하는 집단이 빈곤과 비빈곤을 반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성은 이 비중이 다소 낮아 16% 정도에 이르고 있어 여성취업지속자의 가구소득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비취업 지속자의 경우를 보면 비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전체의 55%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빈곤한 경우나 빈곤과 비빈곤을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 수준에 달했다. 남성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의 32% 정도만이 비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빈곤을 경험하거나 빈곤 및 비빈곤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여부와 빈곤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중에서 빈곤과 비빈곤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와 빈곤간의 관계가 남성처럼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남녀 근로집단의 취업변화유형별 빈곤변화유형분포

(단위: %)

유형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Ptype1	2.04	1.13	8.15	16.02	5.66	2.51	1.46	1.19	2.67	2.41
Ptype2	63.18	73.01	55.05	32.42	54.72	46.23	61.11	50.6	55.05	42.76
Ptype3	9.55	7.83	6.93	5.47	9.75	7.54	11.11	16.67	9.71	9.66
Ptype4	2.80	2.19	6.32	7.03	7.55	12.56	2.63	2.98	4.95	5.52
Ptype5	1.91	1.13	4.59	7.42	2.52	4.52	2.34	1.79	4.00	5.52
Ptype6	12.48	9.39	9.99	12.11	10.69	11.56	13.16	16.67	12.57	20
Ptype7	8.03	5.32	8.97	19.53	9.12	15.08	8.19	10.12	11.05	14.1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 취업지속유형과 빈곤지속유형에 따른 세부 특성

1) 빈곤과 취업을 모두 지속하는 집단

이들은 근로빈곤의 전형적인 유형이나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았다. 개괄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60대 후반 비중이 가장 높고 40대 초반연령과 60대 초반 연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60대 초반과 40대 초반이 많기는 하나 30대 후반에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분포를 보면 여성은 초등학교 졸업연령과 무학 비중이 가장 높고 중졸학력자로 다수 발견되나 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남성도 여성과 유사하나 고졸학력자 이상 집단, 대졸 비중도 상당히 높아 학력분포가 여성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구사항은 의외로 2인가구와 3인 가구 비중이 높고 1인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남성은 1인 가구 비중이 여성보다 더 낮았다. 자녀가 없는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인 가구에 무자녀인 경우가 빈곤과 취업을 지속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구구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보호대상 가구가 된 경험이 매우 적게 나타났고 개인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 가구에서 복수의 개인이 추출된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매우 적었다. 유사하게 가구 내에서 사회보험 수급자가 있었던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빈곤집단 중 여전히 정책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보호대상 가구에서는 적고 사회보험수급에서는 오히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여성의 경우 월평균 47.5만원 수준, 생활비는 이보다 많은 50.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월평균 59만원, 생활비는 52만원으로 나타나 근로하는 빈곤여성의 경우 소득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고용사항을 보면 남성은 고용주 및 자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역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빈곤집단 내 비중이 미미하나 여성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업종분포를 보면 남성은 농림어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등 종사비중이 높고 여성은 농림어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비중과 더불어 도소매,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빈곤화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을 보면 남녀 공히 농림어업기술자 비중이 높지만 이를 제외하고 남성은 기능원 집단이 여성은 판매직 종근로자, 조립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았다.

2) 빈곤을 지속하고 취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

빈곤을 지속하고 취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의 규모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태를 개괄해보면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여성은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비중이 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녀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 집단이 주를 이룬다. 남성은 2인 가구, 여성은 1인 가구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사회보험 수급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호대상 가구 경험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고 여성의 경우 비중이 남성보다 50%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고령자 단독가구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는 경우가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여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가구원도 취업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소득사항은 빈곤 및 취업지속가구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2만원, 생활비가 40.6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각각 40.7만원, 40.9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고용사항을 보면 남성 중 고용주, 자영자 비중이 높으나 일용직, 임시직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들의 업종분포를 보면 남녀 공히 사업서비스업 부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주를 이룬다.

3) 취업을 지속하고 빈곤을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

취업을 지속하면서 빈곤을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분석대상자 4,833명 중 14%를 차지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5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여성은 40대 초반, 40대 후반, 66세 이상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성도 40대 초반 연령의 비중이 높았고 50대 초반, 40대 후반과 30대 후반도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어 취업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자유롭지 않은 집단의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학력분포는 남성은 고졸자가, 여성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대졸이상 집단의 비중도 1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남성은 유배우가 90% 수준으로 일반적이지만 여성은 이혼이나 사별이 25%, 미혼이 약 5%를 차지한다.

가구구성을 보면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과 달리 남녀모두 4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 비중이 높다. 자녀수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1자녀보다는 2자녀 집단의 비중이 높아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빈곤은 자녀세대 빈곤으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들 집단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보험 수급이나 보호대상 가구지정 등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의 경우 178만원, 생

활비 127만원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소득 월평균 189만원, 생활비 146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에 비하여 소득과 생활비 규모가 큰 것은 이들의 가구구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빈곤 및 취업지속자의 경우 2인 가구 비중이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취업을 지속하며 빈곤경험이 있는 집단은 4인 가구에 자녀가 있는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용사항에서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녀 공히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뒤를 잇고 남성은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상당규모에 달한다. 열악한 부문에서 근로하는 집단의 근로조건 개선이 빈곤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업종분포를 보면 남성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종사비중이 높고 여성은 도소매, 제조업, 음식숙박업 종사 비중이 높다. 직종도 기능원, 조립,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남성 중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은 판매근로자와 단순노무 근로자 비중이 높다.

4) 빈곤과 취업을 모두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

취업도 반복하고 빈곤도 반복하는 불안정한 집단의 규모는 전체 분석대상자의 17%를 차지한다. 이들은 66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남녀 각 약 17%, 15%를 차지하고 이어서 남성은 40대 후반(13%) 여성은 40대 초반(13%)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넓은 연령분포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 연령의 비중도 약 5%로 나타나 남성에 비하여 높은 초기연령대 불안정을 보인다. 혼인상태를 보면 이러한 사항이 잘 나타나는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배우 비율이 낮고 남녀 모두 미혼집단의 비중이 남성 21%, 여성 11%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점은 학력이다. 남녀 모두 고졸학력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으며 초급대 및 대졸학력 집단의 비중도 남성 약 20%, 여성 약 17%로 젊은 세대 고학력자들의 빈곤가능성을 높게 보여준다. 이들은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순으로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자녀가 없는 집단의 비중과 2자녀 집단의 비중이 크다.

보호대상 가구 경험은 거의 없으나 사회보험 수급 경험은 취업을 지속하고 빈곤을 반복적으로 하는 집단에 비하여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의 경우 상대

적으로 사회보험에서 구제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 내에서는 대체로 취업자가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현재 가구 소득의 경우 여성은 월평균 158만원, 남성은 월평균 165만원으로 오히려 소득수준은 취업을 지속하고 빈곤을 반복하는 집단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들의 고용사항을 보면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여성은 임시직이 남성은 고용주, 자영자가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업종은 남성의 경우 도소매, 제조업, 건설업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직종은 남성은 단순노무직 및 기능원의 분포가, 여성은 판매직과 단순노무근로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상태의 동태적 변화, 빈곤상태의 동태적 변화, 취업과 빈곤의 동태적 변화 등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별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취업상태를 동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집단의 유형을 모두 5개로 구분하여 보았다.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취업상태에서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집단,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하는 집단, 취업과 비취업을 모두 1회 이상 반복하는 집단 등 5개의 유형이다. 여성들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비취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지속한 경우보다 높았다. 관측기간 내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의 비중이 취업을 지속하는 경우보다 낮은 것도 남성과 비교할 때 특징적이다. 여성들의 비취업 지속이나 취업/비취업 반복 경향은 청년기부터 시작하여 출산 및 양육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40대 장년층 집단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며 20대 후반 연령에서도 취업지속집단과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불안정한 취업지위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볼 때 고졸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학력이 낮은 집단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학력이 높은 집단은 청년기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는 전형적인 L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우는 여성 임시직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상용직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집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사자가 직종으로는 판매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 및 직종의 취업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은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한 경우는 30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취업에 이어 빈곤상태에 진입하고 탈퇴하는 집단을 모두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다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다시 비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3회 이상 상태를 변화시킨 집단 모두 7개의 유형이다.

빈곤을 관측기간 내내 지속한 집단은 고령자의 비중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은 고령자 집단이 많았지만 비빈곤으로 탈출하는 경향은 장년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구구성면에서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이 고령자가 많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로 빈곤으로 진입하는 계층은 자녀가 2인인 가구가 많아 중산층의 양극화나 빈곤집단 편입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은 가구 내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빈곤집단은 기본적으로 소득보다 생활비 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가구소득이 남성 42.6만원, 여성 34.8만원 수준에 머물러 이들의 소득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호대상 가구에 포함되거나 사회보험수급을 받은 경험은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에서의 탈출과 빈곤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및 고교재학이하 자녀의 수 등 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탈출이 어려웠다. 낮은 교육수준은 반대로 빈곤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빈곤탈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빈곤 진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이혼이나 사별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관

런된 부분을 보면 빈곤탈출의 뚜렷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업종이나 직종, 종사상 지위 등에 의한 탈출 및 진입이 잘 파악되지 않으며 다만 괜찮은 일자리가 다수 있다고 알려진 전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등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빈곤화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어 빈곤화하는데 있어 정형화된 유형이 없고 오히려 다양한 업종 및 직종,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빈곤화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변화 및 취업변화를 동시에 유형화해보면 빈곤과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취업은 지속하나 빈곤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은 지속하나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과 취업을 모두 반복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취업한다하더라도 빈곤을 반복하는 경우 역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취업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반복하는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빈곤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종사하는 부문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지 않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이어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빈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과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중 고졸학력 중심의 젊은 세대이며 가구구성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 많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동시에 미혼집단의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취업의 안정성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집단이다. 취업자의 경우 역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 뿐 아니라 상용직의 근로조건 역시 부문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1. 연구요약	185
2. 정책적 시사점	190
3. 정책방안	194

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및 향후의 근로빈곤 확산을 방지하고 일을 통하여 빈곤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 등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행연구 및 정책을 점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정책은 근로유무와는 상관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가장 포괄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기초보장을 추구하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제, 고용보험제도 등 노동시장 제도들을 통하여 빈곤을 방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근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므로 근로를 통한 복지패러다임 하에서도 근로하는 집단에게조차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역시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부문, 비정규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 빈곤화와 직결되는 부문에서 근로하는 집단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데는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열악한 위치를 점하는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제도가 빈곤을 방지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전히 미약한 제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는 더 나아가 실업급여 등 본인의 임금을 기초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더욱 불리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근로빈곤정책은 미국식 근로연계복지제도가나 유럽의 통합정책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비 포괄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저임금 근로빈곤집단을 양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I를 근간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보전하고 TANF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체제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

며 저임금의 문제를 보전하기 위한 EITC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각 제도가 가지는 미비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부조를 통한 1차적 지원, 실업 부조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부조를 실시하여 근로빈곤계층에게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로를 통한 빈곤의 완화라고 한다면 근로와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고 각 제도에서 누락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구조적 근로빈곤완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비공식부문 근로자들이 많아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없다면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 전체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내 흡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집단의 근로실태와 가구사항, 빈곤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근로빈곤집단 중 여성의 경우 업종 및 직종에서 기인하는 노동시장 열악성 등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 일용직 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빈곤 집단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이들의 노동시장 사항, 훈련 및 능력개발, 가구사항 등 전 부문에서 비빈곤 집단과 다른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종합적으로 이들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원인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 확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저학력일수록, 임시일용직 이거나 농림어업 종사자 일수록, 단순노무직일 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의 여성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순차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가 전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여성의 경우 별거를 포함한 유배우의 경우에도 소득집단의 순차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및 고용형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고용형태 역시 상용직을 기준으로 볼 때 임시 및 일용직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관리자 및 사무직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경제활동 빈곤집단의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빈곤집단이라 할지라도 취업의사가 높지 않게 나타났고, 구직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도 적게 나타나고 특히 여성은 육아로 인한 취업, 구직 등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을 한 집단 중 어려움으로 나타난 사항 중 비빈곤 집단과 대비되는 것은 여성들이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어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들에 대한 반영,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정책 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집단들은 시간제 근로가 육아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할 수는 있으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요구는 전일제 근로에 대한 요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근로형태로서의 시간제 근로 등은 또 다른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상태의 동태적 변화, 빈곤상태의 동태적 변화, 취업과 빈곤의 동태적 변화 등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별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취업상태를 동태적으로 변화시키는 집단의 유형을 모두 5개로 구분하여 보았다.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비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취업상태에서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집단,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하는 집단, 취업과 비취업을 모두 1회 이상 반복하는 집단 등 5개의 유형이다. 여성들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비취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지속한 경우보다 높았다. 여성들의 비취업 지속이나 취업/비취업 반복 경향은 청년기부터 시작하여 출산 및 양육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40대 장년층 집단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며 20대 후반

연령에서도 취업지속집단과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불안정한 취업지위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우는 여성 임시직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상용직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집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사자가 직종으로는 판매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 및 직종의 취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지속한 집단은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한 경우는 30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취업에 이어 빈곤상태에 진입하고 탈퇴하는 집단을 모두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비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다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다시 비빈곤으로 이행한 집단, 3회 이상 상태를 변화시킨 집단 모두 7개의 유형이다. 빈곤을 관측기간 내내 지속한 집단은 고령자의 비중이 많았다.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하는 경향은 장년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이 고령자가 많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로 빈곤으로 진입하는 계층은 자녀가 2인인 가구가 많아 중산층의 양극화나 빈곤 집단 편입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집단은 가구 내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빈곤집단은 기본적으로 소득보다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남성 42.6만원, 여성 34.8만원 수준에 머물러 이들의 소득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호대상 가구에 포함되거나 사회보험수급을 받은 경험은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에서의 탈출과 빈곤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및 고교재학이하 자녀의 수 등 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탈출이 어려웠다. 낮은 교육수준은 반대로 빈곤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빈곤탈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빈곤 진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이혼이나 사별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을 보면 빈곤탈출의 뚜렷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업종이나 직종, 종사상 지위 등에 의한 탈출 및 진입이 잘 파악되지 않으며 다만 괜찮은 일자리가 다수 있다고 알려진 전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등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빈곤화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어, 빈곤화하는데 있어 정형화된 유형이 없고 오히려 다양한 업종 및 직종,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빈곤화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변화 및 취업변화를 동시에 유형화해보면 빈곤과 취업을 지속하는 집단, 취업은 지속하나 빈곤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은 지속하나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빈곤과 취업을 모두 반복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취업한다하더라도 빈곤을 반복하는 경우 역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취업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반복하는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빈곤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종사하는 부문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지 않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이어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빈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과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 중 고졸학력 중심의 젊은 세대이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구성이 많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시에 미혼집단의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취업의 안정성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집단이다. 취업자의 경우 역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 뿐 아니라 상용직의 근로조건 역시 부문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전술한 연구의 요약을 토대로 근로빈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기 전에 근로빈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과거의 선진국에서는 일자리의 부재가 사회적인 위험집단, 즉 빈곤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정부의 빈곤정책 기조로 ‘실업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실업보험과 공적 부조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의 해결이 정부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주목할 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후기산업화 현상과 더불어 Keynesian 재정정책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비전 즉 ‘모두가 일하고 기여하는 사회’가 새로운 모토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선진국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세수의 확대를 들 수 있으나 다른 한 축으로는 노동수요에 의존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수요는 기업의 생산수요에 후행하는 2차 수요로 생산규모 뿐 아니라 생산기술,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 등 많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용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취업계수(국내총생산에 따른 취업증가분)의 둔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취업계수의 둔화는 더 이상 경제의 성장이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상태로 경제가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고용창출을 위한 다른 경로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측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업의 해결보다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의 증가가 정책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 하에서는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략이 되고 취업(취업, 자영업 등)은 임금이나 소득을 얻는 것 이외에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재정책중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존의 비취업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여성,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노동복지정책의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취업의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고용이 내용면에서 과거와 상이한 점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임금이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면서 전일제이면서도 임시직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부문의 창업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경쟁적 인센티브 구조(competing incentive structure)하에서 모두가 취업가능(employable)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과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의 부산물로서 대두된 것이 소위 고용의 질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근로빈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Judith Maxwell (2002)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 부담의 경감,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가족서비스의 확충, 직업훈련의 증대, 의료보호 등의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뿐 아니라 노동시장 외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에 주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은 선진국과 유사하게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지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성장의 둔화와 일자리 창출여력의 감소라는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고전적인 고용창출 패러다임과 취업계수의 둔화로 인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의 흐름이 노동시장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들이 경제성장 속도 및 기술진보 등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고전적인 실업정책과 근로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나 투자확대 등 거시정책 중요성을 주장하는 기업들의 요구와 사회통합과 재정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이 맞물려 있으며 여성노동시장 정책은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설득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해소, 여성의 근로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의 확대 및 창업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의 취업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패러다임은 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구조변화를 여성인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를 위한 생산성의 제고,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부문으로의 여성인력 공급 등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일면 과거 노동수요 측의 여성노동정책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빈곤정책과 결합한 여성가장취업훈련 등은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으로 일을 통한 빈곤의 방지 및 완화의 기능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손쉽게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비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고용의 안정성 및 근로조건 면에서 팬찮은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이 어려운 부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 역시 기존의 성별 역할 분담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개인서비스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임금근로자로서의 고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창업을 통한 자영업진출 지원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역시 경쟁이 심한 부문으로의 여성 진출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향이 있고 업종 역시 기존의 여성 집중적인 업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자료의 분석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성은 음식이나 숙박업과 같은 자영업부문 근로자에게서 빈곤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빈곤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즉 기존의 상용직 중심의 고용이 아닌 임시직, 파견이나 용역, 시간제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근로형태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근속기간의 증가나 숙련형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따라서 빈곤화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남성은 제조업부문의

빈곤가능성이 높아 영세 자영업부문 뿐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빈곤화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을 통한 빈곤의 완화라는 근로빈곤정책은 노동시장 정책실패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향을 수립함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험들은 이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확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여성노동시장의 여건을 볼 때 부적절하다. 앞서 분석에서 나타났지만 빈곤집단은 보다 전일제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지 않으며 부가급부가 마련되며 사회보험에 통합되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근로빈곤집단의 취업능력과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과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중고령자 집단의 낮은 학력, 중장년층 이하 집단의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한 직업능력의 미비 등은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만든다. 또한 여전히 가사와 육아, 돌봄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빈곤근로자들에게 전일제의 일자리 창출은 직업능력의 개발과 축적과정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안착을 보다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여성집단에게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지속해온 빈곤집단이나 빈곤가능집단, 노동시장 단절을 경험한 빈곤 및 빈곤가능집단에게 각기 다른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통합적인 틀 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노동시장 정책 뿐 아니라 정책의 실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보장제도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 뿐 아니라 일하는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적 지원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정책방안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발생배경과 현상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근로빈곤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기초보장 제도의 근로자와 관련된 개선, 근로자와 관련된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제의 손질, 근로소득보전세제 등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통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정책은 크게 빈곤집단이 기존의 제도 내에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상 확대 측면, 취업확대 및 취업 애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측면 등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별로 보면 영세 자영업부문에 종사하는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 빈곤정책의 대상 집단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라는 기본적인 빈곤 정책과 결과적으로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최저임금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기초의 경우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근로와 무관하게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빈곤이라는 개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제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이용한 빈곤방지 정책이 현재 가용한 수단이나 문제는 이러한 빈곤정책 하에서 누락되는 여성근로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일단 제도권내로 흡수되면 제도 내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상당부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이 빈곤정책 안에 포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98년 10월에 사업장 규모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되고, 2002년에 건설부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현재 적용 제외 대상을 보면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 가사근로자 부문이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정규직의 55%, 비정규직의 28%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나 비전형적인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근로자나 재택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 비중이 여성근로자의 약 45%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V-1>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 여부

(단위: 천명(%))

사회 보험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 규직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비전형근로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 고용	재택	일용
고용보험											
예	2,715 (43.2)	1,919 (55.3)	796 (28.3)	692 (36.3)	609 (49.0)	20 (2.7)	39 (52.0)	102 (55.7)	34 (8.6)	1 (0.8)	0 (0.0)
아니오	3,570 (56.8)	1,551 (44.7)	2,019 (71.7)	1,214 (63.7)	635 (51.0)	716 (97.3)	36 (48.0)	81 (44.3)	360 (91.4)	126 (99.2)	252 (100.0)
전체	6,285 (100)	3,470 (100)	2,815 (100)	1,906 (100)	1,244 (100)	736 (100)	75 (100)	183 (100)	394 (100)	127 (100)	252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8월

가입자 비중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입대상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경우의 적용문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영세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술한 대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 재택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괄되어야 할 것이며 그 형태로는 지역가입 등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성 중심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여성일용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사종사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경우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파행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역시 주당 20시간 등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영세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히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부문에서 여성근로자의 대다수가 근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를 발굴하는 것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에 얼마나 중요한 점인가를 알 수 있다.

2) 최저임금제 적용을 위한 정책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업종이나 직종별로 성별 분리가 심한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산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표 V-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단위: 만원)

월평균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 직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특수 고용	재택	일용
여성	88.8	133.0	87.5	87.6	93.1	48.1	102.8	78.0	129.4	51.9	53.0
남성	168.3	218.9	136.7	179.2	153.3	62.2	181.9	107.2	163.4	100.2	103.8
전체	133.0	187.3	111.7	115.7	125.8	52.2	131.6	94.8	142.2	56.7	86.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8월

<표 V-3> 남성정규직을 기준으로 본 남녀 임금비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100	62
여성	61	40(64)

* 주: 괄호는 남성비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임금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05. 8월

여성 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61% 수준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 대비 40%, 남성 비정규직 대비 64%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를 보면 시간제, 용역, 재택, 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급 기준 31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산술적으로 일일 8시간, 월간 25일 근로할 경우 62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거하면 일용근로자나 재택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¹³⁾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지도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이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근로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3)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빈곤대책의 마련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외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업자의 고용구조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OECD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17.4%에 비하면 두 배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전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과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빈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정책이 종사상지위보다는 근로여부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

13) 김종숙 외(2005)에 의하면 상당수의 일용 및 재택근로자들이 일일 8시간 정도 이상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빈곤정책 내부로 포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¹⁴⁾. 그러나 소득과약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수요의 부족이 만연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EITC를 통한 근로빈곤집단의 구제도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로하는 경우 등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남성가구주 중심으로 보고되는 경우 가구단위 합산 소득과 개인소득 등 조세제도의 성별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EITC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남성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여성의 근로와 무관하게 빈곤정책이 마련되지 않도록 보다 여성근로자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빈곤개념의 확장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빈곤의 개념은 최근까지 가구단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현재도 빈곤정책의 단위는 가구이다. 여성빈곤을 위한 정책수단은 여전히 여성가장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유배우 여성빈곤집단은 여성빈곤의 특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집단에서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개념을 개인빈곤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근거는 증가하는 여성 근로빈곤집단을 들 수 있다. 근로가 개인단위의 접근을 요구하는 개념임에 비하여 빈곤이 가구단위로 논의되다보니 여성가장을 통하여 여성빈곤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빈곤가구 내 여성은 빈곤가구 정책을 통하여 개인단위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가구에 속한 남성과 여성들의 근로상태가 상이하고 따라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빈곤극복의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빈곤정책을 통하여 빈곤개념을 가구 뿐 아니라 개인단위로

14)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2007년에 도입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실직자나 노인 및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소득과약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던 자영업자의 경우 납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경로연금제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의 전달체계 및 정책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대체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노대명 외(2005)의 연구에서도 지역적 근로빈곤 실태를 파악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실태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개발 시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운용을 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1) 여성가장 지원에서 가구 내 개인중심으로 빈곤정책 확대

여성가장 창업지원이나 고용보험 사업 중 여성실직가장 지원 사업 등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정책적 수단은 일을 통한 빈곤방지 및 빈곤에서의 탈출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근로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며 여성가구주 가구 뿐 아니라 비 가장 여성들의 근로빈곤 상태도 매우 심각하다. 동시에 근로와 가사 및 육아의 부담 등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다르지 않은 여성고유의 특성이므로 여성가장 지원을 보다 여성가장이 아닌 집단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장지원센터나 여성가장 창업자금 등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여성가구주가 아닌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여성취업지원에서도 여성실직가장 뿐 아니라 가장이 아닌 빈곤여성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어 여성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의 여성빈곤집단의 확산을 막고 여성근로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과 지역의 빈곤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구축 및 효과적 전달체계 마련

여성취업정책은 지역단위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고려할 때 남성과는 달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거나 근거리 취업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어 지역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빈곤과 근로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여전히 지역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빈곤과 노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료구축과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지역의 빈곤 및 노동시장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지역의 여성빈곤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집단의 취업여부 및 이들의 근로여로요인을 파악하도록 하여 지역의 노동 수요에 맞추어 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중앙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앙의 경험들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역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복지제도 전달체계가 지역의 특수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상이하고 근로자 및 빈곤집단의 특성이 상이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근로빈곤정책 수립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훈련-취업-복지 연계를 위한 외국의 원스탑 지원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근로빈곤 방지를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일터지원본부나 노동부가 계획하는 훈련-취업-복지 연계를 위한 원스탑 지원체계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여성친화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추진체계가 향후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통하여 근로빈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기존의 복지채널을 이용한 자활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복지급여 현실화 방안

정책의 보수적 운용은 정책실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사업의 소득 대체율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은 근로의욕 상실을 우려한 보수적인 정책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로 인한 근로인센티브 감소와 같은 문제점은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연구결과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본인의 전 급여 수준과 연동시키는 방향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일 경우 소득대체율이 50% 정도 되는 실업급여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최저임금수준의 70% 정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여성 취업확대와 안정성 제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에서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출산, 육아기의 경력단절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빈곤한 집단의 경우 대체로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본인이 취업단절 전에 위치했던 직종에서 하향 이동하여 한계노동자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김영옥, 1998)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여성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체로 저숙련, 저임금 근로로 특징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의 반복은 남녀를 불문하고 빈곤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빈곤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뿐 아니라 빈곤과 비빈곤을 반복하는 집단은 빈곤에서 차상위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중장년 집단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신규로 빈곤에 진입하는 집단은 두 자녀를 가진 일반적인 가구의 빈곤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빈곤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확대

여성취업의 확대가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책방향이다. 여성 빈곤집단 내부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젊은 세대의 비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정책방향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의 빈곤화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여성들은 코호트 효과가 커 현재 50대, 40대, 30대,

20대의 인적숙성이 매우 상이하다는데 있다. 현재 40~50대의 중장년 여성의 평균 학력은 고졸 이하,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중졸이하 학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 20대와 30대의 경우 초급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활사업을 기초로 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이윤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공급되는 일자리가 대체로 사회복지 및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점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 온 돌봄 영역, 아동 등 취약계층의 학습지원,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문화서비스 부문, 환경과 관련된 부문 등 여성친화적인 업종 및 직종 등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적합한 여성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장년층 여성들의 경우 주로 간병이나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부문으로 훈련 및 취업을 연계시키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임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근로의 표준화를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요구스킬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기타 사회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이들이 근로자로서 사회안전망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젊은 세대 여성들의 경우 문화, 교육, 환경과 같은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초기단계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공공부문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기반하고 있는 일자리, 일자리의 속성상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례도 있다(박성정, 2003). 우리나라 역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제

여성 빈곤취업자의 경우 과거의 연구들에서 많이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취업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가진다는 점은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과되며 비취업자의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비취업 사유는 육아와 가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취업 지원은 노동시장 정책 뿐 아니라 취업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취업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녀의 보육이나 방과 후 활동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업주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방안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빈곤근로자는 도소매 업종, 음식숙박업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문 근로의 특징은 야간근로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이런 부문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이들 종사자의 보육이나 자녀돌보기 지원, 가사지원 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도 가구소득과 연동되고 있으나 보다 근로빈곤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편모가구 등 기존의 성별분업체계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집단을 우선 발굴하여 보육서비스의 우선지원,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 출산휴가,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편모의 시간제근로 및 유급휴가제, 양육아동 보호를 위한 휴가제 등 현재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여성빈곤가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빈곤청년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집단별로는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년층 집단의 빈곤화, 취업의 불안정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의 분포가 광범위하여 청년층 여성취업자의 빈곤비중도 남성에 비하여 높고 여성은 30대 후반의 빈곤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청년층의 경우 빈곤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취업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빈곤집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취

업알선 정책이 요구된다.

빈곤집단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채널을 다양화 하여 온라인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의 생계비를 보전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훈련 뿐 아니라 취업연계를 위하여 기업체가 실시하는 인턴십의 일정 부분을 여성빈곤청년에게 할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빈곤한 청년집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청년층의 빈곤화는 과도한 노동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취업이 보다 안정화되도록 하는 숙련형성과정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은 기간제근로자 정책이나 기타 고용불안정과 관련된 타 정책과의 정책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근로자 훈련제도 등과 관련되어 청년층 여성의 숙련형성과정에 필요한 제도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청년층에게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pp.351-354
- 금재호(2000) “여성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실업,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03) “일과 빈곤”,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04)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 분석 제10권 제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금재호, 김승택(1997)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 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교성, 반정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18, 2004. 4, pp.31-54
- 김교성, 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 2, 2006. 5. pp.119-141
- 김대일(2000) “한계적 경제활동참가자와 실업”,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김미곤, 김태완(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2004. 12, pp.173-200
-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란(2005) “한국의 신 빈곤현상과 탈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2005. 5, pp.41-69
- 김영화, 손지아(2003) “우리나라 노동빈민정책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13집 제2권 pp.171-190
- 김우영(1999) “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분석과 실업대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김유선(2003)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003. 제3권 제3호 pp.27-47
- 김은정, 진미정(2004)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및 관련요인 고찰”, 가족과 문화 제16집 3호(2004), pp.42-71
- 김장호(1998) “여성실업의 구조와 행태-이행확률 추정을 통한 유량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진, 한상국(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숙(2005)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효과”, 여성연구 68.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 박수미(2003) “한국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 외(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상균 외(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사.
- 김철희(2003)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02) “한국 자활사업의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2002년 여름호(통권 제53호)
- 노대명, 최승아(2005)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2005)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소액창업지원사업”,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545-556
- 문진영(2004)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1, 2004. 2, pp.45-70
- 박능후(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 기능”, 보건복지포럼 제7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 여유진, 김계연, 임완섭, 송연경, 박소연(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외 7(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2004) “빈곤의 여성화 ‘신빈곤’ 시대의 여성과 탈빈곤 정책의 뉴패러다임”,
아세아연구 제47권 제2호 통권 116호 pp.61-95
- 방하남, 황덕순(2002)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2002.
12. pp.71-96
- 백선희(2002) “빈곤여성 자활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아동보육사업의 과제”, 한국
영유아보육학 제30집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 논집 제25권
제1호 pp. 161-182
- 송문영(2006) “Anti-Poverty Poli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A
& South Korea” 세계헌법연구 제11권 1호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36집
- 신동면(2001)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한국사회복지학 Vol.46 2001.9.
pp.178-209
- 신동면(2004)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1, 2004. 2, pp.23-43
- 안중범, 김철희, 전승훈(2001)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
논집 제25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유경준, 김대일(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Vol. 53,
2003. 5. pp.51-73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
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2004. 5. pp.5-27
- 이배용(1996) “여성빈곤의 실태와 극복방안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13집
- 이병희 외(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5)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탈출”, 제1차 노동시장포럼 발표문
(2005.1.21)

- 이상은(2004), “근로능력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2004. 12, pp.27-56
- 이상은(2005)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화”,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231-243
- 이장원(2000)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연계복지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지혜, 채재은(2006) “저소득층 평생학습을 위한 대안적 정책 접근방안 탐색”,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06, Vol.12, No.1 pp.105-126
- 이태진, 이상은, 홍경준, 김선희(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준(2004)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9권
- 정진호, 황덕순, 이병희, 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 황덕순, 금재호, 이병희, 박찬임(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춘계학술대회 기획주제 2-1분과 (2001. 4.)
- 최옥금(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pp.1-42
- 최창곤(2003) “성차별이 여성들의 취업 및 이직확률에 미치는 효과”, 계량경제학보 제14권 제3호(2003. 9. 30) pp.57-77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2005. 5, pp.119-142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노동연구원
-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트릭키(2002) “근로복지연계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황정임(2005) “양극화시대의 여성빈곤대응전략”, 여성정책포럼 제11호

- 황정임, 송치선, 전지현(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자활 공동체(참여여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Addison, J. T., Blackburn & Mckinley L.(1999) “Minimum wages and poverty”,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Review* vol.52, No.3 pp.393-409
- Ahlstrand, A., Bassi, L. & McMurrer, D.(2003) “Workplace Education for Low-Wage Worker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Anthony B. & Micklewright, J.(1991)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pp. 1679~1727
- Antolin, P., Dang, T. & Oxley, H.(1999)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21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eb-site : www.oecd/eco/eco.
- Autor, D. & Houseman, S.(2002) “Do Temporary Help Agencies Improve Labor Market Outcomes?” Department of Economics, MIT
- Berlin, G.(2000) “Encouraging Work, Reducing Poverty: The Impact of Work Incentive Programs. New York,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March
- Blank, R. M.(2002) “U.S. Welfare Reform: What’s Relevant for Europe?” CESIFO Working Paper No.753 Category 3: Social Protection July 2002
- Cadena, B. C. & Sallee, J. M.(2005) “Poverty Research Insights” National Poverty Center(Fall 2005)
- Carr, M. & Chen, M.(2004) “Globalization, social exclusion and gender”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43, No.1-2
- Dean, H. & Shah, A.(2002) “Insecure Families and Low-Paying Labour Market: Comments on the British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nandez, M., Meixide, A., Nolan, B. & Simon, H.(2004) "Low Wage Employment in Europe" PIEP Working Paper, April
- Flood, L., Pylkkanen, E., & Wahlberg, R..(2003) "From Welfare to Work: Evaluating a Proposed Tax and Benefit Reform Targeted at Single Mothers in Sweden" IZA Discussion Paper No. 891 October
- Harry J. H. & Robert J. L.(1999) "Job change and job stability among less-skilled young worker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191~1199
- Harry J. H. & Martinson, K.(2005) "Can We Improve Job Retention and Advancement among Low-Income Working Parent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307-05
- Iceland, J., Kenworthy, L. & Scopility, M.(2005)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Poverty in the 1980s and 1990s: A State-Level Analysi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299-05
- Jackson, A.(2006) "Are Wage Supplements the Answer to the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June)
- Kim, H.(2000)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axes and Income Transfer i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4)
- Kim, M. & Mergoupis, T.(1995) "The Working Poor and Welfare Reciprocity" Working Paper No. 151, 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Koley, A.(2005) "Unemployment, job quality and poverty: A case study of Bulgari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44, No1
- Koonce, J., Mauldin, T., Rupured, M.& Parazo, J.(1998) "The Working Poor: Research, Outreach, and Public Policy" Consumer Interests Annual Volume 46
- Lemke, R. J. Witt, R. and Witte, A. D. "CHILD CARE AND THE WELFARE

- TO WORK TRANSITION" Wellesley College Working Paper 2001-02
- Lohmann, H.(2005) "Working poor in Western Europe: What is the influence of self-care state provisions, labour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ISA Research Committee 28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May 5-8 2005, University of Oslo, Norway
- Majid, N.(2001) "The working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40 No.3
- Meyer, Bruce & Rosenbaum, D.(2001) "Making Single Mothers Work: Recent Tax and Welfare Policy and its Effe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 Michalopoulos, Charles & Berlin, G.(2001) "Financial Incentives for Low-Wageworkers" In *The New World of Welfare*, edited by R. Blank and R. Haski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Ochel, W.(2004) "Welfare-to-Work Experiences With Specific Work-First Programmes In Selected Countries" CESIFO Working Paper No.1153 Category 3: Social Protection March 2004
- Pena-Casas, R. & Latta, M.(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Royalty, A.(1998) "Job-to-job and job-to-no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lev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392~443
- Saget, C.(2001) "Poverty reduction and decent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Do minimum wages help?" *International Labour Economics* Vol 140, No 3, 2001, pp. 237-269(33)
- Schneider, H. & Uhlenborff, A.(2004) "The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and the Role of Potential Labor Income" IZA Discussion Paper No.1420 December
- Schochet, P. & Rangarajan, A.(2004)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Low-Wage Workers in the Mid-to-Late 1990s" Princeton, NJ:

Mathematical Policy Research

- Strawn, J. & Martinson, K.(2000) "Steady Work and Better Jobs: How to Help Low-Income Parents Sustain Employment and Advance in the Workforce" New York: MDRC
- Strengmann-Kuhn, W.(2002)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c Income for Worke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rankfurt, Germany
- Swasti, M.(2003) "Globalization and ICT: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Paper prepared for Gender Advisory Board, UNCSTD
- Wolfe, B. L.(2000) "Incentives, Challenges, and Dilemmas of TANF"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209-00
- Zabin, C., Dube, A. & Jacobs, K.(2004) "The Hidden Public Costs of Low-Wage Jobs in California"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w Center



부 록

<부표 Ⅲ-1> 연령 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분포

(단위: %)

연령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6~20	13.27	12.18	9.65	3.91	77.08	83.92
21~25	14.86	5.25	3.29	2.66	81.85	92.09
26~30	8.70	4.74	2.32	0.89	88.98	94.37
31~35	5.26	5.07	2.45	1.24	92.29	93.69
36~40	5.61	9.22	3.03	4.02	91.35	86.75
41~45	6.98	9.10	3.67	3.28	89.35	87.62
46~50	7.74	12.11	2.95	4.05	89.31	83.83
51~55	7.76	7.05	2.97	4.66	89.27	88.29
56~60	5.55	14.49	2.09	3.25	92.36	82.26
61~65	10.56	28.45	6.60	7.17	82.84	64.38
66이상	11.95	43.62	8.40	10.26	65.62	46.12

<부표 Ⅲ-2>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계층분포

(단위: %)

학력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무학	35.66	43.94	11.49	6.00	52.85	50.06
초졸	16.25	17.71	5.72	6.50	78.03	75.79
중졸	12.14	11.36	6.30	5.23	81.55	83.41
고졸	7.77	9.59	3.52	3.33	88.71	87.09
초급대	5.97	3.25	3.00	1.73	91.03	95.02
대학	5.01	4.10	1.49	0.88	93.49	95.03
대학원	4.54	2.14	0.16	1.17	95.30	96.68

<부표 Ⅲ-3> 혼인상태 집단 내 소득계층분포

(단위: %)

혼인상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9.21	4.80	2.45	2.04	88.33	93.15
유배우	7.65	10.36	3.41	3.36	88.94	86.28
사별·이혼	11.15	24.82	8.47	8.14	80.38	67.04

<부표 Ⅲ-4> 업종 내 소득계층분포

(단위: %)

업종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21.23	31.38	6.23	5.38	72.54	63.24
제조업	5.74	11.01	2.64	3.36	91.62	85.3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34	0.00	0.00	0.00	96.66	100
건설업	10.24	2.67	4.44	3.74	85.32	93.6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점업	8.43	7.35	3.04	4.01	88.54	88.64
숙박 및 음식점업	8.15	9.52	4.89	5.99	86.96	84.4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45	6.86	3.53	1.18	90.02	91.96
금융 및 보험업,	1.28	0.90	2.13	0.00	96.60	99.10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59	11.52	3.34	3.04	87.07	85.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43	19.54	1.35	0.00	94.23	80.46
교육서비스업	3.97	4.07	1.45	0.72	94.58	95.2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	4.42	0.00	2.32	100	93.2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72	14.69	3.71	4.31	87.56	81.01

<부표 Ⅲ-5> 직종 내 소득계층분포

(단위: %)

직종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67	16.91	2.23	0.00	90.10	83.09
전문가	4.46	2.46	1.38	0.00	94.16	97.5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23	5.37	2.63	0.79	92.14	93.84
사무직원	2.64	6.35	1.32	2.26	96.03	91.39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98	8.68	3.45	4.28	88.57	87.05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22.11	31.13	5.96	5.57	71.93	63.3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69	9.70	2.59	4.71	88.72	85.6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5	13.97	4.07	2.83	90.18	83.19
단순노무종사자	14.76	19.79	6.66	7.73	78.58	72.48

<부표 Ⅲ-6> 사업체규모별 소득계층분포

(단위: %)

전체 종업원 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4	10.75	12.93	4.32	3.27	84.80	83.64
5~9	7.86	9.35	3.57	2.52	88.57	88.13
10~29	4.55	7.91	2.66	3.86	92.79	88.23
30~99	5.38	3.38	4.15	5.40	90.47	91.22
100~299	5.10	2.35	1.94	2.32	92.96	95.33
300~499	1.97	6.48	0.00	0.00	98.03	93.52
500이상	5.88	7.27	1.95	3.65	97.94	92.88

<부표 Ⅲ-7> 근속년수별 소득계층분포

(단위: %)

근속년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년미만	17.26	16.22	5.62	4.15	77.12	79.63
1년이상 3년미만	7.34	6.90	3.81	3.25	88.85	89.84
3년이상 4년미만	6.08	5.63	3.97	6.62	89.95	87.75
4년이상 5년미만	6.28	7.61	1.20	1.25	92.52	91.14
5년이상 10년미만	5.27	9.22	1.66	1.50	93.07	89.28
10년이상	17.81	10.36	21.54	3.91	29.41	17.32

<부표 Ⅲ-8>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지위분포

(단위: %)

종사상지위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40.13	18.07	36.92	14.43	57.93	53.17
	무급가족종사자	2.0	20.92	2.24	14.72	4.03	11.22
임금 근로자	상용직	30.65	31.78	34.04	37.50	7.26	5.26
	임시직	7.72	13.46	7.18	16.38	29.68	14.97
	일용직	19.5	15.77	19.63	16.97	1.09	15.3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Ⅲ-9> 근로빈곤집단의 주관적인 고용형태분포

(단위: %)

성별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남성	53.38 (60.65)	46.62 (45.67)	49.18 (63.93)	50.82 (48.61)	80.44 (63.74)	19.56 (49.00)
여성	38.44 (39.35)	61.56 (54.33)	34.06 (36.07)	65.94 (51.39)	69.21 (36.26)	30.79 (51.00)
전체	46.3 (100)	53.7 (100)	42.39 (100)	57.61 (100)	75.97 (100)	24.03 (100)

*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각 소득계층의 정규/비정규집단 내에서의 성별 분포

<부표 Ⅲ-10> 고용형태별 근로빈곤 집단

(단위: %)

고용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0.36	47.03	63.86	58.68	80	61.38	78.2	60
비정규직	39.64	52.97	36.14	41.32	20	38.62	21.8	40
비임금근로자	42.47	39.25	39.16	29.15	30.77	30.35	31.99	32.21

* 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부표 Ⅲ-11>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단위: 시간, 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5.83	32.90	41.10	41.53	49.68	41.19
주당 평균 근로일수	4.51	4.44	4.16	4.40	5.21	5.15
비임금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50.68	49.74	53.54	58.76	58.22	57.58
주당 평균 근로일수	6.02	6.17	5.74	6.32	6.03	6.25

<부표 Ⅲ-12> 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단위: %)

초과근로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초과근로	87.10	88.43	80.35	89.77	68.37	81.35

<부표 Ⅲ-13> 근로자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단위: 시간, 일)

초과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	8.32	6.68	8.19	9.33	8.83	7.85
주당 평균 초과 근로일수	2.94	3.84	2.49	3.27	3.59	3.33

<부표 Ⅲ-14> 법정퇴직금 지원현황

(단위: %)

직장에서 제공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법정퇴직금	29.96	22.98	26.23	22.52	65.62	48.80
누진퇴직금	5.32	1.78	13.16	2.26	19.94	14.21
제공받은 사람 중 본인의 혜택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법정퇴직금	94.69	90.19	82.20	100	99.18	96.80
누진퇴직금	100	100	83.68	100	96.37	95.56

<부표 Ⅲ-15> 휴가지원현황

(단위: %)

직장에서 제공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휴가	20.33	14.11	23.36	16.35	54.99	39.92
생리휴가	10.87	6.54	6.19	5.93	28.74	25.18
출산휴가	8.29	7.00	7.65	3.19	30.57	27.29
병가휴가	20.91	6.67	16.30	7.13	47.43	32.86
육아휴직	5.38	2.99	5.49	1.70	21.72	17.87
휴업보상	5.42	1.00	4.19	2.30	15.52	8.60
제공받은 사람 중 본인의 혜택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휴가	95.73	100	85.69	100	98.35	97.92
생리휴가	13.85	76.79	20.80	100	9.56	94.26
출산휴가	49.93	77.97	71.91	100	41.59	90.60
병가휴가	93.20	100	86.82	100	96.10	97.57
육아휴직	57.58	100	78.35	100	52.26	87.67
휴업보상	83.95	100	75.19	100	87.94	95.72

<부표 Ⅲ-16>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여부

(단위: %)

직장에서 제공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택마련지원(융자 등)	4.25	1.03	2.31	0.00	22.57	11.06
저축장려금지원	0.09	0.50	0.00	0.00	4.81	3.34
종업원지주제도지원	0.09	0.50	0.00	0.00	3.84	1.90

<부표 Ⅲ-17> 직장에서의 보험료지원 여부

(단위: %)

직장에서 제공여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	7.11	5.14	6.75	2.27	12.97	11.11
생명보험료 지원	2.44	2.32	0.00	0.00	2.50	1.67
개인의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6.50	5.87	6.86	4.20	10.20	8.13

<부표 Ⅲ-18>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

(단위: %)

남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임금 또는 소득	5.22	21.78	73.00	7.67	22.33	70.00	13.41	42.62	43.97
취업의 안정성	14.80	45.52	39.68	13.77	44.02	42.22	33.04	47.40	19.56
일의 내용	24.24	53.88	21.89	14.13	56.09	29.78	36.91	52.11	10.97
근로환경	17.37	51.13	31.50	19.10	46.31	34.59	28.04	54.30	17.67
근로시간	17.14	47.43	35.43	15.21	49.67	35.12	27.29	48.36	24.35
개인의 발전가능성	14.30	51.77	33.93	12.30	54.71	32.99	21.76	58.71	19.5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1.73	64.61	13.66	15.09	68.92	15.98	30.69	60.85	8.46
인사고과의 공정성	13.95	61.62	24.44	5.05	67.70	27.25	15.66	71.34	13.00
복지후생	11.11	42.92	45.98	6.37	61.56	32.07	16.30	57.10	26.60
전반적인 만족도	14.66	49.16	36.17	6.35	58.93	34.72	24.49	60.78	14.72
여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임금 또는 소득	6.68	27.82	65.50	1.72	35.78	62.50	14.19	44.29	41.52
취업의 안정성	14.42	50.66	34.92	14.76	53.11	32.13	33.94	49.49	16.56
일의 내용	24.24	53.82	21.94	10.79	61.30	27.90	39.17	50.14	10.68
근로환경	18.76	59.24	22.00	13.14	57.37	29.49	33.56	50.47	15.96
근로시간	18.34	55.58	26.08	12.88	58.97	28.15	33.35	44.45	22.20
개인의 발전가능성	11.33	59.00	29.67	5.77	54.34	39.88	22.02	57.73	20.25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0.42	66.58	12.99	13.09	63.72	23.18	29.55	61.96	8.49
인사고과의 공정성	10.43	65.25	24.32	2.75	74.59	22.66	13.76	71.26	14.98
복지후생	7.30	48.69	44.01	2.75	52.91	44.35	12.61	60.15	27.24
전반적인 만족도	13.54	55.46	31.00	6.06	60.76	33.18	24.99	61.54	13.47

<부표 Ⅲ-19> 항목별 직업만족도 점수

(단위: 점)

항목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 또는 소득	2.10	2.25	2.29	2.32	2.64	2.69
취업의 안정성	2.66	2.75	2.67	2.81	3.14	3.18
일의 내용	3.02	3.00	2.84	2.81	3.28	3.30
근로환경	2.81	2.94	2.80	2.82	3.11	3.18
근로시간	2.76	2.89	2.78	2.84	3.02	3.11
개인의 발전가능성	2.76	2.78	2.78	2.62	3.02	3.0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06	3.07	3.00	2.90	3.23	3.22
인사고과의 공정성	2.84	2.83	2.77	2.77	3.02	2.98
복지후생	2.52	2.52	2.67	2.52	2.86	2.80
전반적인 만족도	2.74	2.80	2.70	2.72	3.10	3.12

* 주: 5점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부표 Ⅲ-20>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 불일치정도

(단위: %)

남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20세 이상 전체		1.43	67.41	31.16	1.04	78.53	20.43	1.16	79.40	19.44
연령	20-29세	3.60	50.47	45.93	0.00	63.44	36.56	1.64	69.08	29.27
	30-39세	1.10	64.97	33.92	0.00	77.53	22.47	0.93	81.57	17.51
	40-49세	0.00	68.85	31.15	3.01	77.42	19.57	1.07	82.19	16.74
	50-59세	3.36	73.64	23.01	0.00	81.52	18.48	1.44	82.35	16.21
	60-69세	0.00	79.14	20.86	0.00	86.03	13.97	1.13	69.83	29.04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0	86.98	13.02	0.00	93.73	6.27	0.36	83.64	16.00
	고졸	3.74	60.07	36.19	2.50	66.01	31.49	0.96	80.89	18.16
	2년제대학	0.00	30.97	69.03	0.00	77.39	22.61	1.53	72.26	26.21
	4년제대학	0.00	61.65	38.35	0.00	76.25	23.75	1.93	75.85	22.22
	대졸이상	0.00	66.08	33.92	0.00	100.0	0.00	0.49	88.45	11.06
여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20세 이상 전체		0.47	77.58	21.95	1.50	70.81	27.69	0.99	80.72	18.30
연령	20-29세	0.00	78.49	21.51	0.00	68.28	31.72	0.52	79.09	20.40
	30-39세	2.78	65.00	32.22	0.00	64.37	35.63	0.87	82.35	16.77
	40-49세	0.00	72.72	27.28	4.51	64.06	31.43	1.49	78.83	19.68
	50-59세	0.00	79.81	20.19	0.00	78.48	21.52	0.31	83.90	15.79
	60-69세	0.00	93.59	6.41	0.00	83.27	16.73	2.63	83.49	13.88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0	85.25	14.75	0.00	74.13	25.87	0.61	84.40	14.99
	고졸	0.00	67.25	32.75	4.48	66.48	29.04	0.97	76.41	22.62
	2년제대학	0.00	100.0	0.00	0.00	85.52	14.48	2.47	81.38	16.15
	4년제대학	6.55	51.40	42.05	0.00	36.23	63.77	0.58	81.65	17.77
	대졸이상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88.37	11.63

<부표 Ⅲ-21>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 불일치정도

(단위: %)

남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20세 이상 전체		1.43	69.36	29.21	1.04	79.24	19.22	0.96	80.21	18.83
연령	20-29세	3.60	52.05	44.35	0.00	74.20	25.80	1.42	70.56	28.02
	30-39세	1.10	70.72	28.18	0.00	77.53	22.47	0.91	82.46	16.63
	40-49세	0.00	70.02	29.98	3.01	75.69	21.29	0.90	82.67	16.43
	50-59세	3.36	74.71	21.94	0.00	89.26	10.74	1.08	82.67	16.25
	60-69세	0.00	79.14	20.86	0.00	86.03	13.97	0.42	72.22	27.36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0	86.98	13.02	0.00	94.31	5.69	0.18	83.97	15.85
	고졸	3.74	62.35	33.91	2.50	66.36	31.14	0.79	81.49	17.72
	2년제대학	0.00	41.99	58.01	0.00	77.39	22.61	1.32	74.00	24.69
	4년제대학	0.00	62.75	37.25	0.00	83.55	16.45	1.50	76.58	21.93
	대졸이상	0.00	66.08	33.92	0.00	100.0	0.00	1.22	90.89	7.90
여성		빈곤			차상위			비빈곤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과잉	적합	과소
20세 이상 전체		0.48	77.82	21.71	1.50	72.18	26.32	0.85	81.37	17.79
연령	20-29세	0.00	78.49	21.51	0.00	68.28	31.72	0.58	79.65	19.78
	30-39세	2.78	65.00	32.22	0.00	64.37	35.63	0.82	83.04	16.14
	40-49세	0.00	71.85	28.15	4.51	68.19	27.29	1.01	80.40	18.59
	50-59세	0.00	83.37	16.63	0.00	78.48	21.52	0.31	83.13	16.56
	60-69세	0.00	93.59	6.41	0.00	83.27	16.73	2.63	83.49	13.88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0	85.02	14.98	0.00	74.13	25.87	0.48	84.89	14.64
	고졸	0.00	68.52	31.48	4.48	70.58	24.94	0.85	77.18	21.97
	2년제대학	0.00	100.0	0.00	0.00	85.52	14.48	2.07	82.58	15.35
	4년제대학	6.55	51.40	42.05	0.00	36.23	63.77	0.51	82.08	17.41
	대졸이상	0.00	100.0	0.00	0.00	100.0	0.00	0.57	87.80	1.68

〈부표 Ⅲ-22〉 남·여 근로자의 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빈곤			차상위			비빈곤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남성										
15세 이상 전체		48.60	31.27	20.14	41.95	35.84	22.20	62.75	31.45	5.80
연령	20-29세	77.33	22.67	0.00	65.78	34.22	0.00	77.84	21.02	1.15
	30-39세	61.39	27.78	10.83	46.64	32.42	20.94	68.14	30.06	1.80
	40-49세	44.19	37.36	18.45	43.69	32.27	24.03	61.96	32.53	5.51
	50-59세	35.57	30.43	34.00	16.75	44.42	38.83	54.18	35.18	10.65
	60-69세	32.84	36.48	30.67	51.43	23.75	24.81	43.54	39.79	16.68
여성										
15세 이상 전체		35.07	34.55	30.37	41.40	39.67	18.93	54.31	37.22	8.47
연령	20-29세	60.60	17.37	22.03	84.48	15.52	0.00	69.60	29.20	1.20
	30-39세	37.31	53.27	9.42	58.06	41.94	0.00	60.08	37.12	2.81
	40-49세	47.34	30.63	22.02	45.28	43.32	11.40	51.03	39.72	9.26
	50-59세	23.36	42.49	34.15	27.08	53.20	19.72	38.31	42.96	18.73
	60-69세	15.25	26.61	58.14	5.46	32.87	61.66	24.23	43.23	32.54

<부표 Ⅲ-23>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분석

(단위: %)

		빈곤						차상위						비빈곤					
		압	당뇨	고혈압	중뇌	심장병	간질환	압	당뇨	고혈압	중뇌	심장병	간질환	압	당뇨	고혈압	중뇌	심장병	간질환
남성																			
15세이상 전체	치료중	0.9	5.3	5.2	1.5	0.4	2.8	2.8	0.8	7.0	1.0	1.6	2.0	0.8	2.9	5.5	0.3	0.8	1.5
	방치	0.4	1.1	2.4	1.7	0.9	2.7	0.0	0.0	2.1	0.7	1.0	0.0	0.0	0.5	1.6	0.1	0.1	0.7
40-49	치료중	1.3	6.2	4.3	2.4	0.0	4.5	0.0	0.0	0.0	0.0	1.9	2.3	0.8	2.4	3.8	0.1	0.4	1.4
	방치	0.0	0.0	1.9	0.0	0.0	3.6	0.0	0.0	2.1	0.0	2.9	0.0	0.0	0.6	1.6	0.0	0.0	0.8
50-59	치료중	0.0	9.8	4.0	3.1	2.5	5.1	8.1	0.0	20	7.7	7.7	4.8	1.0	4.8	12	1.0	1.6	2.5
	방치	1.3	1.3	1.3	1.3	0.0	4.3	0.0	0.0	5.7	0.0	0.0	0.0	0.2	0.3	2.7	0.1	0.0	0.9
60-69	치료중	2.9	10	20	0.0	0.0	2.4	13	5.5	17	0.0	0.0	4.6	3.3	13	21	1.1	2.7	2.0
	방치	1.6	5.8	10	4.1	1.6	1.6	0.0	0.0	4.9	0.0	0.0	0.0	0.0	2.3	2.4	0.3	1.3	0.7
여성																			
15세이상 전체	치료중	0.3	2.3	8.6	1.4	1.4	1.1	0.0	4.7	11	0.8	3.2	0.0	0.2	1.5	5.4	0.3	0.8	0.3
	방치	0.0	1.6	2.9	1.3	0.5	0.4	0.0	1.4	3.4	0.0	0.0	0.0	0.0	0.1	0.7	0.0	0.1	0.1
40-49	치료중	0.0	1.3	3.9	0.0	1.8	1.2	0.0	4.4	4.4	2.5	2.5	0.0	0.0	1.1	5.6	0.0	0.5	0.3
	방치	0.0	1.3	1.7	1.7	0.0	1.3	0.0	0.0	3.9	0.0	0.0	0.0	0.0	0.3	0.5	0.0	0.1	0.3
50-59	치료중	0.0	2.0	8.5	1.8	0.0	2.1	0.0	10	6.1	0.0	6.3	0.0	0.7	2.9	17	0.5	1.4	0.5
	방치	0.0	3.5	2.1	5.5	0.0	0.0	0.0	8.6	0.0	0.0	0.0	0.0	0.2	0.4	1.7	0.0	0.1	0.0
60-69	치료중	0.0	8.3	18.6	1.9	3.4	0.0	0.0	9.0	36	0.0	0.0	0.0	1.9	13	25	3.8	6.2	0.8
	방치	0.0	2.0	4.9	0.0	0.0	0.0	0.0	0.0	4.7	0.0	0.0	0.0	0.0	0.0	0.8	0.0	0.0	0.8

<부표 Ⅲ-24> 기타 질병에 대한 분석

(단위: %)

		빈곤				차상위				비빈곤			
		관절염, 요통, 디스크	만성기 관절염	골절 및 탈골	골다공증	관절염, 요통, 디스크	만성기 관절염	골절 및 탈골	골다공증	관절염, 요통, 디스크	만성기 관절염	골절 및 탈골	골다공증
남성													
15세 이상 전체	치료중	11.6	1.9	1.9	0.7	13.1	3.0	8.1	0.0	5.7	0.7	1.3	0.1
	방치	7.8	0.9	2.0	1.3	10.9	0.0	2.2	0.0	2.8	0.4	0.7	0.1
40-49	치료중	4.0	0.0	1.4	0.0	5.7	0.0	9.3	0.0	4.6	0.7	1.6	0.0
	방치	7.4	1.9	4.1	0.0	17.3	0.0	2.7	0.0	2.7	0.6	0.9	0.2
50-59	치료중	22.5	2.9	1.6	2.4	24.8	12.7	16.7	0.0	8.7	0.8	2.5	0.2
	방치	7.8	0.0	2.7	0.0	10.6	0.0	10.6	0.0	4.0	0.1	0.6	0.0
60-69	치료중	15.5	2.0	2.0	0.0	8.3	0.0	0.0	0.0	17.5	2.0	1.1	0.4
	방치	16.4	1.6	4.6	5.6	12.5	0.0	0.0	0.0	6.9	1.0	1.2	0.3
여성													
15세 이상 전체	치료중	28.5	1.5	2.7	3.3	29.4	1.4	0.9	4.4	11.1	0.5	1.1	1.1
	방치	12.3	2.0	4.1	3.9	6.6	1.2	0.0	0.7	4.2	0.2	0.3	0.7
40-49	치료중	19.5	0.0	1.2	3.2	22.7	0.0	0.0	0.0	11.1	0.3	1.0	0.4
	방치	12.9	1.7	1.8	0.0	9.9	0.0	0.0	0.0	4.0	0.3	0.4	0.7
50-59	치료중	24.1	0.0	4.4	1.8	46.2	0.0	0.0	0.0	24.8	1.5	1.5	2.5
	방치	23.6	2.7	7.7	6.7	8.6	0.0	0.0	0.0	11.5	0.0	0.5	1.6
60-69	치료중	66.6	6.1	5.3	7.6	68.6	0.0	5.3	24.6	48.2	1.1	5.7	10.6
	방치	13.9	0.0	5.4	11.2	3.9	0.0	0.0	3.9	8.3	0.0	1.9	5.3

<부표 Ⅲ-25> 개인선택 교육훈련의 훈련기관

(단위: %)

훈련기관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설학원	4.90	11.07	9.92	0.00	3.88	8.63
직업훈련법인	0.00	0.00	20.64	0.00	0.72	0.88
공공직업훈련기관	14.65	0.00	0.00	0.00	9.29	9.71
사업주의 훈련기관(회사연수원등)	45.53	45.79	42.42	74.63	54.74	47.74
대학 부설기관·협회·단체·연구소 등	24.06	6.59	16.90	25.37	20.71	22.33
복지관, 구청	6.41	11.89	10.12	0.00	2.74	3.58
여성인력개발센터	0.00	0.00	0.00	0.00	0.00	0.65
통신교육기관	0.00	0.00	0.00	0.00	4.06	1.66
기타	4.45	24.67	0.00	0.00	3.84	4.8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Ⅲ-26> 교육훈련의 비용부담자

(단위: %)

비용부담자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본인부담	13.40	46.53	22.34	34.42	13.89	16.60
부모님이나 가족·친지	0.00	0.00	0.00	0.00	1.54	4.11
다니는 회사에서 부담	55.05	53.47	52.34	0.00	66.48	52.45
정부에서 부담	26.59	0.00	25.32	40.22	14.09	21.83
기타	4.96	0.00	0.00	25.37	3.99	5.0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Ⅲ-27> 여성근로빈곤인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

가구원 수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인 가구	4.36	8.10	2.20	8.87	5.41	5.09	5.22	5.52
2인 가구	16.77	20.71	20.66	19.56	9.70	9.24	10.63	10.76
3인 가구	24.30	22.60	15.89	15.74	21.57	19.33	21.61	19.54
4인 가구	37.15	32.05	37.21	34.44	47.47	44.16	46.30	42.60
5인 가구	13.44	13.98	19.08	15.89	13.31	17.93	13.51	17.46
6인 가구	3.97	2.57	4.96	5.49	2.54	4.25	2.73	4.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Ⅲ-28> 여성근로가구의 고령자 현황

연령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1-55세	119118	17.40	51763	22.91	1227029	23.01	1397909	22.39
56-60세	97910	14.30	24423	10.81	865468	16.23	987802	15.82
61-65세	110399	16.13	41810	18.51	523467	9.82	675677	10.82
66세 이상	212481	31.04	45455	20.12	706306	13.24	964242	15.44
근로하는 여성이 속한 가구 수	684566	100	225916	100	5332670	100	6243152	100

<부표 Ⅲ-29> 여성근로가구의 입주형태

입주형태	빈곤		차상위		비빈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가	377059	55.08	116942	51.76	3478684	65.23	3972686	63.63
전세	102206	14.93	53829	23.83	1188999	22.30	1345034	21.54
월세	143091	20.90	41797	18.50	502314	9.42	687202	11.01
기타	62209	9.09	13347	5.91	162673	3.05	238320	3.82
합계	684566	100	225916	100	5332670	100	6243152	100

*주: 기타에는 부모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혹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처럼 주거의 형태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부표 IV-1〉 Type3 및 Type4의 전환시점 별 분포

(단위: %)

전 환시점	여성		남성	
	Type3	Type4	Type3	Type4
2000	26.21	25.64	39.64	12.93
2001	21.63	16.89	26.13	11.64
2002	22.39	16.62	12.61	12.07
2003	16.28	18.50	11.26	21.12
2004	13.49	21.45	10.36	42.24
합계	100	100	100	100

〈부표 IV-2〉 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3〉 19세 이상 남녀의 연령별 유형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4> Type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현황

(단위: %)

[illegible]

<부표 IV-5> 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혼인상태	Type1		Type3		Type4		Type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상용직	39.68	48.83	35.66	46.55	43.77	57.21	48.29	48.80
임시직	4.84	2.18	15.28	6.90	18.32	9.91	19.94	7.60
일용직	5.88	7.44	11.26	10.34	12.21	10.36	9.35	17.20
고용주/ 자영업자	24.34	40.18	19.03	32.76	12.21	18.47	12.46	24.80
무급가족종 사자	25.26	1.37	18.23	3.45	13.49	2.70	9.97	1.6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Type5는 결측치를 제외한 집단에서의 비율임.

<부표 IV-6> 19세 이상 남녀의 종사상지위별 유형분포

(단위: %)

유형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Type1	여성	42.79	17.87	29.82	57.03	59.19
	남성	70.50	40.00	59.09	79.68	57.14
Type3	여성	16.54	24.26	24.56	19.19	18.28
	남성	8.93	16.84	8.63	19.05	19.05
Type4	여성	21.39	30.64	28.07	12.97	14.25
	남성	10.50	23.16	10.45	4.65	14.29
Type5	여성	19.28	27.23	17.54	10.81	8.60
	남성	10.08	20.00	19.55	7.04	9.52
합계	여성	100	100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100	100

* 주: 유형2는 모든 연도에 대하여 취업자가 없으므로 제외

<부표 IV-7> 유형5의 7차년도 이외의 연도별 종사상지위분포

(단위: %)

	7차년도		6차년도		5차년도		4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상용직	24.80	33.61	24.16	33.88	26.24	32.78	23.84	31.96	20.96	31.13	19.84	36.64
임시직	10.24	5.23	9.12	5.23	10.24	5.51	10.08	4.96	8.64	4.41	9.12	8.26
일용직	4.80	11.85	6.24	9.09	6.40	9.92	5.60	7.44	5.12	7.99	6.56	6.34
고용주/ 자영업자	6.40	17.08	6.88	11.29	6.88	14.60	6.24	12.67	5.60	12.40	6.88	15.98
무급가족 종사자	5.12	1.10	4.64	1.65	5.76	1.38	5.12	0.55	4.96	1.10	5.12	0.55
결측치	48.64	31.13	48.96	38.84	44.48	35.81	49.12	42.42	54.72	42.97	52.48	32.2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결측치의 숫자는 대부분 각 해당연도에 비취업자로 분류된 경우임.

<부표 IV-8> 주된 일자리의 종업원 수

(단위: %)

	Type1		Type3		Type4		Type5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명	5.36	7.03	15.87	17.02	15.07	10.34	15.38	10.00
10-29명	10.71	11.18	15.87	12.77	15.07	13.79	20.51	20.00
30-49명	8.93	5.43	6.35	10.64	8.22	17.24	15.38	12.50
50-69명	6.25	8.95	6.35	4.26	5.48	6.90	2.56	7.50
70-99명	6.25	3.51	4.76	4.26	4.11	0	5.13	7.50
100-299명	10.71	11.50	15.87	17.02	5.48	10.34	10.26	7.50
300-499명	4.46	3.83	3.17	4.26	2.74	8.62	5.13	7.50
500-999명	6.25	4.47	9.52	6.38	8.22	8.62	2.56	10.00
1000명 이상	41.07	44.09	22.22	23.40	35.62	24.14	23.08	17.5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Type5의 결측치는 7차년도에 비취업자인 경우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2) 결측치를 제외한 분석임

〈부표 IV-9〉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10〉 연령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변화유형 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1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현황

(단위: %)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무학	53.38	24.66	4.68	0.52	15.97	3.33	18.18	3.03	27.84	6.15	10.85	2.07	21.80	8.97
초등학교	34.59	42.47	14.34	7.61	25.10	18.57	23.08	18.18	39.18	27.69	25.51	16.90	36.09	24.22
중학교	6.77	16.44	16.39	13.61	18.25	20.00	17.48	12.12	10.31	20.00	18.48	19.66	17.29	23.32
고등학교	3.76	12.33	38.06	41.10	30.42	40.00	31.47	49.49	17.53	35.38	32.26	41.38	18.42	30.94
전문대	0.75	0.00	10.30	8.52	5.32	5.71	2.10	3.03	0.00	3.08	6.16	7.93	2.26	3.59
4년제대학이상	0.75	4.11	16.22	28.65	4.94	12.38	7.69	14.14	5.15	7.69	6.74	12.07	4.14	8.9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12>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학력별 빈곤변화유형분포

(단위: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대학 이상
Ptype1	여성	20.82	7.53	1.87	0.52	0.45	0.29
	남성	27.27	9.48	3.01	0.91	0.00	0.55
Ptype2	여성	23.46	40.10	58.21	67.99	79.64	81.23
	남성	12.12	36.09	52.88	64.28	73.33	81.17
Ptype3	여성	12.32	10.80	9.98	8.37	6.33	3.81
	남성	10.61	11.93	10.53	8.48	6.67	4.75
Ptype4	여성	7.62	5.40	5.20	4.71	1.36	3.23
	남성	4.55	5.50	3.01	4.94	1.67	2.56
Ptype5	여성	7.92	6.22	2.08	1.78	0.00	1.47
	남성	6.06	5.50	3.26	2.32	1.11	0.91
Ptype6	여성	10.85	14.24	13.10	11.51	9.50	6.74
	남성	9.09	14.98	14.29	12.11	12.78	6.40
Ptype7	여성	17.01	15.71	9.56	5.13	2.71	3.23
	남성	30.30	16.51	13.03	6.96	4.44	3.66
합계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13>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분포

(단위: %)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혼	1.50	15.07	11.71	10.52	7.60	10.48	6.29	11.11	3.09	6.15	7.04	13.79	6.02	12.56
유배우	39.85	71.23	78.51	86.19	66.16	84.76	61.54	80.81	57.73	84.62	70.97	80.69	63.91	76.68
사별 혹은 이혼	58.65	13.70	9.78	3.29	26.24	4.76	32.17	8.08	39.18	9.23	21.99	5.52	30.08	10.7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14> 혼인상태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변화유형 분포

(단위: %)

		미혼	유배우	사별 혹은 이혼
Ptype1	여성	0.73	2.50	14.10
	남성	3.94	2.47	8.00
Ptype2	여성	72.99	63.14	30.20
	남성	58.42	63.44	40.80
Ptype3	여성	7.30	8.19	12.48
	남성	7.89	8.45	8.00
Ptype4	여성	3.28	4.14	8.32
	남성	3.94	3.80	6.40
Ptype5	여성	1.09	2.64	6.87
	남성	1.43	2.61	4.80
Ptype6	여성	8.76	11.39	13.56
	남성	14.34	11.11	12.80
Ptype7	여성	5.84	8.00	14.47
	남성	10.04	8.12	19.20
합계	여성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부표 IV-15〉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가구규모 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16〉 가구 내 19세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수의 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17〉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생활비 규모

(단위: %, 만원)

소득 대비 생활비 규모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0.5미만	1.50	2.74	23.71	23.87	15.21	18.10	0.70	0	1.03	0	13.49	16.55	8.65	12.11
0.5이상 1미만	38.35	36.99	62.24	62.84	64.64	59.52	18.18	20.20	28.87	33.85	66.57	62.07	47.37	45.29
1이상 1.5미만	37.59	30.14	11.53	10.97	18.63	20.00	27.27	28.28	26.80	24.62	17.30	17.93	25.94	23.77
1.5이상 2이하	6.77	13.70	1.99	1.81	0.76	1.43	11.19	9.09	21.65	23.08	2.35	2.76	8.27	7.62
2이상 3이하	7.52	8.22	0.29	0.39	0.76	0.95	17.48	19.19	6.19	7.69	0.29	0.69	4.89	4.48
3이상	8.27	8.22	0.23	0.13	0	0	25.17	23.23	15.46	10.77	0	0	4.89	6.73
생활비 월평균값(A)	38.8	45.7	214.6	208.4	143.8	154.9	88.6	101.6	83.2	87.5	151.6	151.6	96.3	99.3
소득 월평균값(B)	34.8	42.6	350.1	340.8	198.6	214	48.1	57	50.4	56.8	223.6	218.6	123.2	138.8
A/B의 월평균값	1.6	1.45	0.71	0.71	0.78	0.79	4.71	3.7	7.7	5.51	0.79	0.79	2.03	1.46

* 주: 1) 7차년도의 사항을 본 것이고 생활비나 소득에 대한 결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생활비(A)와 소득(B)은 만원단위.

〈부표 IV-18〉 Type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현황

(단위: %)

[illegible]

<부표 IV-19>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빈곤계층별 유형분포

(단위: %)

유형		빈곤	차상위	비빈곤
Type1	여성	14.84	23.91	28.06
	남성	28.11	48.60	67.30
Type2	여성	47.05	34.78	30.40
	남성	32.59	7.48	7.26
Type3	여성	12.82	11.59	10.53
	남성	17.16	12.15	6.17
Type4	여성	6.75	7.97	12.87
	남성	4.73	8.41	8.17
Type5	여성	18.55	21.74	18.14
	남성	17.41	23.36	11.09
합계	여성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부표 IV-20>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주된 평소활동

(단위: %)

주된 평소활동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주로 일을 하고 있음	17.29	30.14	43.15	85.74	38.02	76.67	28.67	50.51	20.62	44.62	44.87	80.65	35.71	55.16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3.01	0.08	7.08	0.58	11.79	0.95	5.59	0	12.37	0	8.50	0.46	8.65	0.45
가사를 돌보고 있음	34.59	0.08	38.17	0.71	17.49	0.48	27.27	1.01	32.99	0	26.39	0.46	33.08	1.79
어린이를 돌보고 있음	0.75	0	2.69	0.13	1.14	0	1.40	0	2.06	0	2.93	0	2.26	0.45
통학만 하고 있음	0	0	0.70	0.39	2.66	4.76	0	2.02	0	0	1.47	0.46	0	0.45
아무일도 하지 않음	44.36	63.01	7.55	11.81	11.03	11.90	27.97	43.43	31.96	55.38	14.96	17.51	19.55	40.36
기타	0	1.37	0.64	0.65	17.87	5.24	9.09	3.03	0	0	0.88	0.46	0.75	1.3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1) 기타에는 주로 통학을 하며 일을 하는 경우, 가사 및 통학이외의 일을 하며 일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음

<부표 IV-21> 빈곤변화유형별 남녀 19세 이상 인구의 종사상지위상태 분포

(단위: %)

종사상 지위	Ptype1		Ptype2		Ptype3		Ptype4		Ptype5		Ptype6		Ptype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상용직	3.01	0	25.59	50.77	16.35	26.67	6.99	12.12	9.57	13.85	18.48	31.14	11.28	13.45
임시직	1.50	1.37	4.68	2.32	6.84	6.67	6.29	2.12	4.26	1.54	3.23	2.56	4.51	3.59
일용직	5.26	8.22	2.34	4.84	9.13	17.62	2.80	5.05	7.45	4.62	4.40	9.52	5.64	7.62
고용주 및 자영업자	6.77	19.18	83.55	27.42	12.55	25.54	11.89	30.30	7.45	26.15	11.14	31.87	9.40	29.60
무급가족 종사자	3.76	2.74	8.61	0.97	9.51	1.90	9.09	1.01	7.45	3.08	12.02	1.83	12.78	1.35
비취업자	79.70	68.49	50.23	13.68	45.63	21.90	62.94	49.49	63.83	50.77	50.73	23.08	56.39	44.3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22> 성별 빈곤 경험 횟수

(단위: %)

빈곤횟수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0	1708	57.88	1550	61.75
1	464	15.72	404	16.10
2	261	8.84	221	8.80
3	172	5.83	136	5.42
4	118	4.00	76	3.03
5	95	3.22	50	1.89
6	133	4.51	73	2.91
합계	2951	100	2510	100

* 주: 2차에서 7차까지 관측치가 모두 있는 개인id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표 IV-23〉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연령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24〉 연령 집단 내에서의 빈곤경험 횟수 분포

(단위: %)

[illegible]

<부표 IV-25>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학력분포

(단위: %)

povnum : 빈곤횟수	povnum=0		povnum=1		povnum=2		povnum=3		povnum=4		povnum=5		povnum=6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무학	4.68	0.52	8.84	1.73	14.94	4.52	22.67	2.94	28.81	15.79	38.95	14.00	53.38	24.66
초등학교	14.34	7.61	21.77	13.61	34.10	20.81	31.98	30.15	37.29	23.68	32.63	36.00	34.59	42.47
중학교	16.39	13.61	19.40	18.07	18.39	21.72	13.95	18.38	15.25	26.32	12.63	20.00	6.77	16.44
고등학교	38.06	41.10	35.13	45.05	23.37	40.72	25.58	30.88	16.95	22.37	13.68	28.00	3.76	12.33
전문대	10.30	8.52	6.25	7.18	3.45	4.07	2.91	5.88	0.00	2.63	1.05	0.00	0.75	0.00
4년제 대학이상	16.22	28.65	8.62	14.36	5.75	8.14	2.91	11.76	1.69	9.21	1.05	2.00	0.75	4.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26> 학력집단 내에서의 빈곤경험 횟수의 분포

(단위: %)

povnum : 빈곤횟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이상
povnum=0	여성	23.46	40.10	58.21	67.99	79.64	81.23
	남성	12.12	36.09	52.88	64.28	73.33	81.17
povnum=1	여성	12.02	16.53	18.71	17.05	13.12	11.73
	남성	10.61	16.82	18.30	18.37	16.11	10.60
povnum=2	여성	11.44	14.57	9.98	6.38	4.07	4.40
	남성	15.15	14.07	12.03	9.08	5.00	3.29
povnum=3	여성	11.44	9.00	4.99	4.60	2.26	1.47
	남성	6.06	12.54	6.27	4.24	4.44	2.93
povnum=4	여성	9.97	7.20	3.74	2.09	0.00	0.59
	남성	18.18	5.50	5.01	1.72	1.11	1.28
povnum=5	여성	10.85	5.07	2.49	1.36	0.45	0.29
	남성	10.61	5.50	2.51	1.41	0.00	0.18
povnum=6	여성	20.82	7.53	1.87	0.52	0.45	0.29
	남성	27.27	9.48	3.01	0.91	0.00	0.55
합계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27> 빈곤경험횟수에 따른 혼인상태분포

(단위: %)

povnum : 빈곤횟수	povnum=0		povnum=1		povnum=2		povnum=3		povnum=4		povnum=5		povnum=6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혼	11.71	10.52	8.41	13.12	6.90	11.31	4.07	12.50	4.24	11.84	3.16	2.00	1.50	15.07
유배우	78.51	86.19	71.77	81.68	67.82	81.00	63.95	80.88	53.39	75.00	49.47	84.00	39.85	71.23
사별 혹은 이혼	9.78	3.29	19.83	5.20	25.29	7.69	31.98	6.62	42.37	13.16	47.37	14.00	58.65	13.7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부표 IV-28> 혼인상태별 빈곤경험횟수의 분포

(단위: %)

povnum : 빈곤횟수		미혼	유배우	사별 혹은 이혼
povnum=0	여성	72.99	63.14	30.20
	남성	58.42	63.44	40.80
povnum=1	여성	14.23	15.68	16.64
	남성	19.00	15.67	16.80
povnum=2	여성	6.57	8.33	11.93
	남성	8.96	8.50	13.60
povnum=3	여성	2.55	5.18	9.95
	남성	6.09	5.22	7.20
povnum=4	여성	1.82	2.97	9.04
	남성	3.23	2.71	8.00
povnum=5	여성	1.09	2.21	8.14
	남성	0.36	1.99	5.60
povnum=6	여성	0.73	2.50	14.10
	남성	3.94	2.47	8.00
합계	여성	100	100	100
	남성	100	100	100

2006 연구보고서-6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2275-5326 (代)

<정가 8,500원>

ISBN 978-89-8491-172-7 93330